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6. 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목 차

Ⅰ. 감사목적 ····· 1

Ⅱ. 감사기간(총 22일) ····· 1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55개 기관) ····· 2

Ⅳ. 감사실시 경과 ····· 3

1. 감사반 편성 ····· 3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4
3. 기관별 서류제출요구 현황 ····· 5
4. 일반증인·참고인 출석 현황 ····· 7

Ⅴ. 주요 감사실시 내용 ····· 13

1. 산업통상자원부 ····· 13
2. 중소기업청 ····· 41
3. 특허청 ····· 52
4. 한국전력공사 ····· 56
5. 한국수력원자력 ····· 72
6.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 82
7. 한국가스공사 ····· 91
8. 한국석유공사 ····· 95
9. 한국지역난방공사 ····· 100

10. 대한석탄공사 ····· 101
11. 한국광물자원공사 ····· 102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05
13. 한국무역보험공사 ····· 109
14. 한국전기안전공사 ····· 113
15. 한국가스안전공사 ····· 115
16. 한국에너지공단 ····· 118
17. 한국전력거래소 ····· 120
18. 한국광해관리공단 ····· 121
1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122
20. 한국석유관리원 ····· 123
2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124
22. 한국산업단지공단 ····· 125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29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30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32
26. 한국디자인진흥원 ····· 133
27. 한국세라믹기술원 ····· 134
28. 한국전력기술 ····· 135
29. 한국가스기술공사 ····· 135
30. 한전KDN ····· 136
31. 한전KPS ····· 137
32. 한전원자력연료 ····· 139
33. 기초전력연구원 ····· 139

34. 강원랜드 ····· 140
35.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143
36. 전략물자관리원 ····· 143
3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143
3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144
39.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145
40. 중소기업진흥공단 ····· 145
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46
4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47
4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47
44. 창업진흥원 ····· 147
45.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 148
46. 중소기업유통센터 ····· 148
47. 중소기업연구원 ····· 149
48. 한국발명진흥회 ····· 149
49. 한국특허정보원 ····· 150

Ⅵ.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151

1. 산업통상자원부 ····· 151
2. 중소기업청 ····· 165
3. 특허청 ····· 172
4. 한국전력공사 ····· 173
5. 한국수력원자력 ····· 175

6.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 177
7. 한국가스공사 ····· 178
8. 한국석유공사 ····· 181
9. 한국지역난방공사 ····· 185
10. 대한석탄공사 ····· 186
11. 한국광물자원공사 ····· 187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88
13. 한국무역보험공사 ····· 190
14. 한국전기안전공사 ····· 192
15. 한국가스안전공사 ····· 193
16. 한국에너지공단 ····· 195
17. 한국전력거래소 ····· 196
18. 한국광해관리공단 ····· 197
1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198
20. 한국석유관리원 ····· 198
2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200
22. 한국산업단지공단 ····· 200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202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3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4
26. 한국디자인진흥원 ····· 205
27. 한국세라믹기술원 ····· 206
28. 한국전력기술 ····· 207
29. 한국가스기술공사 ····· 207

30. 한전KDN ····· 208
31. 한전KPS ····· 208
32. 한전원자력연료 ····· 208
33. 기초전력연구원 ····· 209
34. 강원랜드 ····· 209
35.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212
36. 전략물자관리원 ····· 212
3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212
3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212
39.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213
40. 중소기업진흥공단 ····· 213
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14
4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14
4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214
44. 창업진흥원 ····· 215
45.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 215
46. 중소기업유통센터 ····· 215
47. 중소기업연구원 ····· 215
48. 한국발명진흥회 ····· 216
49. 한국특허정보원 ····· 216

Ⅶ. 특기사항 ····· 217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6. 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소관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감사목적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함.

Ⅱ. 감사기간(총 22일)

1차 : 2015년 9월 10일(목) ~ 9월 23일(수)

2차 : 2015년 10월 1일(목) ~ 10월 8일(목)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55개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전KPS
중소기업청	한전KDN
특 허 청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공사	기초전력연구원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중부발전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서부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부발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동서발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광물자원공사	창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중소기업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 없음

Ⅳ. 감사실시 경과

1. 감사반 편성

<table>
<tr><td>감
사
위
원</td><td colspan="2">◇ 위원장 :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 위　원 : 이진복(새누리당)　　◇ 위　원 : 홍영표(새정치민주연합)
길정우(　〃　)　　박완주(　〃　)
김동완(　〃　)　　백재현(　〃　)
김상훈(　〃　)　　부좌현(　〃　)
김종훈(　〃　)　　오영식(　〃　)
김한표(　〃　)　　이원욱(　〃　)
여상규(　〃　)　　전순옥(　〃　)
이강후(　〃　)　　전정희(　〃　)
이정현(　〃　)　　조경태(　〃　)
이채익(　〃　)　　주승용(　〃　)
이현재(　〃　)　　추미애(　〃　)
張倫碩(　〃　)　　홍익표(　〃　)
전하진(　〃　)　　김제남(정 의 당)
정수성(　〃　)
홍지만(　〃　)　　(30인)
황우여(　〃　)</td></tr>
<tr><td>사
무
보
조
자</td><td>◇ 위원회 직원(14인)
-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전문위원　송대호
- 입법조사관　장영환
-　〃　김소정
-　〃　남궁인철
-　〃　임준기
-　〃　서재만
-　〃　황영준
-　〃　서호진
-　〃　황준연
-　〃　한예슬
- 입법조사관보　서정욱
-　〃　임주형</td><td>◇ 의원보좌관(30인)

◇ 정책연구위원
- 새 누 리 당 : 강윤미(2급상당), 이준호(4급상당)
- 새정치민주연합 : 송기복(1급상당), 윤종석(4급상당)

◇ 속기주무관
- 박정현, 유희정, 신동선, 김영대, 김진주</td></tr>
</table>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고
9.10(목)	10:00	산업통상자원부	세종	
9.11(금)		자료정리		
9.14(월)	10:0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국회	
9.15(화)	10:00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국회	
9.16(수)		자료정리		
9.17(목)	10:00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국회	
9.18(금)	11:00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KPS 한전KDN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나주	
		현장시찰	한전본사 내 전력사이버 안전센터	
9.21(월)	10:00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국회	
9.22(화)	10:00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청주	
		현장시찰	오송생명 과학산단, 오송산단 개발현장 등	
9.23(수)		자료정리		
10.1(목)		자료정리		
10.2(금)	09:00	현장시찰	1반 : 원주 2반 : 광명·천안	
10.5(월)	10: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국회	
10.6(화)	10:00	종합국감 Ⅰ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10.8(목)	10:00	종합국감 Ⅱ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회	

3. 기관별 서류제출요구 현황

감 사 대 상 기 관	요구건수	비 고
산업통상자원부	1,057	
중소기업청	636	
특허청	548	
한국전력공사	800	
한국가스공사	665	
한국석유공사	669	
한국지역난방공사	459	
한국수력원자력(주)	765	
한국남동발전(주)	641	
한국중부발전(주)	667	
한국서부발전(주)	667	
한국남부발전(주)	654	
한국동서발전(주)	642	
대한석탄공사	629	
한국광물자원공사	6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09	
한국무역보험공사	491	
한국전기안전공사	585	
한국가스안전공사	539	
한국에너지공단	606	
한국전력거래소	586	
한국광해관리공단	61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86	
한국석유관리원	52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524	
한국산업단지공단	58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7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44	

감 사 대 상 기 관	요구건수	비 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86	
한국디자인진흥원	449	
한국세라믹기술원	444	
한국전력기술(주)	590	
한국가스기술공사	521	
한전KDN(주)	537	
한전KPS(주)	586	
한전원자력연료(주)	518	
기초전력연구원	515	
㈜강원랜드	64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434	
전략물자관리원	47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51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463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473	
중소기업진흥공단	47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7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1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31	
창업진흥원	407	
한국벤처투자	547	
중소기업유통센터	533	
중소기업연구원	313	
한국발명진흥회	504	
한국특허정보원	48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87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508	
합 계	30,636	

4. 일반증인·참고인 출석 현황

(1) 증 인 : 66인(출석 58인, 불출석 8인)

출석일/ 피감기관	성 명	직 책	출석여부	신 문 요 지
9.10 산업통상자원부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	출석	대형유통점의 진출과 전통시장 보호 및 상생 관련 사모펀드로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홈플러스 2만6천여명 근로자의 고용 문제, 2500여개 협력업체 안정성 등) 관련 대책, 과도하게 책정된 로열티로 한국 세금 과소 납부 문제 등
	김영창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교수	출석	지난 수십 년간 최적의 설비계획 값 산출을 위해 사용된 전산모형(와습)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증인에게 조작의 근거를 신문
	하라노 다케시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 코리아(주) 사장	출석	OECD가이드라인 위반 관련 아사히글라스 한국NCP 진정 건 질의
	홍두승	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출석	공론화 없는 공론화위원회 및 지역의견 배제 공론화위원회의 불투명한 예산집행
	김용근	한국자동차 산업협회회장	출석	서울모터쇼 운영 실태 및 업계 로비 활동 관련
	이태경	에브리데이 리테일 대표이사	출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중 사업조정 제도 편법 회피 관련
	박영배	코엑스몰 사장	출석	한국무역협회 운영 코엑스몰의 임차인에 대한 과다 임대료 문제
	전인수	하이디스 대표이사	출석	하이디스 공장폐쇄 및 정리해고 관련
	황선복	삼진공작(주) 대표이사	출석	발전소 건립 공사 중 공사비의 증가 원인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전문 시공업체의 도산위기 해결방안
	김기영	성창이앤씨(주) 대표이사	출석	발전소 건립 공사 중 공사비의 증가 원인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전문 시공업체의 도산위기 해결방안
9.14 중소기업청 등	황종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출석	판로지원법 관련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출석	중소기업중앙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질의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	출석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공정성 확보 관련 - 소셜커머스 업체의 업체 간 출혈경쟁을 이용한 입점업체 쥐어짜기, 밀어내기 방식 등 중소상인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의 수익성 개선 문제와 오픈마켓 전환 선언 시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이사	출석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공정성 확보 관련 - 소셜커머스 업체의 업체 간 출혈경쟁을 이용한 입점업체 쥐어짜기, 밀어내기 방식 등 중소상인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의 수익성 개선 문제와 오픈마켓 전환 선언 시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
	김범석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부사장 대리출석)	출석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공정성 확보 관련 - 소셜커머스 업체의 업체 간 출혈경쟁을 이용한 입점업체 쥐어짜기, 밀어내기 방식 등 중소상인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의 수익성 개선 문제와 오픈마켓 전환 선언 시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
	강명구	신세계 사이먼 대표	출석	백화점, 아울렛, 편의점, 슈퍼 등 유통업계의 사회공헌도 제고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 관련 대형유통업체의 복합쇼핑몰, 임의가맹점, 드럭스토어 등 영업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및 상생협약의 준수 여부
	박재구	편의점협회장(BGF리테일)	출석	백화점, 아울렛, 편의점, 슈퍼 등 유통업계의 사회공헌도 제고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 관련 대형유통업체의 복합쇼핑몰, 임의가맹점, 드럭스토어 등 영업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및 상생협약의 준수 여부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이마트)	출석	백화점, 아울렛, 편의점, 슈퍼 등 유통업계의 사회공헌도 제고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 관련 대형유통업체의 복합쇼핑몰, 임의가맹점, 드럭스토어 등 영업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및 상생협약의 준수 여부
	노일식	롯데리아(주) 대표이사	출석	한식뷔페 관련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질의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	출석	한식뷔페 관련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질의
	권오금	한국차양산업협회 회장	출석	소상공인연합회 통합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 현황 청취
	홍완훈	삼성전기주식회사 부사장	출석	공동제품 개발 후 일방적 사업중단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관련
	이영필	㈜아임쇼핑 대표이사	출석	준비부족 방송오픈 이유와 비전문가 임원진 구성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의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출석	일몰 및 신규 적합업종 지정과정에서중소기업의 이해 관계 반영 등
	김종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출석	사적 책출판, 강연비 등 최근 논란 및 일몰 및 신규 적합업종 지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이해 관계 반영 등

	배명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이사장	출석	전경련의 적합업종 등 동반성장에 대한 입장 및 출연 약속 이행 여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불출석	소상공인연합회 통합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 현황 청취
9.15 특허청 등	김연배	이랜드 대표이사	출석	중소기업 디자인 도용
9.17 한국수력원자력 등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출석	선박비파괴 검사의 제도개선 관련,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주민수용성 신고리 3호기 다중호기 안전성 및 중대사고 대비 해외부품 시험성적서 검증 여부
	박흥실	한국발전교육원 원장	출석	발전교육원 비리 및 (내부)감사 축소 의혹
	김양호	강원도 삼척시장	출석	정부의 삼척(대진)원전 건설에 관한 질의
	이희진	경상북도 영덕군수	출석	정부의 영덕(천지)원전 건설에 관한 질의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출석	한빛 원전의 반복적인 가동 중단 사태 원인 분석, 기술능력 부족에 의한 총체적인 품질관리 부실문제 관련 신문
	윤덕호	㈜액트알엠티 대표	불출석	한국수력원자력 용역입찰 과정의 불공정 관련
9.18 한국전력공사 등	윤재민	LS전선 대표이사	출석	제주해저케이블 관련, 한전 입찰계약건
9.21 한국가스공사 등	이철우	충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출석	석유공사의 석유개발 투자기준(매장량 과다 인정범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문
	이춘성	전 석유공사 비상임이사	출석	하베스트 상하류 인수시 이사회 역할 신문
	안성은	도이치방크 한국 대표	출석	하베스트, 다나 등 고가인수 자문의 타당성 및 부정 성공보수 수수 관련
	김형찬	전 메릴린치 한국 상무	출석	하베스트, 다나 등 고가인수 자문의 타당성 및 부정 성공보수 수수 관련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출석	웨스트컷, 혼리버 등 부실자산 인수 및 사업실패 책임 관련
	고정식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출석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부실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출석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부실
	강천구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	출석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부실
	공봉성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	출석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부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불출석	하베스트 등 부실자산 인수경위 관련 질의
	박완규	전 석유공사 비상임이사	불출석	하베스트 상하류 인수시 이사회 역할 신문
10.5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등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 맞춤식 그룹벌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 용역' 국정원 개입의혹
	박형준	그린미디어 대표	출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 맞춤식 그룹벌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 용역' 국정원 개입의혹
	박재희	KTL중소기업 해외정보 지원사업 프로젝트 직원	출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 맞춤식 그룹벌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 용역' 국정원 개입의혹

	장은영	KTL중소기업 해외정보 지원사업 프로젝트 직원	불출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 맞춤식 그롤벌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 용역' 국정원 개입의혹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불출석	실적 부풀리기, 임기 종료 후 사무실 등 특혜 제공
10.6 종합감사 (산업통상자원부)	조영조	농협유통 대표이사	출석	15년 6월 30일 발표한 2014년 총 132개 기업의 동반성장결과 최하 등급인 '보통' 등급을 받은 업체이므로 왜 해당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못했는지 확인 및 대안 마련 촉구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출석	15년 6월 30일 발표한 2014년 총 132개 기업의 동반성장결과 최하 등급인 '보통' 등급을 받은 업체이므로 왜 해당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못했는지 확인 및 대안 마련 촉구
	백수현	오뚜기 상무	출석	15년 6월 30일 발표한 2014년 총 132개 기업의 동반성장결과 최하 등급인 '보통' 등급을 받은 업체이므로 왜 해당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못했는지 확인 및 대안 마련 촉구
	김민호	LF네트웍스 대표이사	출석	광양 LF 아울렛 건설로 인한 순천지역상권피해
	오인환	포스코 부사장	출석	포스코 발생 여재 슬라브, 특정 선재업체(코스틸) 독점공급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기업에 적시 공급 어려움, 중소기업 피해 확인 및 포스코, 코스틸간 유착으로 인한 비자금 조성 의혹
	이호선	코오롱베니트 대표이사	출석	내부일감 몰아주기 관련 - 엠오디(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운영사, 회장부자 지분 50%) - 코오롱베니트(컴퓨터시스템 서비스업체, 회장지분 49%) - 코오롱환경서비스(폐기물처리업체, 회장지분 40%) - 회장일가 개인의 주요 지분회사에 일감몰아주기 행태 심각
	박영배	코엑스몰 사장	출석	코엑스몰 임대차 상인에 대한 무역협회의 갑질 산업부의 감사 결과 코엑스몰 임대차 관리 부실 지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개선 미흡 산업부의 2013년 감사결과 무역협회의 과다한 법인카드 사용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자료 미제출 ※ 산업부 감사 결과 : 무역협회의 정규직원(287명)에 비하여 과다한 법인카드(263장)를 사용하고 있음

	박승구	현 메릴린치 지점장	출석	강영원 공소장에 따르면, 메릴린치의 자산가치평가가 신뢰하기 어렵고 자산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함. 이에 대해 메릴린치가 투자자문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질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불출석	C&M 인수 후 대규모 해고사태에 비춰본 홈플러스 2만6천명 직원고용문제, 2천개 협력업체 안정성 문제, 재매각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 등
10.8 종합감사 (중소기업청, 특허청)	김연배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	출석	동반성장지수 2년 연속 최하위 중소기업 및 개인 디자이너 디자인 도용, 짝퉁 제품 발주 건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사장	출석	방판특약점주에게 갑질로 688억의 피해를 입힌 이유와 후속대책
	임상민	㈜ 대상 상무	출석	식자재 유통 상생방안
	김범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출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시 인사비리 관련의 건
	김창권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	출석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 출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 및 지역상인과의 상생대책
	박철규	재단법인 K-밸리 이사장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불출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시 인사비리 관련의 건

(2) 참고인 : 15인(출석 15인, 불출석 0인)

출석일시	성 명	직 책	출석여부	신 문 요 지
9.10 산업통상자원부	진중하	한국베어링공업협회 상근 부회장	출석	국내 베어링 산업 방향과 방안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출석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변화, 통일 대비 북한 전력시장 관련
	김용담	㈜ 정풍개발 전문경영인	출석	발전소 건립 공사 중 공사비의 증가 원인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전문 시공업체의 도산위기 해결방안
	김건	GS네오텍(주) 전력사업부문장	출석	발전소 건립 공사 중 공사비의 증가 원인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전문 시공업체의 도산위기 해결방안
	김홍현	삼진공작(주) 상무이사	출석	발전소 건립 공사 중 공사비의 증가 원인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전문 시공업체의 도산위기 해결방안
	임태인	성창E&C 주식회사 부사장	출석	발전소 건립 공사 중 공사비의 증가 원인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전문 시공업체의 도산위기 해결방안
9.14 중소기업청 등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장	출석	판로지원법 관련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	출석	외식업 골목상권 실태에 관한 질의
9.17 한국수력원자력 등	구사무엘	정보보안전문가 (화이트해커)	출석	한수원 보안관리 실태 및 대기업 사례로 본 해킹에 의한 자료유출
9.18 한국전력공사 등	안병수	밀양주민	출석	밀양송전탑 건설 관련 마을보상금으로 인한 공동체 분열과 한전의 행태 지적
10.6 종합감사 (산업통상자원부)	이봉승	서울주얼리산업 협동조합 이사장	출석	한중FTA로 인한 업계의 피해 관련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 대표	출석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 부실
	김명락	코엑스몰 상인연합회장	출석	코엑스몰 임대차 상인에 대한 무역협회(코엑스몰)의 갑질 증언
10.8 종합감사 (중소기업청, 특허청)	조중목	인천도소매생활유통 사업협동조합장	출석	식자재 유통관련 상생방안
	인태연	중소상인연합회 상임대표	출석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 출점으로 인한 지역 상권 붕괴 실태 증언

Ⅴ. 주요 감사실시 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기획조정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 출장 비용은 연간 1,000억 원 규모 - 일부 공공기관은 해외 출장 비용을 기업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출장보고서가 허위작성되는 등의 문제 - 에너지공기업 직원들이 여비규정을 어기고 비즈니스클래스를 이용하는 등의 문제 ○산업통상자원부 공직기강 관련 - 형사처분 통보 받은 직원의 42%를 불문경고하는 등 솜방망이 징계하는 문제 ○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집행되어야 하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 ○공기업 부채 관련 -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부채중점관리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은 11개이며, 이들 기관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오히려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 - 소관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므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 ○공기업 출자 회사 관련 - 공기업 출자회사 중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 - 공기업에 근무하다 퇴직하여 출자회사로 재취업하는 문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관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수립 이후 신규로 지정된 10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 - 소관 공기업의 지방이전 과정에서 과도하게 사택을 구입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후 기존 청사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과다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용도변경 등을 추진할 필요 - 공기업의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지역은행을 이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문제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관련 -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전문대학 졸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방식의 채용 확대 필요 -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고,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4% 수준에 불과한 문제 -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실적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채용 기준(매년 정원의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관련 -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용역 근로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과업지시서, 노동자 권리 제약 등의 문제 - 용역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으나 실제 적용사례는 45%에 불과한 문제 ○기타 공공기관 관련 - 건설사업을 다수 발주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나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 예방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불법 하도급이 빈발하고 있는 문제 -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 퇴직자의 주된 재취업경로라는 지적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모바일 앱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발한 7개 앱 중 5개가 폐기되었고, 다운로드 횟수는 450회에 불과하다는 문제
산업정책	○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이 낮은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노동개혁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과다한 규제 때문이므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개혁 필요 ○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관련 - 조선산업 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조선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 경기가 불황인 것은 저가 수주에 따른 손해를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 - 대우조선 부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감독이 미흡한 문제 - 해양플랜트 산업은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과 설계기술 부족, 기자재의 국산화율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 기본설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신규 R&D 사업 추진, 하동 경제자유구역에 연구개발센터 구축 필요 ○ 항공산업 관련 -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항공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 - 항공기 부문 탄소섬유복합소재, 복합재생산 기업 대부분이 해외시험평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천시에 항공우주부품 및 기술인증 R&D 센터 구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항공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큰 만큼, 항공분야에 특화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항공부품업체를 지원할 필요 ○ 베어링산업 관련 - 베어링산업의 집적화 미흡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필요 ○ 뿌리산업 관련 - 뿌리산업특화단지 조성지원 사업의 국비매칭 비율이 30%에 불과하나, 환경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국비 100% 지원할 필요 - 도장 부문의 뿌리산업 적극 육성 필요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관련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R&D 비용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조치 대상 금액이 408억원이며, 실제 환수액은 175억원에 불과한 문제 ○ 대량맞춤주문형의류제조기반구축사업 관련 - 파일럿 장비 도입 비용 대비 활용 수익이 1%에 불과하고, 활용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부진한 문제 ○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 전기차 산업 관련 부처가 국무총리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전기차 보급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 자동차 정비업 관련 -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제작업체에서 자동차 관련 세부 정보를 정비업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차 업체들이 비협조적인 문제 ○ 소형민수헬기개발사업 관련 - 동 사업을 통해 300대 정도의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노후헬기 플랫폼으로 개발되는 기체에 대한 시장 수요가 불확실하고 소형무장헬기로서의 전투효용성이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낮은 문제 ○ 미세전자제어기술 관련 - 미세전자제어기술(MEMS)은 사물 인터넷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발 지원이 미흡한 문제 ○ 불공정 거래 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신뢰성이 의심되는바 동반성장지수 평가 자료의 공개 필요
무역투자	○ 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많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출실적 관련 - 전년 대비 수출실적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주력 수출 제조업종이 중국과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경쟁 심화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 주도의 수출진작 대책 및 노동개혁, 기업환경개선 등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 ○ 외국인투자기업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 필요 ○ 외국인투자 관련 - 먹튀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외국인 투자 관리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신고 대비 그린필드 투자액이 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 투자양태로 사모펀드 등의 지분투자, 부동산 투자 등에 치중되어 있는 등 투자유치실적 발표와 실제 내용에 괴리가 많은 문제가 있음 ○ 무역협회 자회사인 코엑스몰 관련 - 코엑스몰의 임대차 계약에 불공정 조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코엑스몰 리모델링 이후 입점 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성을 갖는 무역협회에서 적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극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무역협회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협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의 국회제출도 불성실한 상황이므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무역협회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 - Kmall 24 설립·운영을 무역협회 차원에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는 등 정부사업으로 오인하게 만든 문제가 있으며, 이후 실적이 부진한 Kmall 24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부재함 ○ 무역보험 관련 - 무역보험기금의 기금배수가 선진국 대비 매우 높으며, 기금 손실에 따른 정부 보전 규모도 1조 4,000억원 수준인바 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이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바, 석문국가산단을 한중산업단지로 지정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전략물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
산업기반	○ 노후 산업단지 환경 개선 관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에 있어 당초 계획 대비 투자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하나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라도 모범사례를 만들어낼 필요 - 산단 구조고도화사업과 혁신산단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임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에 있어 평가기준 등이 부실하고, 부실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336억원 가량의 환수금이 발생하는 등 선정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점검 및 환수 강화 조치가 필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U턴 기업의 수도권 입주 지원,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도권 활성화에 앞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운영이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이뤄짐에 따라 공단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정 배분에 있어 특정지역 집중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예산 편성 등에서 균형발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는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실태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 필요 ○홈플러스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대신 테스코에서 자금을 빌리면서 4.23%의 이자율로 8,684억 원을 지불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므로 전면적인 검찰 조사 필요 ○대기업 유통백화점의 패션아웃렛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롯데백화점의 15개 패션아웃렛 매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대책 강구 ○주변 상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복합쇼핑몰의 출점에 대한 국토 이용, 도시계획 또는 환경 관련 규제 방안 검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의 매출 증가 효과가 백화점에 편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중되고 정기세일과 차별성이 부족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미흡하며 준비 기간 부족으로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엄밀한 사후평가를 통한 향후 행사의 효과적인 추진 필요 ○ 전자상거래 분야의 해외 진출 및 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산업부·미래부·중기업청의 R&D 기술개발 성공사업의 약 80%가 휴면상태에 있으며, 자금 신청에 많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R&D 자금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산업부·미래부·중기청의 R&D 연구과제의 사업화율에 관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필요 ○ R&D 성공사업의 경상기술료 징수액이 기술료 수입 총액의 0.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의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R&D 사업은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하므로 평가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백서 발간 필요 ○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 사업성과에 대한 활용조사의 회답율 제고를 통한 종합적인 사업성과분석 필요 ○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009년 이후 R&D 사업 관련 도입 장비 중 미활용 장비가 15%에 달하는바, 도입장비의 활용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국가 R&D 사업의 연구비 중복 지급 등 부당지급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R&D 관련 등록 장비의 활용 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필요 ○ 기반구축사업 관련 구입 장비 중 가동률이 저조하여 예산을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한 가동률 제고 방안 마련 ○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은행의 인력·예산 확대 검토 필요 ○ 녹색 기술인증의 녹색기술제품확인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인증 혜택의 재검토를 통한 기업지원 확대방안 검토 필요 ○ 장비 활용 수익 및 일자리 창출 실적이 매우 저조한 '대량 맞춤형 의류제조 기반 구축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검토 필요 ○ 'PHR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은 건강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및 원격의료·의료영리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본격적인 건립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산업부 내에 별도의 한시조직인 추진단 구성 필요 ○ 사천 특화단지에 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 부품 R&D 및 기술인증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R&D 사업 추진 필요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당초 목적과 다르게 해외출장을 가고 이해 관련 협회로부터 출장비용을 지원받으며 출장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개혁 차원에서 정비 필요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현 사옥의 조속 매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포함하여 지방 이전이 안 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계획 마련 필요
기술표준	○ 공인시험성적서 없이 인증서가 발급되고 있는 신제품인증(NEP)을 철저히 관리하고 NEP 인증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법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제도의 정비 필요 ○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임의인증을 강제인증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제품 결함이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하므로 형사고발의 강화 및 리콜제도의 철저한 시행 필요
통 상	○ TPP 협상 참여 관련, -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기존 양자 FTA를 통해 얻은 성과가 희석된 측면이 있으므로, TPP의 가입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한미 FTA를 통한 수입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부품 수출의 경우 TPP 역외 조달 비율이 높으므로, TPP 역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일본의 TPP 가입은 향후 인구감소 등 내수위축을 대비한 것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도 동일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 ○ 한중 FTA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의 비준을 촉구하면서도 피해보전 측면에서 농업 피해직불제도는 농림식품부장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로자 지원 대책은 고용부장관 책임 소관으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농어업소득보장기금, 무역이득공유제 등 농민과 근로자를 설득할 피해대책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 -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한 귀금속·공예품 등 소상공인의 피해 및 제조업의 기반·저변 영역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데,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대책과 관련한 소통이 부족하였음 - 한중 FTA에서 게임산업,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기는 쉽고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추가협상에서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노력할 것 - 한중 FTA를 통해 우리 농산물 대중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국의 수입요건 간소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 한중 FTA 관련 산업별 영향 연구용역 자료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출할 것 ○ 기타 양자·다자협상 및 통상분쟁 관련, -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것은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 - 7월 ITA-II 품목 리스트 합의에서 경쟁력 있는 LCD, OLED는 제외되고, 기존 FTA의 혜택 품목은 ITA-II로 무관세가 되어 혜택이 희석되므로, 합의된 품목 리스트와 우리 IT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할 것 - FTA로 보호된 상품이 환경상품협정(EGA)으로 개방될 수 있으므로 향후 협상에서 관련업계의 이해관계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할 필요
에너지 (자원개발·공급)	○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35조 8,000억원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부실한 부분이 많으며, 향후에도 46조 6,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여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TF를 구성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금액 대비 회수액이 미미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692%까지 부채비율이 증가하므로, 광물자원공사를 해체하거나 다른 공사와 합병하는 절차 등을 검토할 필요 - 에너지공기업이 위험성이 높은 신규 사업에 투자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기관평가나 감사 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한 총리실의 지시로 인해 에너지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화되었다는 지적 - 기획재정부의 20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는 공기업이 해외자원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해외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투자의 타당성 및 위험관리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산업부가 관리감독에 미흡하였다는 문제 -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기업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매각 이후에는 최초 투자비용과 매각비용을 공개하여 자산 매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 - 석유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지난 13년간 20.8조를 투자하였으나 지분물량 (4.9억배럴) 대비 0.4%(224만 배럴)만 시범 도입하는 등 국내 도입실적이 부진하여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미흡하였다는 문제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부실 사업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경영실패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출자금 한도를 증액하여 국민 세금으로 공사의 부채 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관련 정부 예산은 2011년 1조 1,900억원에서 2015년 3,500억원으로 급감하였으나, 최근 자원 가격도 급락하고 있어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예산 및 투자금액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할 필요 - 이명박정부가 수립한 에너지공기업 대형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공기업들의 금융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였고, 자원가격 또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부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 - 에너지공기업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채비율이 감사원이 발표한 부채비율과 크게 차이가 있는 등 재무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 지적 -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의 회수율이 이전 정부의 회수율보다 크게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금액 회수율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 - 해외자원개발사업 경제성 평가 수치를 조작하는 등 에너지공기업의 투자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의사결정 절차와 심사의 질을 개선할 필요 -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에 대하여 산업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크므로, 사업별로 부실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금 회수방안과 사업 정리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NARL 매입시 지질자원연구원의 손실경고를 무시하고 석유공사의 자체검토만을 근거로 해외자원개발신고를 접수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 상의 문제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 석유공사 이사회가 국회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다나에 향후 3억불의 투자를 하기로 의결한 것은 부적절하였고, 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하였음 - 석유공사 이사회가 국회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국정조사 완료 직후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농협 등이 하베스트에 1.9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도록 의결한 것은 부적절하였고, 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하였음 -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매입 인수 이후 경영자문을 했던 액센츄어 사장이 에너지공기업 재무개선 TF에 참여하였으나, TF 회의 내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출할 것 ○ 광물자원 관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중국 등 여러 국가가 북한의 광물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5·24 조치 이후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북한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등 산업부가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 희유금속이 주요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 매장량이 없으므로, 폐가전제품, 폐스크랩 등에서 희유금속을 추출하는 도시광산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시광산 사업 관련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
에너지 (석유·가스)	○ 석유 비축·유통질서 관련 - 2014년 알뜰주유소의 자립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국제가격 하락을 사유로 조급하게 민영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와 신중히 협의할 필요 - 부생연료유는 등유보다 황 함량 등 환경비용이 높음에도 등유의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통시장 정비를 위해 부생연료유의 규격을 등유와 동일하게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 - 비축 시설의 전략적 활용 및 한중일 공동협력방안 등 석유 수입시 아시아 프리미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할 것 -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경유에서 영하 20도 이하 결빙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품질기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LPG 차량이 감소추세라는 점, 오염배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OECD 국가 중 제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상 LPG 사용제한을 완화할 필요 - LPG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가스충전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다른 수입선 발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차원에서 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원할 필요 ○ 가스공사는 LNG 도입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건설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석유공사는 6곳의 비축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준공 이후에는 지원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운영단계에서도 주변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도시가스 공급 요금 관련 - 사회복지,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 형평화 차원에서 도시가스 요금 평준화 방안을 검토할 것 - 2015년 이뤄진 3차례의 도시가스 요금인하에서 산업용은 인하율이 5.8% 11.0% 11.9%, 주택 난방용은 5.4% 8.2% 7.9%로 산업용에 혜택이 집중되었고, 지역별 가스요금 격차도 해소하지 못하였음 - 수도권과 지방간 도시가스 요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요금이 책정된 경우 차액을 에특회계나 별도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경주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이 가장 비싸고 영업이익률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 공급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점검 및 감시 필요 -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특정 업체에 가스요금을 과소부과하여 부족분이 국민에게 전가된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할 필요 - 취사용 가스기기를 전기기기로 바꾸는 경우 철거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관련 규정이 미비하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 정보 공개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연결비용의 지역별 편차 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관련, - 섬 지역에서는 LPG 보급차질에 대비해 과도하게 LPG 용기를 적재하는 등 안전우려가 있으므로, 섬지역에 우선적으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실시할 필요 - LPG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가스공급 시범사업에 가스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가스 안전 관련 - LPG용기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내압검사설비 표준·인증 또는 검사제도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할 것 -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의무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으므로 기한 내에 교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조선산업과 연계하여 LNG 에코십, 벙커링 등의 클러스터 연구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에너지 (전력 ·원자력)	○ 대형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 1,000MW급 대형 석탄발전소 건설 시 하도급 업체의 계약액 대비 실제 공사금액이 과도하여 협력업체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 - 선행호기 실적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부담을 보일러시공업체 등 하도급 업체로 전가하고 있어 중·소규모 시공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한 문제 - 하도급 계약서에 “물량내역서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도급법」 상 부당한 특약의 금지를 위반한 소지가 크므로 감사원 감사청구 또는 공정위 조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필요 - 발전사와 원청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총액확정분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예외적인데 반해, 원청업체와 하도급간 계약은 물량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발주자가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계약금액을 조정해주지 않는다는 원청사와 하도급사간의 계약서 조항이 있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임 - 공사비 산정방식, 설계금액 산정방식, 하도급 관행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 - 발주처·원청업체·하도급업체 간의 갈등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전력계통 운영 관련 - 전력품질유지를 위한 주파수조정(FR)은 화력발전소와 같은 발전설비가 담당하는 영역이나, 정부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송전설비로 규정함으로써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한국전력(주)이 ESS를 설치·이용해서 주파수조정에 참여하는 문제 -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통신설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적 기능을 하는 ESS를 송전설비로 보고 있으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발전기가 수행하는 주파수조정을 하는 ESS를 송전설비로 보는 문제 - 한전이 ESS로 주파수조정을 하는 이유는 화력발전기 가동율을 극대화하여 전력구입비용을 절감하려는 이유이나, 전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정상적인 작동이 필요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 지난 3년간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1.6%에 불과함에도 전력소비량 증가율을 2.1%로 예상하여 전력수요를 과다예측하고 있는 문제 - 경제성장률 역시 수급계획에서는 3.2%로 예상하고 있어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KDI의 장기성장률 전망(1.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 - 제7차 수급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최대전력수요 예상치(127,229MW)가 환경부가 발간한 자체 예측보고서에서 예상하고 있는 '28년 전력수요 최대치(108,800MW)와 18,429MW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 - 향후 수요예측 시 정부 부처 간 협의·조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각 부처가 다른 자료를 발표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과다 수요예측치를 조정하면 정부가 7차계획에서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더라도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정부가 설비예비율을 22%(최소설비예비율 15%, 수급 불확실성 대비 7%)로 산정함에 따라 연료비 단가가 높은 LNG 설비의 이용율이 저조하여 민간 LNG발전사업자가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 과잉설비로 발생하는 LNG발전사업자 손실을 완화하는 조치(CP요금 인상 등)가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 ○ 적정 설비예비율 관련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설비예비율을 15%(불확실성 대응분 7% 제외)로 제시하고 있으나 6차계획에서 사용한 입력자료와 7차계획의 수요전망치 및 공급지장시간(0.3일)을 토대로 WASP(전원구성모형)에서 산출한 적정 설비예비율은 5%로 도출된 문제 - 계획예방정비일수 등 설비예비율 산출의 근거가 되는 전제수치를 상이하게 입력하여 7차계획에서 과도한 설비예비율이 도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규 원전 2기 건설이라는 결론에 다다른 문제 ○ 석탄 공급단가 관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에 대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한전에 소환장(Subpoena)을 보낸 문제 - 석탄공급과 관련하여 특정 대행사가 관리하고 있는 납품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석탄구매단가가 지나치게 높은 점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 필요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석탄입찰 방식에서 증권거래위원회의 소환장 발급 이후 발전 5개사가 동시에 최저가 응찰로 제도를 변경한 문제 ○ 발전5개사의 연료 개별구매에 따른 연료비 단가상승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구매 법인 설립 등 공동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 ○ 현재 10~15%에 불과한 발전사업자의 미실적 신규 정비업체 공동도급 비율로는 발전정비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변화하는데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공동도급 형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수요관리사업자 전력시장 입찰 관련 - 수요관리사업자의 경우 1일 전 시장에서 공급가능용량을 입찰하기만 하면 발전자원 대비 64% 수준의 용량요금을 받는 문제 - 감축량을 계량하기 위한 설비에 들어가는 투자비와 발전소의 건설에 필요한 투자비를 비교한다면 수요관리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문제 (지난 8개월간 실제 절전량 14만kWh에 64억원의 실적금이 집행된 반면 346억원을 감축량과 무관하게 기본 용량요금으로 지급) ○ 에너지저장장치(ESS)·분산전원 관련 -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하여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정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14년까지 '분산형전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갈등 회피를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보급 촉진정책이 필요 - 에너지저장장치, 분산전원, 신재생에너지 등 석유·가스·원자력 이후의 에너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 통일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등 분산발전의 기초를 구축할 필요 ○ 분산형전원 중 자가발전의 경우 신재생이나 집단에너지와 달리 성장속도가 정체되어 있음. 현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자가발전은 신규고객 증가분 만이 반영되어 있으나 기존 전력수용가가 자가발전 형태로 교체되는 부분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전력 다소비 업체의 자가발전 확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ESS의 경제성 부족 및 환경오염 문제로 상당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어 '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는데, ESS의 환경상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폐리튬 리사이클링 사업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 -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 ○ 원전비리 후속조치 관련 - '13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발생 시에는 부품납품업체나 검증업체가 성적서를 위조한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제한, 공급자효력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실시하였으나 '14년도 ㈜엔케이의 위조부품 납품과 관련하여서는 검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동 위조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까지 1년 간 한수원이 동 사실을 은폐한 문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관련 - 석탄・우드펠릿의 혼소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드펠릿이 함유한 수분까지 이행량에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문제 - 우드펠릿의 수분함유량을 감안하여 현재 고위발열량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단순히 우드펠릿을 수입하여 RPS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 - 일부발전사의 경우 RPS 의무량의 대부분을 우드펠릿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우드펠릿이 수입원료임을 감안하여 우드펠릿 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원 분류 관련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산업폐기물까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문제 - '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보면 국내기준으로 3.18% 이나 국제에너지기구(IEA)기준으로는 1.9%에 불과함 (OECD 34개국 중 34위) -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폐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추가한 문제 ○ 소수력 등 발전원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최근 전력거래단가(계통한계가격, SMP)의 하락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SMP 하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발전자회사 신·재생에너지 투자 관련 - '14년 기준 총사업투자액 대비 신재생에너지 투자액 비중이 서부발전이 30%에 달하는 반면 남부·남동·중부·동서·한수원 등은 10%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산업부가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독려할 필요 ○ 에너지자립섬 관련 -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의 경우 2단계 사업에서 대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을 포함하고 있는데 연료전지는 화석연료(LNG)를 기반으로 한 발전원이므로 이를 "에너지자립" 또는 "탄소제로"라고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학교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발전기의 경우 총 33개 학교에서 방학동안 생산한 전력(약 201만kWh)이 버려지고 있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산업부가 교육부와 협의할 필요 ○ 소규모태양광사업자 관련 - 공급인증서(REC)거래시장이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소규모발전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참여가 어려운 문제 - 태양광판매사업자 선정물량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경쟁률이 높아서 다수의 소규모 사업자가 동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 - 소규모 신재생사업자의 경우 공급인증서 유효기간(3년)이 짧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소규모사업자의 사업성을 확보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실시하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 ○ 통상적으로 가정용 주택에 자가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배전설비 용량을 감안하여 3kW를 기본으로 계약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량 규제를 완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화할 필요 ○ 폐기물고형연료(SRF) 관련 -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사용하는 폐기물고형연료가 소각대상으로 분류되는 폐기물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환경상의 위해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해당 연료의 허가·사용에 대하여 환경부와 면밀하게 협의할 필요 ○ 2012년 지역난방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열요금 과다산정방식을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 요금에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열요금이 과다 징수된 부분은 환수조치할 필요 ○ 군산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과 한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양 측의 이견을 중재하는데 노력하고 해당지역 전력수요를 감안한 신규발전소 건설 타당성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관련 - 「송주법」은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법률상 거리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 - 경주지역의 송전탑 및 송전선로 보유현황이 전국 1위임에도 지원금액은 10위도 되지 않고 있는 문제 ○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 기금의 수입증가로 인한 여유자금 보유수준이 과다하므로 현행 3.7%의 부담금요율을 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 -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대기업 R&D에 배정하는 것과 반대로 정부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복지사업비 편성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정부가 TF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원전 정비산업 육성방안”의 구성과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특혜의혹이 있는 6개 민간발전정비사의 원전정비 사업 진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 ○ 전기차 관련 - 전기차의 높은 미래가치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일관된 사업방향 없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보급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기차와 관련한 사업모델을 발굴·육성할 필요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 다른 국가에 비하여 과도한 구간별 격차를 보이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 - 주택용 전기가 전체 전기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함에도 누진제로 인하여 일반 전기사용자가 과도한 요금부담을 하고 있는 문제 - 현행 주택요금 누진제는 저소득층이 아닌 경제력이 있는 1·2인 가구가 낮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문제 - 누진제 1단계인 100kWh 이하를 쓰는 가구에서 서민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수준에 불과한 문제 - 1·2인 가구의 비중이 누진제 도입시기와 큰 격차(1·2인가구: ’74년 12%→ 현재 50%이상)를 보이고 있으므로 변화된 생활패턴을 감안한 제도 개선이 필요 - 전기사용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고 있는 누진제 구간 축소 및 구간별 요금격차 해소 필요 ○ 전기요금 관련 - ’11년부터 시행되어 온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 5.9% 할인이 지속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매년 이사회의결을 거쳐 1년씩 연장되고 있는데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확장으로 영세해지고 있는 전통시장의 입지를 고려하면 지속적인 전기요금 할인이 필요 -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은 벼를 쌀로 만드는 농업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수목원, 식물원은 그 기능 및 시설설치 현황이 유사함에도 그 설립근거(「수목원법」, 「박물관법」)가 상이하여 「박물관법」에 따라 등록한 식물원은 교육용전기요금을, 「수목원법」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은 일반용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문제 - 현재 말(馬)을 운반용·농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승마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문제 ○원전 폐로 관련 - 본격적인 원전 폐로에 대비하여 충분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관련 - 현재 모든 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론화위원회가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 없이 '20년까지 최종부지를 선정하라는 막연한 권고만을 하고 있는 문제 - 공론화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투명하지 않게 집행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철저한 감사 필요 - 권고안에 처분장 건설을 위한 재정대책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분석이 제외되어 있는 문제 - 현재 처분장 건설을 위한 기금 조성이 1조 6천억원에 불과함. 미국의 경우 약 32조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51년까지 처분장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1조 가량의 신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적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이 경제적인 발전원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문제 ○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 대통령 대선공약에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고, 정부도 전력산업 발전방안 용역을 발주하여 그 보고서가 공개되었음에도, 산업부가 이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문제 ○ 남동발전의 현대에너지 지분투자 관련 - 현대에너지는 현대건설, 남동발전, 보임에너지 3개사가 공동으로 투자한 회사이나 현재 원금상환 및 유상증자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남동발전의 경우 향후 1,200억원이 넘는 지분손실이 예상되는 문제 - 보임에너지는 지분출자율이 1.9%(29억원)에 불과함에도 동 회사에 EPC 권리를 부여하고, 사업개발비를 지급(24억원)하며, 과도한 수준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해 주는 등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문제 - 보임에너지가 석탄 하역·보관·운송 사업과 관련하여 연간 28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문제 ○ 한전·발전공기업 출자회사 재취업 관련 - 전력분야 공기업에 근무하다 공기업 출자법인에 재취업하는 인원이 191명에 달하고 있는 문제 - 휴세스, 동두천드림파워 등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이나 공기업 출자지분이 낮은 기업임에도 공기업 퇴직임원을 재취직시키고 있는 문제 - 산업부가 전력분야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 ○ 회처리 시설 등 발전사 입찰 담합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담합행위가 근절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남동발전 등 일부 전력분야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경영실적보고서에 노조협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무부처가 면밀히 관리·감독할 필요 ○도심지역 전력공급을 위하여 변전소까지 설치되는 송전선로에 대하여는 한전의 책임하에 지중화를 추진할 필요 ○남동발전 경량골재 사업의 사업추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생 또는 파산 신청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필요 ○최근 전기사용의 증가가 두드러짐에 따라 지난 10년간 국내 송전선 길이가 17% 증가(175,000km)한 것과 비교하여 송전망에 걸리는 최대 부하량은 51,000MW에서 80,000MW로 54%나 증가하고 있는 문제 - 안전한 송전망 운영을 위하여 송전망 과부하의 임계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정기준을 마련할 필요 ○관형지지물(관주송전철탑, 원형송전철탑)의 설계·심사과정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안전기준을 재검토 할 필요 ○한수원 및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발전기가 최근 5년간 고장으로 1만 3,000시간 정지함에 따라 대체전력구입비용이 약 1조원 가량 발생한 문제 - 고장 이유가 대부분 보수불량, 설계결함 등 관리부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기후변화 관련 연구집단인 '기후행동추적 (Carbon Action Tracker)'의 평가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행동 수준은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므로, 기후변화 관련 산업을 창출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정부는 원자력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국제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배출권 구입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수단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 - 발전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9,000억원 상당의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전기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전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관련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전체 73만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3만 가구 씩 지원하여 18년 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나, 저소득층의 수요가 많은 사업이므로 연도별 지원 가구수를 증가시켜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사의 부실 시공 사례가 2011년 35건에서 2014년 400여건으로 급증하였으므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2. 중소기업청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중소기업 정책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과 관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대위권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원가절감형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현금부담 비율 상향 조정 필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활용한 고발 실적이 저조하므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전담인력 확충 필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장 적용이 미흡하고 인식이 낮으므로 제도 홍보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청에서 제도 확대에 대해 노력할 필요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 근절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노력 제고 필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및 홍보를 강화하고, 명칭을 '수·위탁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중소기업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필요 ○적합업종 지정 권고기간 종료 시 권고기간 연장, 지원대책 등 후속 대책 마련 필요 ○적합업종 법제화 등 적합업종 지정 확대를 위한 중기청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공제금 비과세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정확한 정책정보 제공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맞춤 교육 확대 등을 위해 소상공인 전문 교육시설 건립 필요성을 검토 ○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감소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 ○ 소상공인 TV의 낮은 시청률 개선 노력 필요 ○ 소공인집적센터 확충, 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생산혁신 등 소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 ○ 나들가게 육성사업 내실화 - 나들가게 1만개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목표 수정 필요 - 나들가게가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은 소도시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관련 - 공단 임직원 외부 강연료 문제, 불합리한 수당 수령, 친인척에게 일거리 제공 등 방만한 기관 운영을 개선할 필요 - 공단의 자구노력과 병행하여 상담지도직 처우개선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 ○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에 대해 중기청에서 적극적으로 업계 의견을 대변할 필요 ○ 소상공인사관학교 사업 추진방안 개선 필요 ○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율조정으로 처리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분석하여 발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지법인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 권고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전통시장 지원	○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책 - 대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방안 마련 필요 - 전자상품권(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노력 강화 필요 - 온누리상품권 취급은행 확대 필요 -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전통시장 쇼핑카트지원 시범사업 실시 필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 임대료 상승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우수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우선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전통시장 권리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필요 ○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생협력 방안 마련 필요 ○ 글로벌 명품시장 내 짝퉁제품 판매 문제 개선 필요 ○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전통시장 참여 재검토 필요 ○ 하드웨어(주차장, 환경개선 등)중심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가 낮으므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전통시장 애플리케이션 “매력넘치는 전통시장” 기능 고도화 필요 ○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 농어업 안전재해보험 등과 같이 농어촌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보험료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영향평가,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필요 -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강화 필요 - 전통시장 내 불량률이 높은 전기, 가스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중견기업 육성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수도권 집중 문제 개선 및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 점검 필요 ○ 정부기관 납품기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원이 단절(피터팬 증후군의 주요원인)되는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 필요 ○ 중견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 허용, 조세 지원 등 중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중견기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중견기업 범위가 상충되는 부분 개선 필요
벤처·창업 지원	○ 창업지원사업 실적 부풀리기 지적사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쿼터 배정, 지방창업 초기펀드 조성 등 모태펀드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등 청년 창업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충 필요 ○ LA, CI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네트워크 강화, 펀드유치 등 글로벌 창업 성공 촉진 노력 필요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벤처산업 활성화 위해 지방펀드 조성 필요 ○ 모태펀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방안 마련 필요 ○ 글로벌 청년해외창업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철저한 선정과 사후관리 필요 ○ 창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벤처창업 지원은 6개 정부부처에서 지원 중이나, 중기청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 마련 필요 ○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홍보 강화 등 전반적인 점검 필요 ○ 창업 초기에 집중된 창업지원 정책을 중간회수시장 등 창업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으로 개선 필요
판로 및 수출지원	○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 중 내수지원 비중이 저조한바 지원 확대방안 마련 필요 ○ 2013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간접광고지원(PPL)의 효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과도한 수수료 등 인터넷 오픈마켓의 불공정 거래 문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오픈마켓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공구매제도 사후제재 실효성이 낮으므로 모니터링 강화 및 나라장터에서 입찰 진행 시 공공구매 제도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의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및 실효성 제고 필요 ○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위장 중소기업으로 진입하는 경우,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퇴출과 더불어 위장 중소기업을 운영한 대기업도 제재할 필요 ○ 신제품·신기술인증제품 등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공공구매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필요 ○ 공공임대 리츠사업 관련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공공구매 회피 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공구매제도 준수를 강화하되, 적자 공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예외 적용 검토 필요 ○ 상수도용 PE 강관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공공구매제도 개선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방안 검토 필요 ○ 정부보조지원 단체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도입 검토 필요 ○ 홈쇼핑 무료방송의 지원 성과가 저조하므로 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 필요 ○ 아임쇼핑의 창의혁신제품 비중 저조, 외산제품 방영 등 기존 홈쇼핑과의 차별성 미흡 개선 필요 ○ 아임쇼핑 등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 ○ 아임쇼핑과 관련하여, 로고, CI, BI 선정 등에 있어 중기청과 농림부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아임쇼핑의 낮은 수수료는 장기적으로 자본잠식 문제로 연계되므로 현실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중소기업전용판매장 업체당 지원면적 확대, 매출실적 개선 등 내실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중소기업전용판매장(중소기업 명품마루, 히트500 플라자)의 명칭 변경 검토 필요 ○ 해외대형유통망진출사업과 관련하여, 홈쇼핑 및 온라인쇼핑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 뉴저지 중소기업제품판매 전용매장(K-Hit plaza)은 운영사 선정이 부적절하고, 매출 성과도 저조하므로 지원자금 환수, 담당자 문책, 소관 중앙부처의 감사 등 필요 ○ 중소기업 해외전시 판매장의 매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합매장화, 특성화 매장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의 수출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필요 ○ 무역보험제도 중소기업 지원 확대, 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관련 기관간 중복사업 개선, 바이어 DB공유 등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인정과 관련한 애로 해소를 위하여 교육, 컨설팅 및 전담인력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글로벌 하이웨이 지원사업은 세부 운영계획 미비, 사업정산 지연, 사업비 이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확대는 문제가 있으며, 대기업 컨설팅사 참여, 2013년 결산 허위보고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할 필요 ○ 해외직구와 관련한 수입·수출액 불균형이 심하므로 해외직구를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하여 특단의 지원책 마련 필요 ○ 수출지원사업 관련 정보제공을 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고, 온라인 정보 제공시에는 일반정보와 세부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하는 포털시스템 검토 필요 ○ 중국에 대한 수출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중국의 전자상거래 특구를 활용한 수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한중FTA에 대비하여 섬유·의류, 귀금속·보석 산업에 대한 R&D, 금융, 해외시장개척 지원대책 마련 필요
금융 및 인력 지원	○ 중소기업 계약학과 충원율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홍보 강화 및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중소기업 특성화고등학교의 중소기업 취업률 제고 등 성과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전문연구요원제도 지역안배 및 제도 홍보가 필요하며,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과의 연계 등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사업의 지역안배 고려 필요 ○ 메르스 대책 융자금을 고신용등급에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므로 재발방지 필요 ○ 이자보상비율 1이하인 기업비중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므로 정책자금 중 부실·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방지 필요 ○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정책자금 지원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수의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기술 지원	○ R&D 평가 참여제한 위원의 평가 참여, 평가위원의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 평가 참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R&D 평가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청 R&D 평가위원 중 산업체 평가위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유인 방안, 평가위원 관리 강화방안 등 마련 필요 ○ R&D자금 지역편중 완화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 중소기업 R&D사업화 성공률이 낮으므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예산 확대와 더불어 과제 선정시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유망산업과 연계, 현장중심 과제 발굴·지원 등 필요 ○ 정부 R&D지원 이후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추가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 ○ 국가 R&D사업에 연간 19조가 투입되고 있으나 성과가 저조하고, R&D 부정사용 적발 실적, 환수실적도 저조하므로 자부담 상향, 제재부가금 적용 등 개선 필요 ○ 산업부, 미래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R&D 지원과제의 성공판정 기준을 통일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중소기업청이 지침을 위반하여 유사중복과제를 지원하여 20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된바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결과물 구매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 R&D 지원 중단에 대한 재검토 필요 ○중소기업 기술보호대책으로 유출방지비용 공제제도 도입 검토 필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적절성 재검토 필요 ○기술유출방지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기술유출 실태조사 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필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단순하게 개편하고, 기술보호 관련 사이트의 운영 내실화 필요 ○중소기업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조정에 따르지 않는 대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업종공통 R&D 및 단체표준 R&D사업 등에서 연구비 유용이 발생한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중기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기타	○동반성장 투자재원 협약 및 출연 저조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성과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직원 채용 비리 문제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이나 관리감독이 부실한 문제가 있으므로 기타 공공기관 지정 등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필요 ○동반성장위원회의 문화활동 후원, 사무총장 외부 출강 시 고액 사례금 수수 등의 부적절 운영, 비위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동반성장위원회의 비정상적 예산 및 조직의 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 관련하여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고, 사업조정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 필요 ○한식뷔페 등 골목상권 음식점업 보호 및 대기업의 상권침탈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필요 ○기술혁신협회가 운영하는 '정책금융 조달 최고경영자 과정'에 중소기업청 현직자의 강사 출강 부적절을 지적 ○시험검사 업무가 종료되면 물품관리법에 따라 설비를 처리해야 하나, 임의로 처리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후관리 철저 필요 ○중소기업의 중국 거래대금 회수 차질 관련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에 따른 무선도청 보안대책 방안 마련 필요 ○중소기업청의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이 저조하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임금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향상 대책 마련을 마련하고, 세제 지원·창업정책 등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홍보를 적극 실시할 필요 ○ 내부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및 적극적 보호조치 강구 필요 ○ 울산지방청 신설과 관련하여 수출지원센터 인력 보완 필요 ○ 경북/전남지역에 지방중기청 지역사무소 설치방안 검토 ○ 온라인 구매지원시스템 활용실적 저조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주로 대기업이 수주·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및 산하기관 콜센터에 대해 입찰방식 변경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의 스포츠토토 투자 결정은 절차 및 내용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중소기업청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 ○ 중소기업중앙회는 건물관리 자회사 설립 후 위탁 등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있으므로, 수의계약 조건 강화, 투명성 강화 등 대책마련 필요 ○ 소상공인공제제도 부금대출과 관련하여, 대출한도 확대, 대출이자 인하 등 개선 필요 ○ 홈앤쇼핑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전가, 높은 수수료의 모바일 주문 강요 등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촉진할 필요 ○ 공공기관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2017년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중소기업청 산하기관 이행 저조

3. 특허청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지식재산 창출·활용 정책	○정부 R&D로 산출된 특허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시 출원 건수가 아닌 활용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IP-R&D 전략지원 시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집중 지원 필요 ○지역지식재산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필요 ○지식재산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대학·공공(연)의 원천특허,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률 제고 필요 ○공무원 직무발명 장려를 위한 국유특허관리 및 활용촉진 사업의 성과지표 부재 지적 및 국유특허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지식재산만으로 중소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 가치평가의 적정성 확보 및 IP담보대출 활성화 필요 ○IP 스타기업의 특정지역 편중 방지 및 집중 산업 육성과 관련된 중소기업 선정 등 공정하게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예산 증액 필요 ○3D 프린팅 등 소멸특허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조선 해양 분야의 특허출원 활성화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 필요 ○창조경제타운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창업 및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필요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특허지원 창구 확대 및 특허개방을 통해 중소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력 필요 ○지식재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특허거래전문관의 전공을 다양화하고 인력 확대 필요 ○IP 스타기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3년간의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 필요 ○사물인터넷과 드론분야 등 신성장 분야의 표준화 및 표준특허 창출을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위한 지원 필요 ○ 특허청의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중기청의 소공인특화진흥센터 연계를 통한 소공인 지원 대책 마련 필요
지식재산 보호 정책	○ 특허괴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WIPO 등 국제기구에서 공론화하고 공동 대응 필요 ○ 특허괴물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ID社의 운영정상화 및 기능·수익모델 개선 필요 ○ 특허소송 합리화를 위한 침해소송 공동소송제도 개선과 변리사회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징계 필요 ○ 중국내 상표브로커 문제 해결 등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 해결을 위한 IP-DESK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위조상품 단속 업무 위탁 부적절 지적 및 개선 필요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므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특사경 인력 확보 및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필요 ○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 전자부품의 국내유입 파악 및 단속 강화 필요 ○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특사경의 단속 등 역할 강화 및 제도개선 필요 ○ 위조상품 압수물품을 소각하지 않고, 상표제거 후 빈민국가 청소년 등에게 기부하는 등 재활용 필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높은데, 공익변리사 센터 등을 통한 지원 확대 필요 ○ IP-DESK 지원 사업과 지재권 초동대응 지원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수행주체 통합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특사경 직원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 및 지능화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수사 장비의 보강을 추진하고 특사경의 확대 필요 ○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이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IP-DESK 확대 필요
심사·심판 정책	○ 심사관 인력 증원없이 무리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보다는 심사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고, 선행기술조사기관 조사원의 전문성 확보와 선행기술조사기관의 등록제 전환 필요 ○ 불명확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 주요국에 비해 높은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절감을 위한 대책 추진 필요 ○ 비즈니스 모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확보 등 필요 ○ 프랜차이즈 법인 오너·가족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로열티를 받는 등의 문제점 지적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상 사용주의 요소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 특허심사품질 문제 해결을 위한 심사처리기간의 지표 활용 지양 및 정책·지원부서 인력의 심사인력으로의 전환 필요 ○ 중소기업이 공유특허 분할청구를 당해 사업을 접거나 특허를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토 필요
기타	○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부적정 지적 및 개선대책 마련·추진 ○ WIPO 지역사무소 한국 유치 및 WIPO 본부 고위직 진출을 위한 노력 및 대비책 마련 필요 ○ 특허청 및 산하기관 웹사이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검토 필요 ○ 특허정보진흥센터의 검색시스템(KIWEE)에 대한 민간 공개 검토 및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추진 필요 ○ 우리나라가 특허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충실한 교육 실시 필요 ○ 상표브로커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별 출원건수의 한도 지정 필요 ○ 정보화 사업에서 LG CNS 독점문제를 해결하고 특허정보원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전임 특허청장이 산하기관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정액급여 및 사무실 제공을 받는 등에 대한 부적절 개선 필요 ○ 산하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 및 산하기관 통·폐합 필요 ○ 특허청 직원의 재직 중 산업재산권 등록 금지 이외에 퇴직 후에도 재직중 출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장치 마련 필요 ○ 산하기관 수의계약 체결을 통한 산하기관 밀어주기 문제 개선 필요 ○ 특허청 산하기관 채용과정에서 심사기준에 명시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순위가 바뀌는 등의 문제 지적 및 재발방지 필요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학 확대 필요 ○ 청렴도 제고를 위해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 필요 ○ 특허청 경쟁 입찰 발주건 중, 발명진흥회와 지식재산서비스협회 2개 기관이 70%를 차지하며, 낙찰률이 100%인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 필요 ○ 발명교육센터의 예산확대를 통한 발명교육센터 확충과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필요 ○ 특허청 예산의 공자기금 예탁을 줄이고, 정보화 사업 예산 증액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필요 ○ 특허청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에 대한 부적정 지적 및 개선책 마련 필요

4. 한국전력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전기요금 및 판매	○ 미곡종합처리장(RPC) 전기요금 관련 -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나, 농업인 소득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필요 - 도정시설은 벼 껍질을 제거하여 식용가능한 쌀로 만드는 것이므로 이는 농업생산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원재료의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제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도정시설은 이와 같은 제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다른 국가에 비하여 과도한 구간별 격차를 보이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 - 현행 주택요금 누진제는 저소득층이 아닌 경제력이 있는 1·2인 가구가 낮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문제 - 누진제 1단계인 100kWh 이하를 쓰는 가구에서 서민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수준에 불과한 문제 - 1·2인 가구의 비중이 누진제 도입시기와 큰 격차(1·2인 가구: '74년 12%→ 현재 50%이상)를 보이고 있으므로 변화된 생활패턴을 감안한 제도 개선이 필요 - 전기사용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고 있는 누진제 구간 축소 및 구간별 요금격차 해소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공동전기료 부과방식(종합계약, 단일계약) 관련 - 각각의 아파트 형태에 따라 유리한 형태의 공동전기료 부과방식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비싼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아파트가 상당수이므로, 각 아파트가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전이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할 필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서 과도한 요금을 납부하는 사례(주거용 오피스텔 제외)가 있으므로 한전이 이를 적극적으로 가려내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 ○농업용 저온보관시설의 경우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만 농사용 전기요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가공품 보관 시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어촌계에 가입되어 운영하는 저온저장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일반 어민들이 보유하는 저장시설은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오히려 영세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용도별요금제도 조정이 필요 ○공공분야 전기요금 관련 - '12년 8월 약관 개정으로 철도, 상하수도, 가스 분야 공공기관에 일반산업용과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기존 고객은 3년간 유예, 신규고객은 새로운 규정 적용) - 요금 징수과정에서 신규사업자에게 요금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아 58억원의 요금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한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15.10월에 기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기간이 만료되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인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전기요금 이중수납 등 과오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기업의 경우 전기요금 체납에 대한 단전조치(3개월 미납 시 단전)를 엄격하게 실시할 필요 - 개성공단의 개성한샘과 같은 기업은 1억원 이상 요금 체납을 하고 있음에도 전기를 공급하고 있음 ○ 한전의 에너지 복지지원제도 홍보부족으로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단전기준이나 각종 복지할인 제도를 모르는 가구가 많아 전체 대상자 대비 수혜율이 62.3%에 불과한 문제 - 본인 신고제로 인해 복지할인 제도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향후 보훈처, 행정자치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전이 적극적으로 복지혜택을 적용할 필요 ○ 심야전기 관련 - 심야전기로 인한 영업손실이 6조원이 넘고 있는 문제 - 심야전기 고객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10%에 불과한 문제 ○ 통상적으로 가정용 주택에 자가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배전설비 용량을 감안하여 3kW를 기본으로 계약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용량 규제를 완화할 필요 ○ 발전연료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15년 누진제 할증구간 완화 이외에 특별한 전기요금 인하조치가 없는 문제 ○ 초·중·고교(전기요금의 4% 할인)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에 대하여도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관련 -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 및 지중건설과 관련하여 한전과 지역주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 - '12년 전북대학교 용역결과 토지 및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피해 예상액이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에도, 한전은 이를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보상하고 있는 문제 - 송전탑 건설이 '09년에 중단된 이후 아직도 주민동의를 받지 못한 지역이 상당수 남아있는데, 군산산단의 전력공급 부족우려를 빌미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문제 - 송전탑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를 실시하며, 피해 예상지역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액을 제시할 필요
송·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건설·운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관련 - 현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하고 있으나 송전탑·송전선로 보유 정도를 추가적으로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경주와 창원의 지원금을 비교하면 송전탑(345kV) 개수가 창원 149개, 경주 390개로 큰차이가 있음. 「송주법」 제정 이전에는 특별지원금이 창원 7억원, 경주 14.5억원 이었으나, 법률 제정 이후 창원 10억원, 경주 9.2억원으로 변경됨. ○「송주법」에 따른 지원범위(1km)와 한전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특수보상의 지원범위(1,450m)가 상이하여 밀양 송전탑의 경우 해당 경계범위의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 송전탑건설 및 보상·지원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으므로 한전이 특정인 또는 주민의 일부에게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최근 전기사용의 증가가 두드러짐에 따라 지난 10년간 국내 송전선 길이가 17% 증가(175,000km)한 것과 비교하여 송전망에 걸리는 최대 부하량은 51,000MW에서 80,000MW로 54%나 증가하고 있는 문제 - 안전한 송전망 운영을 위하여 송전망 과부하의 임계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정기준을 마련할 필요 ○송전선로 지중화 시 지자체·한전이 비용을 50%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지중화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재정분담비율을 조정하거나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송전탑에 대한 지역주민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송전탑의 디자인을 주민 친화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765·345kV와 같이 계통운영에 필요한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비는 한전이 현행(50%)보다 높은 수준에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 - 도심지역·학교 등을 경유하는 송전선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중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당진 9·10호기 송전제약 관련 - '12년 12월 신뢰도 고시 개정으로 765kV 2회선 고장을 상정하여야 함에 따라 당진화력 9·10호기 가동 시 765kV 1회선 추가 건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최대 6,400억원(200만kW 가정 시)의 추가 전력구입비용이 예상되는 문제 - 당진지역 선로보강방안 및 송전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관형지지물(관주송전철탑, 원형송전철탑) 관련 - 관형지지물(관주송전철탑, 원형송전철탑) 공사규격서 분석 결과 설계·심사과정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기준을 총체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 - 전문가 심의 없이 발주처 직원이 직접 승인을 한 문제 - 앵커볼트, 연결볼트, 암 접합부의 안전성이 떨어져 구조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 - 현재까지 총 643개가 설치되었는데 업체 등록기준, 설계·심사 절차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 밀양 송전탑 관련 - 고정마을의 경우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위장전입까지 시도하고 있는 등 찬성주민과 반대주민의 대립이 극심하여 최근 흉기로 인한 상해사건까지 발생한 문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주민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찬반주민의 법적소송 발생 시 변론 변호사 비용일체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포함한 문제 - 밀양 송전탑과 관련하여 총 69명이 기소가 되었으며, 지역주민 ○○○은 한전의 선로건설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을 받은 문제 - 스웨덴 핵폐기물 유치과정 등 선진국의 기피시설 갈등해소 사례를 감안할 때 한전이 반대주민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적절치 않음 ○ 제주-진도 간 선로공사 관련 - 당초 3,300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몰 심도의 문제로 일부 보강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1,200억원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음. - 계약자인 LS산전이 먼저 670억원을 추가공사비로 집행하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였고, 상사중재원이 추가로 8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아 1/3을 한전이 2/3을 LS산전이 부담하는 것으로 중재함. - 계약 및 공사비 집행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사를 성실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제주도의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선하지 보상 관련 - 선하지 사용권원 확보사업 관련하여 미래 사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과거 사용분에 대한 보상금은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문제 - 소송 없이도 과거 사용분에 대한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민법상 소멸시효로 인하여 과거 10년 간의 사용료에 대하여만 지급하고 있는데, 10년 이전 사용건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전력신기술 관련 -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 공법(전력신기술 제10호)으로 인한 사고가 많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작업자의 위험성이 매우 큰 문제 - 직접활선공법을 적용한 한전의 발주가 9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향후 한전이 안전성 높은 공법으로 발주를 실시할 필요 ○송전선로 주변 50m 이내에 있는 학교가 현재 46개 가량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한전이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 -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학교와 동일하게 관리대책을 수립할 필요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변전소 안전관리 관련 - '15년 한전 예산사업 성과평과에서 다른 안전장치와 중복되는 점, 부수설비 설치공간 확보가 곤란한 점 등을 들어 워터미스트에 대한 시설계획을 철회하였는데, 왕십리 변전소 사고 등의 사례를 감안하면 안전장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전력시장	○ 전력 정산단가 관련 - 최근 전력거래가격(SMP)의 하락으로 한전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연결재무제표 기준 '13년 1조 5,000억원, '14년 5조 7,876억원)하였으나, 대부분의 LNG발전사의 경우 SMP 하락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 첨두부하발전과 기저발전을 별개로 운영하여 LNG발전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기타 국내사업	○ 에너지 자립섬 관련 -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추진 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였으나, 사업타당성·전력기금 지원예상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문제 -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의 경우 2단계 사업에서 대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을 포함하고 있는데 연료전지는 화석연료(LNG)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에너지자립" 또는 "탄소제로"라고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해수온도차 발전 등 발전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하여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원전·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갈등 회피를 위해서는 ESS의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적극적인 이용·보급 촉진정책이 필요 - 에너지저장장치, 분산전원, 신재생에너지 등 석유·가스·원자력 이후의 에너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도서지역 전력공급 관련 - 현재 도서지역 전력공급은 한전 퇴직자로 구성된 전우실업에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18년간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부정부패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도서지역 전력공급에 대한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전기차 시범사업 관련 - 정부·한전이 예측하는 미래에 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더딘 문제 - 한전이 설치한 충전소 71개소 가운데 실제로 전기차를 보유하지 않은 곳이 35개에 달하는 문제 - 한전이 설치하고 있는 충전기 인프라 상당수가 심야전기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완속충전기인데 이를 주거지역이 아닌 판교역 등 비주거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문제 - 시범사업 종료 후 충전소를 다시 철거하는 등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문제 ○소규모태양광사업자 관련 - 공급인증서(REC)거래시장이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소규모발전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참여가 어려운 문제 - 태양광판매사업자 선정물량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경쟁률이 높아서 다수의 소규모 사업자가 동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 - 한전이 소규모태양광사업자의 REC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해외사업	○ 해외사업 홍보 관련 - 한전이 실시한 10개 해외사업(1조 6,000억원 투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14.12.1에 사업정리 지시를 하였음에도 한전이 '14.12.6에 해외자원개발의 성과를 홍보하는 방송을 계획한 문제 - 한전이 해당 방송사에 4,000만원의 협찬을 약속하였던 문제 ○ 발전공기업이 「공운법」상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되면서 한전이 해당 발전사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어짐에 따라 각각의 발전사별로 성급한 해외 진출이 이루어져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력분야 해외사업은 한전을 중심으로 일원화 할 필요 - 해외발전사업은 한전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발전사들은 운영과 정비에 집중하는 등 한전과 발전사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 개발사업 관련 - 현재까지 총 투자액이 6,800억원에 이르는데 당초 예상에 비하여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문제 - 당초 내부수익률을 15.2%로 예상하였으나 유연탄가격 하락으로 수익률도 당초 대비 2/3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호주 신광업정책 추진 등의 이유로 사업인허가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문제 ○ UAE 원전 관련 - UAE 원전건설에 15개 중소·중견기업이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있는데, A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타절하였으며, 기업의 선지급금·하자보증급 집행요청을 거절하는 등 한전의 하도급 관리가 부적절한 문제 ○ 해외 파견 인력의 윤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파견직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원에 대한 윤리규정 및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할 필요 ○ 해외자원사업(6건) 관련 - 외부전문가 참여 없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충분한 사전조사나 계획수립 없이 무리한 투자를 진행한 문제 - 인도네시아 바얀사 지분의 경우 석탄가격 하락, 루피화 화폐가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인수 대비 1/3 수준의 가격으로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문제 ○ UAE 원전건설 계약 이후 후속적인 원전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해외자산 매각계획을 보면 '14년 아다로, '15년 바얀, 워터베리 등을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매각 실적이 전혀 없음 - 부채감축 목적의 자산매각도 중요하나 구입비용보다 지나치게 헐값에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 ○ 해외사업 진출 당시 검토하였던 내부수익률과 감사원 감사에 따른 예상 수익률이 2~3%(자원개발 6개 사업은 3~4%) 가량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사전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수익률 산정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
전력산업 구조	○ 전력판매시장 개방 시 비싼 전기를 쓰는 대규모 수용가를 중심으로 민간 판매가 활성화되고, 한전은 상대적으로 저수익계층, 농어촌의 전력판매 위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력판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 ○ 경영관리 효율성강화차원에서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5개사를 2~3개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기금의 수입증가로 인한 여유자금 보유수준이 과다하므로 현행 3.7%의 부담금요율을 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 경제성장률 역시 수급계획에서는 3.2%로 예상하고 있어 KDI의 장기성장률 전망(1.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 - 정부가 설비예비율을 22%(최소설비예비율 15%, 수급 불확실성 대비 7%)로 산정함에 따라 연료비 단가가 높은 LNG 설비의 이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경영관리	○ 입찰참가자격제한 후속조치 관련 - 한전이 부정당 업체(허위서류제출, 계약불이행, 뇌물공여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5년 간 272개 업체)을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기간동안 입찰제한을 정지시키고 낙찰을 받고 있는 문제 - 실리기업은 제재효력 정지기간(약 1개월) 뿐만 아니라 제재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즉시 공사계약을 따내고 있으며, LS산전의 경우에도 제재조치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나 제재효력 정지조치가 시작된 직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도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문제 - 현대중공업은 효력 정지 이후 총 83건 1,163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98%의 낙찰률로 계약하였으며, 효성 역시 효력 정지 이후 총 80건, 426억원의 공사를 98%의 낙찰률로 계약하였음. - 현대중공업, 효성, LS산전 등은 입찰제한을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단서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시공자가 없어서 계속해서 계약에 입찰하고 있어 담합 등 납품비리가 우려되는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민간 기업이 소송제도 및 「국가계약법」상 우회경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 ○ 임직원 비리 관련 - 최근 5년간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492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가 100건이나 되고 있는 문제 - 기업과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한전이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 ○ 전자입찰시스템 비리사건 관련 - 부당낙찰을 받은 업체가 알선자에게 공사금액의 2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뇌물이 나주지사의 공사감독관, 중간관리자, 지사장에까지 순환적으로 상납된 문제 - 나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엄격한 사업소 관리가 필요 - 검찰 수사결과 발표된 119개 낙찰 공사에 대하여 45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74건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하였으나, 향후 동일 사례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입찰자격 승인 관련 - 한전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연구원 등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하고 한전이 제시하는 “구매규격”이 바뀐 경우 이를 반영한 새로운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는데, NEP 인증을 받은 경우 현재 제품의 규격이 종전과 바뀌더라도 과거에 받은 시험성적서와 신제품인증을 제출 시험인정을 다시 받지 않고, 한전에 납품이 가능한 문제 - NEP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입찰자격을 획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직원이 가족 등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비위사례가 여러 건 적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마련이 필요 ○본사 나주이전 관련 - 직원 10명 중 7명 정도가 본인 단독이주형태로 정주하여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가족이 모두 이주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정주여건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 - 본사의 지방이전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인 만큼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이전 추진 필요 - 다른 혁신도시에 비하여 한전의 현지인력 정규직 채용비중이 낮은 편(8.5%)이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보다 높일 필요 ○최근 한전의 영업 흑자는 본사부지매각, 유가하락, 전력거래비용 절감 등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므로,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방만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한전·발전사가 한전산업개발, 한전KDN 등 출자회사나 자회사에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민간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쟁입찰을 강화할 필요 ○한전·발전사가 IT 관련 상품을 구매하면서 한전KDN을 중간단계에 개입시켜 10~13%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문제 - 통합정보보호 시스템 발주 시, 한전KDN이 A회사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입찰을 따내었는데, 불과 보름만에 한전KDN과 A회사가 낙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안전관리 관련 - 지난 5년간 총 7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사고도 55건이나 발생하였음에도, 안전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 숫자는 82명에 불과한 문제 - 대부분의 지사가 본인업무와 안전관련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담인력을 보다 확충할 필요 - 안전점검 예방교육 등 안전관련 부서 예산도 연 6억원 수준에 불과한 문제 - 지난 5년간 감전사고 115건 중 도급 직원이 73%(84명)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 - 도급직원 약 2만명 중 한전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람은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 ○ 전주 무단사용 관련 - 통신사 등의 전주 무단사용으로 인한 위약금 규모가 5년간 2,400억원이 넘고 있는 문제 - '15년까지 이를 순차적으로 철거하기로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신규 무단설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 무단 설비 설치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전기계기 조작이나 무단 사용, 무단 증설, 계약종결 위반 등으로 한전이 청구한 위약금 규모가 2,808억원인데, 이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문제 - 해당 위약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재판의 62%가 종료되었음에도 회수 금액이 3.2%에 불과한 문제 ○ 최근 5년간 도전(盜電)으로 인한 피해액이 1,300억원을 넘고 있는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특히 한전직원의 도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 ○ 종별요금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고객 위약금의 경우 당사자의 항의로 이를 할인하여 주는 사례가 있는데 항의여부에 따라 위약금 규모가 달라지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여 공평한 집행을 실시할 필요 ○ 한전산업개발의 자회사인 대한광물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역주민·지역 중소기업에 3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문제 - 한전이 한전산업개발의 주주로서 지역 소상공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매년 R&D예산으로 3,000억원 가량을 편성하고 있으나 집행률이 60%에 불과한 문제 - 일부 과제의 경우 사전에 면밀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사업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 ○ 발전자회사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한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문제 - 발전사 복리후생비 등 자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

5. 한국수력원자력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 세척제 사용 관련 - 오버홀(overhaul) 기간에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척제(MC-2)에 들어있는 성분(디클로로메탄, 디클로로프로판)이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라는 문제 - 동 세척제로 인한 피해는 해당 오버홀(overhaul) 기간에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받는다는 문제 - 사업장별로 동 제품의 구매·사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필요 ○ 원자력발전의 갈등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추가적인 원전건설이 어려운 시점에서 ESS 등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 ○ 한전산업개발과의 잘못된 수의계약으로 약 90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발전사가 한전산업개발에 비주력 전기분야에 대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문제 ○ 공기업 업무평가 등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문제 ○ 제어밸브 플러그 관련 - 신고리 3·4호기에 사용 예정이었으나, 납품사(GE)가 ASME 코드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여 이를 전량 리콜하였는데, 한수원이 이를 리콜전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문제 - 품질서류에 열처리에 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음에도 이를 한수원이 가려내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늦어진 문제 ○ 해수냉각계통 역지밸브 관련 - UAE 원자력 공사가 해당 부품에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를 1년 이상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은 문제 - 국내 원전 12개 호기에도 동 부품이 사용되고 있는데 규제기관의 코드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부품을 사용한 문제 ○ 제어밸브 플러그, 역지밸브 등의 문제로 신고리 3호기가 UAE 원전 계약 조건인 목표 준공일('15.9월)을 지키지 못하여 이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등 추가적으로 약 3,000억 원 규모의 기회비용 손실이 예상되는 문제 ○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 관련 -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심의를 앞두고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의 기기검증 실패 결과를 공급업체인 두산중공업으로부터 구두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문제 - 해당 제품의 오류로 해당 부품을 제작한 ㈜우진은 '불일치 보고서'를 발행했고 공급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이를 한수원에 통보하였음에도 한수원은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문제 - 이미 검증실패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는 문제 -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할 필요 ○ 원전 해체관련 기술수준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므로, 폐로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장기프로그램을 세울 필요 ○ 원안위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검사에서 국내 24기 원전 중 16기의 핵심 부품에 오류가 있었던 문제 - 지난 30년 동안 실질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용접부위가 아닌 다른 부분(나사 접합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온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해당 사안으로 검사기관을 제재조치 하여야 하나 총 5개 기관 중 4개가 연관이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문제 ○ 신한울 1·2호기 건설지연 관련 - 두산중공업에서 제작하는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납품지연으로 신한울 1·2호기의 건설이 1년 가량 지연되고 있는 문제 - 해당 제품은 국산화로 인한 수입대체효과를 거두었다고 홍보하고 있는 제품이나, 검증 강화 이후 제작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 8개월 이상 납품 지연된 22개 품목의 경우 UAE원전과 연동되어 업체의 제조능력이 미달하여 국내 원전 사용물량이 후순위로 밀려남에 따라 공사대금 연장 및 납품업체와의 지체상금 등 많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문제 ○ 원전 폐로비용 적립 관련 - 국회의 지적으로 1기의 폐로비용은 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2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12기에 달한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많은 호기의 폐로비용을 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영업이익금을 폐로비용으로 충당하지 아니하고, 화사채를 발행하여 이를 충당금으로 적립함에 따라 1.77%의 금융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 회사채로 폐로비용을 적립한 반면, 지난 10년간 한전에 배당금으로 2조 2,000억원을 지급한 문제 ○ 현재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나 중국과 동시 가입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고리2호기 가동정지 관련 - 부산지역 폭우로 고리2호기 가동 정지된 이후 5개월간 시행된 점검결과 총 87건의 고무패드 형상 불일치를 발견한 사실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조속히 도면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실시할 필요 ○ 한빛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 관련 - 세관누설을 감지하는 방사선 감지기 6개 중 5개가 작동하지 않아 더 많은 방사능이 누출된 문제 - 발전소 정지 후 재확인한 결과 이물질에 의한 세관 손상으로 확인되었는데, 15년 가까이 이와 같은 이물질의 존재여부를 모른채 운전을 한 문제 - 6개월 간의 정비 후 재가동하였으나 원자로냉각재 펌프 제어카드 고장으로 1주일 만에 다시 원자로가 정지한 문제 (QBD 등 품질 관리가 부실한 것이 주요 원인)
안전 및 보안	○ 원전 방호조치 관련 - 국내 원전은 모두 해안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원전본부 내의 군부대 및 청원경찰이 육상방어만을 담당하고 있어 바다로부터의 테러 및 공격에 취약한 문제 - '15.8.22 북한 잠수정 50척 이탈 시에도 한수원이 지역 해군부대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던 문제 -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잠수정 등 해양에서의 타격에 대한 방어매뉴얼을 수립할 것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비중을 낮추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출 필요 - 통상적인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고려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총 46건의 후속조치 계획 중 12건이 여전히 완료되지 못한 문제 ○ 총 시험성적 조사건수(약 28만건) 중 35%인 97,000건의 경우 성적서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국민안전처·원안위 안전점검 결과 원전 24기 모두의 화재방호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된 문제 - 원료저장탱크, 방폭형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이 전혀 없으며 무선 통신기능도 없는 문제 ○ 정보 보안 관련 - 정보보안 교육 참여율이 기존 80% 수준에서 '14년에 45% 수준으로 급락한 문제 - 한수원 사이버테러로 인한 '14.12.30 보안대책 마련 이후에도 내부징계 조치 83건 중 46건이 보안규정 위반으로 나타나 직원의 보안의식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 - 신입사원에 비하여 재직자의 정보보안 교육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한 문제 - 한수원이 그동안 기술정보관리지침 없이 정보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문제 ○ 보안USB 관련 - 한수원이 도입한 보안 USB는 해킹을 방어하는 기능이 전혀 없는 문제 - 보안USB를 도입한 이유는 자료전달 과정에서 분실 사고를 막기 위함이지 해킹방어를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USB 도입으로 해킹에 대하여 보안적으로 나아진 바는 없다는 문제 - 해킹방지를 위해서는 자료전송 전용망과 유통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필요
기관운영	○ 임금피크제의 타당성 여부를 논외로 하고, 개인에게 강압적으로 개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회사측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한수원 및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발전기가 최근 5년간 고장으로 1만 3,000시간 정지함에 따라 대체전력구입비용이 약 1조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원 가량 발생한 문제 - 고장 이유의 상당부분이 보수불량으로 나타난 문제 ○「발주법」은 반경 5km이내의 지역에 대한 지원만을 실시하고 있어 그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 ○현재 사내복지기금으로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문제 - 고용노동부 역시 무상지원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 - '10년부터 지적된 사항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나 노사합의를 이유로 5년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모든 직원이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울진 골프장 관련 - 직원 복지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을지연습 기간에도 '12년부터 '15년까지 꾸준히 직원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문제 - 한울 1호기의 제어봉이 떨어져 가동정지 된 30일 기간동안에도 한울원전 직원만 233명이 골프장을 이용한 문제 ○입찰참가자격제한 후속조치 관련 - 한수원이 부정당 업체(허위서류제출, 계약불이행, 뇌물공여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10년부터 236건)을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기간동안 입찰제한을 정지시키고 낙찰을 받고 있는 문제 - 소송기간 중 가처분신청을 하여 계약한 것이 146건 1,541억원에 달하는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고위직 방사선 피폭선량 관련 - 현재 재직중인 고위직 23명의 누적방사선량이 전체 종사자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문제 - '02년 이후 누적 피폭선량을 보면 23명 중에서 2명만이 1mSv를 넘고 있으며, 9명은 피폭선량이 0mSv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법정기준: 1시간에 60~90mSv) - '13년 이후 1차 계통에서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위직 임원 23명의 피폭량이 0mSv라는 점에서 원전사고시 고위직이 전혀 현장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현장운영을 총괄하는 엔지니어링 본부장 및 원전품질을 총괄감독하는 품질보증실장이 가동중인 발전소에서 근무한 연수가 각각 2.2년, 2.4년에 불과한 문제 ○ 한수원 직원에 비하여 한전KPS 및 협력업체의 피폭량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 한수원이 협력사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줄 필요 ○ 강릉수력발전소의 경우 도암댐 건설에 1,250억원이 들었음에도 '01년부터 15년간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문제 - 수질오염문제 등 하류 주민들이 제기하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동·폐쇄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도출할 필요 ○ 수의계약 및 임직원 재취업 관련 - 한수원이 '08~'14년까지 발주한 20조 9,000억원 중 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위 4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문제 - 해당 4개 기업에 공기업·부처 퇴직자 19명이 고위직 임원으로 재취업한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상위 46개 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계약 건수는 전체의 8%에 불과하나 계약금액은 61.5%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에 산업부·공기업 퇴직자 72명이 취업하여 있는 문제 - 지나친 수의계약으로 계약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쟁입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 관련 - 동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이나 부당한 고액 강의가 발생하는 등 협력업체와 한수원 임직원의 유착관계가 포착되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시 등 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수원 부설 연구기관(방사선보건원, 중앙연구원, 인재개발원)의 경우 본사 이전에도 불구하고 경주로 이전하지 않고 있는 문제 ○ 한전KPS가 수행하던 원전 정비용역을 공동도급을 통해 특정 1개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문제 - '04년 1월 당시 유자격 업체가 한전KPS 1곳에 불과하였는데 석원산업을 3개월 이내에 원전기술관리자를 확보하는 조건부로 유자격 업체로 등록해 주고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부여한 문제 - '15년 3월 2개 업체를 신규로 등록하였으나 이 업체들은 화력발전 영역에서 정비물량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업체인 문제 - 새로운 정비업체를 육성하여 정비분야의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 ○ 직무수행능력제도(JQC) 관련 - 수력·양수부분 종사자의 경우 JQC 인증서 확득 비율이 19%에 불과한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삼척・영덕지역 신규원전건설 관련 -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당 지역의 여론이 원전유치반대로 변화하였음을 감안할 때, 신규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수용성 여부를 다시 고려할 필요 - 영덕원전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수준과 정부의 지원수준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여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문제 ○ 8조원에 달하는 해외 수력발전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수력발전에 대하여 보다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 ○ 물품계약 시 구두지시 관련 - 한수원이 A업체에 물품을 최대한 빨리 공급할 것을 독촉하면서 서류구비 절차를 무시하고 지시를 하여 시험성적서 위조가 발생하였는데, 그 책임을 온전히 A업체에서 부담(입찰정지 3개월)하게 된 문제 ○ 원전연료 운반선 계약 관련 - '0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13년까지 두 개의 회사와 번갈아 가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었던 문제 - '13년 8월 다른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고부터 낙찰률이 90% 이하로 떨어진 문제 - 산업통상자원부가 회사 간 담합여부 뿐만 아니라 한수원 내부거래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조사할 것 ○ 고졸채용 관련 - 정부의 고졸인원 채용장려 정책에 따라 고졸인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중퇴자, 기술자격보유자 등이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한빛원전 방유제 관련 - 방유제의 설치유무에 따른 어업피해 정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어민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조치할 필요 ○ 고창군과 같이 원전소재지가 아니더라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수원이 고창지역 감시기구 설치에 대하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발전사 당기순이익 대비 신재생 R&D 투자비중이 저조한 문제
원자력안전위원회 연관	○ 4개 원전지역의 원안위·KINS(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주재관이 강의료 명목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를 허위로 신고한 문제 ○ 원전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보관하는 갑상선 방호약품의 경우 미국·캐나다 등 현지에서는 유통기한이 7년이나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면서 그 유통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제 - 갑상선방호약품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현황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고 있는 문제 ○ 신고리3호기에 대한 운영허가와 관련하여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철두철미한 심의를 실시할 필요

6.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발전사 공통	○ 세척제 사용 관련 - 오버홀(overhaul) 기간에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척제(MC-2)에 들어있는 성분(디클로로메탄, 디클로로프로판)이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라는 문제 - 동 세척제로 인한 피해는 해당 오버홀(overhaul) 기간에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받는다는 문제 - 사업장별로 동 제품의 구매·사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필요 ○ 임금피크제의 타당성 여부를 논외로 하고, 개인에게 강압적으로 개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회사측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발전사 당기순이익 대비 신재생 R&D 투자비중이 저조한 문제 ○ ESS 등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 ○ 한전산업개발과의 잘못된 수의계약으로 약 90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발전사가 한전산업개발에 비주력 전기분야에 대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문제 ○ 공기업 업무평가 등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문제 ○ 한수원 및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발전기가 최근 5년간 고장으로 1만 3,000시간 정지함에 따라 대체전력구입비용이 약 1조원 가량 발생한 문제 - 고장 이유의 상당부분이 보수불량으로 나타난 문제 ○ 「발주법」은 반경 5km이내의 지역에 대한 지원만을 실시하고 있어 그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므로 각 발전사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 ○ 현재 사내복지기금으로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문제 - 고용노동부 역시 무상지원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 - '10년부터 지적된 사항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나 노사합의를 이유로 5년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모든 직원이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암모니아 측정기 관련 - 발전소에서 운영중인 탈질설비는 배기가스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기 위해 촉매제로 암모니아를 사용 중이나, 암모니아는 발전소 주변 대기오염 및 악취 유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탈질설비에는 암모니아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모든 발전사의 암모니아 측정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발전5개사가 이를 시정조치 하지 않은 문제 - 암모니아 과다 배출 시 에어히터 입구가 막혀 발전기 가동이 안 될 우려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제 ○ 출자회사 관련 - 발전5개사의 출자회사가 전체 에너지공기업 출자회사의 36%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3년 연속 적자이거나 자본잠식을 겪은 기업이 33%(28개)에 달하는 문제 - 출자회사의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발전자회사 퇴직임직원이 재취업하여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문제 -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현황과 재무상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부실자회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비계획정지 관련 - 비계획정지 시 한국전력거래소로 해당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소는 현장실사 없이 발전사 통보내용대로 처리하고 있는 문제 - 대부분의 원인이 설비결함·보수불량 등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검증 없이 넘어가고 있는 문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관련 - 석탄·우드펠릿의 혼소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우드펠릿을 수입하여 RPS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 - 일부발전사의 경우 RPS 의무량의 대부분을 우드펠릿으로 충당하고 있는 문제 - CO_2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우드펠릿의 사용보다는 유연탄을 쓰면서 CO_2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우선할 필요 - 우드펠릿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석탄보다 효율성이 훨씬 떨어지는 문제 ○ 발전자회사 구조개편 관련 - 화력발전공기업을 특별한 기준 없이 5개로 분류함에 따라 발전사 간 과도한 경쟁 및 무분별한 출자회사 설립 등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2~3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출장비 관련 - 허위출장계획을 작성하여 조성한 출장비를 공통경비에 집행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 ○ 발전소 내진설계 관련 -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발전공기업 등은 화력발전소 등을 설계할 때 주요 설비가 건축물 등의 구조체에 연결되는 정착부의 내진설계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진성능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을 검토하여 지진 발생 시 주요 설비가 손상되거나 발전소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15년 현재까지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의 내진설계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문제 ○ 발전교육원 비리 관련 - 발전교육원에서 금품수수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문제 - 발전교육원이 각 발전사가 20억원씩 투자한 금액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발전사가 책임있게 운영을 감독할 필요 ○ 발전사가 '14년에 발주한 경상정비공사(3,800억원) 중 지역기업과의 계약은 단 1건도 없는 문제 - 「국가계약법」 상 지역제한경쟁입찰은 광역자치단체 규모일 때 가능하나, 5개 이내의 공동수급체 구성 시 발전소 소재지 기업을 2개 기업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발전사에서 수소·산호·헬륨 등의 가스를 인근지역기업에서 받고 있는데 "연간 발주물량이 계약물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주를 거부할 수 없다"는 특수조건을 붙이고 있는 문제 - 공급방법에 있어서도 부족분의 공병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공병으로 가스를 공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 ○ 온실가스 감축 관련 -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발전5사는 석탄화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여야 하나 현 국내 전력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적 이익과 온실가스감축 필요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별발전사가 노력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발전사가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음. 발전사가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원가에 반영되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 정부가 정해놓은 계획을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형성시키지 못함에 따라 발전공기업이 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는 문제 ○ 발전사 분할 이후 직원수 증가율(18%)에 비하여 간부의 증가율(64%)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 남동발전 본사의 경우 3급 이상 간부가 177명인데 직원이 88명에 불과한 문제 ○ 회처리 시설 관련 - 화력발전소 회 처리 설비는 특수공정으로 국내에 소수업체만 입찰 참여 자격을 갖고 있는데 일부업체가 이를 악용해 담합을 벌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 - 다수 유찰 끝에 발주처 예정가격을 높여 낙찰받은 문제(낙찰률 역시 지나치게 높음) - 산업부가 엄격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되도록 조치할 필요 ○ 대형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 1,000MW급 대형 석탄발전소 건설 시 하도급 업체의 계약액 대비 실제 공사금액이 과도하여 협력업체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 - 선행호기 실적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부담을 보일러시공업체 등 하도급 업체로 전가하고 있어 중·소규모 시공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한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하도급 계약서에 “물량내역서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도급법」 상 부당한 특약의 금지를 위반한 소지가 크므로 감사원 감사청구 또는 공정위 조사 필요 - 원청업체와 하도급간 계약은 물량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발주자가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 원청업체가 계약금액을 조정해주지 않는다는 원청사와 하도급사간의 계약서 조항이 있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임 - 발주자가 사업자에게 야간작업·돌관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문제 ○ 한수원이 최근 노사 간 합의로 6급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통합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발전5개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중부·동서·서부발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관련 -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R&D를 제안해놓고 사업취소, 예산부족, 가격경쟁력 등을 이유로 실제 구매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 - 발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한국 남동발전	○ 삼성디스플레이, 제일모직, 남동발전 3사가 공동협약으로 진행한 태양광 사업(남동발전 49억원 투자)에서 전력 케이블 화재로 분전반이 전부 타는 사고가 발생한 문제 - 계약서 상 연간 1,506MWh를 남동발전이 얻지 못하면 kWh당 3,649원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 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전사는 3년 동안 한 번도 계약발전량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 남동발전은 내부 신고제도를 익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A의 경우 내부비리를 감사실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2차례의 징계와 함께 거주지와 떨어진 사업소로 강제 인사조치한 문제 - 내부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지 않은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 사항임 ○ 사택구입비 관련 - 남동발전이 정부 승인없이 74억 7천만원을 사택구입과 신축에 사용한 문제(총 234억원 중 159억 1,500만원에 대하여만 정부승인) - 복리후생·본사이전은 사장결재사항임에도 기획본부장결재로 예산을 집행한 문제 - 관련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 ○ 영흥화력 5·6호기 공사비 정산 관련 - 공사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고 보일러 전문 시공업체와 조정이 진행 중임. - 남동발전과 시공사가 공기단축을 위한 돌관작업비 지급에 합의한 이후 공사를 강행하자 노조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는데, 남동발전이 공기를 준수할 경우 임금인상분에 대하여 정산해주겠다고 한 이후 정산시점에는 인상근거가 없다고 하여 갈등이 발생한 문제 - 명확한 작업지시서 없이 구두로 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변동에 대하여 중소 하청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 ○ 영흥 6호기 발전기 특성시험 중에 발생한 사고로 18일간 발전기 가동이 중지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은닉한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미국 노버스 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셰일가스 등 외부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낙관적인 수익률 전망에 따라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현재 135억원 규모의 지분손실과 272억원의 순손실(누계액)이 발생한 문제 ○경량골재공장 운영관련 - 인공경량골재 생산을 위해 남동발전은 A업체와 동업하여 공장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A업체 참여포기로 남동발전이 시설자금 전액을 부담한 문제 - 공장신축 228억원, 지체상금미수 60억원, 운영인건비 30억원, 계획예방정비공사비 10억원 등 현물로 투자한 공장부지 2만5000㎡를 제외하고도 328억원이 넘는 투자비가 집행되었음에도 연간 수익금이 4,000만원대에 머물고 있는 문제 - 산업부의 자체감사를 통한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
한국 중부발전	○발전자회사의 '10년부터 비계획정지(불시정지) 건수를 보면 총 380건의 정지건수 중 중부발전이 118건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 ○말레이시아 바이오열병합발전의 경우 정부정책·지자체반발 등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간 상황임. 해외사업 진출 시 경제성뿐만 아니라 현지의 정치적인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한국 서부발전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관련 - IGCC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선진국의 기술장벽이 높아지기 전에 기술자립도를 제고할 필요 - IGCC와 CCS(탄소포집저장)을 연계한 기술개발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IGCC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실시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정부·공기업(서부발전)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향후 기술개발로 48~50%의 효율달성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동 사업(정부실증과제)의 목표효율은 42%이고, 주기기 설계사의 보증효율도 40.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문제
한국 남부발전	○남부발전이 출자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인 대륜발전의 경우 누적 당기순손실이 264억원에 달하는 문제 - 정부의 공급위주 전력정책에 무리하게 편승하여 부실한 기업설립을 추진한 문제
한국 동서발전	○호남화력 관련 - 호남화력은 73년에 건설된 노후발전소로서 '21년까지 가동할 예정인데, 이후 이를 대체할 신규발전소 역시 동일한 입지에 건설하여 신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 할 필요 ○필수 유지인력 관련 - 통상임금 상승에 발전운전원 겸직 등과 같은 필수유지업무 보직축소로 대응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7. 한국가스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해외자원 개발	○ 캐나다 웨스트컷·혼리버 사업의 경우 이사회 보고시 수익률은 12.6%였으나 현재 1.9%이고 호주 GLNG의 경우 98억 불 투자이후 회수 실적이 없는 등 21개 사업 중 16개가 이사회에 보고한 수익률보다 낮은 상황임 ○ 이라크 아카스에 1,476억원, 만수리야에 174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웠으나 IS 세력 장악 및 치안문제 등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시 국가위험 평가부문을 무시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국가위험 평가부문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두 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기발주한 투자액 등 투자계획 세부내역을 제출할 것 ○ 해외자원개발 결과 국내 천연가스 도입량은 연간 수요량의 6.2%에 불과한 226만톤(2014년)에 불과함 ○ 투자리스크가 작고 민간기업 동반진출이 가능한 기술연계(EPC) 사업 확대 필요 ○ 22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공사직원을 파견한 것은 10개 사업에 불과하고, 파견된 직원 중 약 76%가 복귀 후 관련없는 부서에 배치되어 역량 활용이 어려우므로 인사방식을 개선할 것
천연가스 도입	○ 가스공사가 중국에 비해 더 많은 LNG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LNG 도입가격은 오히려 중국보다 높은데, 공사는 계약 조건에 명시된 가격재협상을 활용하여 도입단가를 낮춘 사례가 2005년 이후 한 번도 없으므로 도입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스팟도입으로 인한 가격변동 및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LNG저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가스저장률은 12.1%로, 프랑스 30%, 독일 26%, 미국 19%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12차 장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LNG 저장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여 반영할 것 ○ LNG 도입계약시 약정물량을 구입하지 못한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LNG 복합화력 이용률 저하 등으로 국내 가스수요는 감소되는 상황이므로, 제12차 천연가스수급계획에 장기 공급계약의 가스물량이 남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 통합수급관리체계를 구성할 것 ○ 구입한 LNG의 이송 중 하역지에서의 재판매 제한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최근 5년간 LNG 도입시 감량권을 행사한 것은 2차례에 불과하여 가스가격 하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물량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정부의 가스가격 동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검토 할 것
도시가스 요금 및 보급 개선	○ 산업용 가스요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장애인·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였음에도, 가스요금 총 경감액과 시설별 평균 경감액은 감소하였고, 농어촌 지역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공사 자체 공헌사업인 온누리 열효율 개선사업을 통한 지원액은 14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 대비 미미한 수준이므로 지원폭을 확대할 필요 ○ 가스공사가 가스 주배관을 건설하였으나 도시가스사가 경제성을 이유로 소매 배관망을 건설하지 아니하여 일부지역(거제도)에서 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경북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50% 수준으로 전국 평균 보급률 79.9%보다 매우 낮음에도 독점적 지위의 지역사업자는 영업이익을 투자하지 않고, 정부의 융자도 받지 않고 있으므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대책 검토 요망 ○ 금호타이어에 대한 해양도시가스사의 용도 오적용으로 가스공사 광주전남본부는 해양도시가스사로부터 가스요금 108억원을 받지 못했으나, 의원실의 가스요금오류내역 자료요청 및 답변 과정에서 이를 고의 누락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 가스공사가 주배관망의 문제 등의 사유로 발전소에서 요구하는 발전터빈에 필요한 압력보다 낮은 압력으로 가스를 공급하여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LH공사의 아산 배방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LNG 공급기지 시설 준공이 가스공사의 귀책사유로 연기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LH공사는 중부도시가스에서 가스공급을 받게 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했음에도 계약서에는 가스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이른바 '갑질'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관리	○ 임직원이 협회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항공임 등을 받아 해외출장을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생략하거나,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비즈니스 항공을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전직 가스공사 사장의 사례와 같이 LNG 예인선 업체 대표 등으로 낙하산 취업을 하거나, 퇴직자 모임인 'LNG 사우회'가 출자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하고 사우회에 3억 5,000만원을 기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가스공사가 발주한 20여 개 건설사와의 계약이 담합판정을 받아 1,746억원 과징금 결정이 있었는데 특별사면조치로 부정당업체 지정이 해제된 상황이므로, 입찰담합 포착 시스템을 차질없이 개발하고 소송을 통해 담합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것
안전관리, 연구개발 및 기타	○LPG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가스공급 시범사업에 가스공사가 참여하는 방안, 조선산업과 연계하여 LNG 에코십, 벙커링 등의 클러스터 연구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검토하여 보고할 것 ○인천송도지역 LNG 설비 증설을 위한 주민설명회 과정이 미흡하므로 여러차례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것 ○R&D 과제 중 절반이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가스분석기를 5개 부처에서 각각 구매하는 등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지방이전 이후 대구지역에 기여가 미흡하므로, 압축설비 등 주요시설 발주시 대구시와 협의하는 등 지역협력사업을 강화할 필요 ○공정위로부터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부당 감액 6건 9억 3000만 원, 지연보상금 미지급 3건 2억 8000만 원, 계약보증수수료 20건 2643만 원, 간접비 4건 3923만 원, 총 33건 12억 7885만 원을 국내 중소기업에 미지급한 것을 지적받는 등 이른바 '갑질' 사례를 시정할 필요

8. 한국석유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해외자원 개발	○ 감사원 감사결과 중간발표에서 169개 사업에 35.8조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사업유지를 위해 48개 사업에 46.6조원을 추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비축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분사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방안 등 수습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하베스트 인수관련, 인수타당성 검토를 인수자인 석유공사가 직접 수행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지질자원연구원이 지적한 1조 2천억원 손실가능성 의견도 무시하였는 바, 석유공사의 회생을 위해 인수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하며 공사 스스로 당시 업무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절차 필요 ○ 하베스트의 경우 날(NARL) 이외에도 약 3억 1,000만불의 손실이 있었고, 약 1조 6,000억원의 설비투자를 실시한 블랙골드 사업은 생산이 개시되지 않고 있으며, 공사가 성공 사례로 제시한 다나의 경우 인수 당시 대비 매장량이 약 9,000만 배럴 축소되어 이미 1조 7천억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디폴트 위기로 3억불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공사는 비축 분야를 제외한 사업을 중단해야 함 ○ 하베스트는 NARL을 정리하였음에도 10억 캐나다달러를 지급보증 해 주고 캐나다 달러 1억 9000만 불을 융자하는 등 부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79개 그룹 중 5개가 생산을 중단하고 은행 채권단도 3개가 중도 이탈하였으며, 이사회에서도 디폴트 우려 지적이 나왔고, 투자유치 2건도 무산되는 등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임. 이는 유가하락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부실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방안 및 손상처리를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할 것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유전개발시 추정매장량을 100% 인정하여 자산을 과대 평가하였고, 자주개발율이 투자의 결정요인이 되는 것을 경고하는 외부용역결과를 왜곡하였는 바, 투자기준 수립과정에서의 외부압력 및 보고서 왜곡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 필요 ○이라크 쿠르드 사업은 사업생산성이 있어 자체 투자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한 사업인데 2016년 예산안에서 정부 출자를 요청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향후 지원없이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은 중단하고, 다나 등 다른 부실사업에 대한 공사 독자적인 손상처리 및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 ○카자흐스탄 잠빌사업은 지분 인수 대가, 발견 보너스, 개발비 등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였는데, 시추결과 상업적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판명났고 2천억원의 손실만 초래하였으나 결과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 ○지난 8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석유공사 2억 5,200만원을 포함해 자원 3사 4조원에 육박하며, 향후 4년간 석유공사 2조 1,000억원을 포함해 4조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사는 정부에 향후 5년간 1조 3,500억원의 출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원 3사가 계획한 해외매각계획 2조 1,200억원 중 실제 매각액은 3,900억원에 불과함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승인이 없었다면 자체 결정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인 출자를 할 이유가 없으며, 당시 석유회사 M&A 추진계획에 부사장 자격으로 결재한 현 사장은 책임을 질 필요 ○現 사장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월 작성된 ‘석유회사 M&A 추진계획’에는 인수후보기업에 하베스트가 없었는데, 2009년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인수협상기간이 2개월에 불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3월부터 하베스트 인수 물밑협상을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실시했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필요 ○ 자회사 운영시 2,000만불 이상의 투자는 자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2013년 이후 총 8건의 이사회 중 공사가 의결에 참여한 것은 2건에 불과하여 자회사의 운영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관리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해외운영 탐사광구 관련, 관리절차서 등을 운영 중이나 공사 자체감사결과 절차서가 지켜지지 않으며, 시추추진 기본계획 또는 시추위치 선정 등의 승인절차 없이 시추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 베트남 11-2광구에서 컨덴세이트 저장시설 임대 계약연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170만불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본사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도 주의에 그쳤으므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기능부서에 있는 팀원 1인이 리스크 요인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리스크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설립목적인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만 충실하도록 사업별 전략을 수립하고, 구조조정, 매각, 청산 등 단계별로 정리할 필요 ○ 하베스트 매입 이후 엑센츄어에 21억원을 지급하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고, 자문결과 NARL에 대한 관리 노하우가 없다는 우려를 제시하였으나, 이 지적은 공사의 운영매뉴얼 작성과정에서 한 줄 정도 반영된 것에 불과해 사업실패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음 ○ 메릴린치, 엑센츄어 등 자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므로 자문사를 감독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별도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필요 ○ 현재 공사가 보유중인 시추선은 이미 30년을 넘었으므로 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추용선료 및 시추선 건조에 따른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추가 시추선 건조를 검토할 필요 ○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 조달시 공기업이 손실을 100% 책임질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現 사장이 런던 지사장 및 공사 고문으로 재직하던 시절 다나를 인수하고 성공적인 인수로 평가하였으나, 현재 매장량이 축소되고 자산가치가 하락하였음 ○ 메릴린치 손자회사인 BGI가 하베스트 매입과정에서 내부정보에 의한 부당거래로 이익을 실현했으므로 이를 미국 증권거래소에 고발해야한다는 국정조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고발을 적극 검토하여 실시할 것
석유 비축	○ 국제유가가 하락한 지금이 비축유 구입의 적정시기이므로 비축유 구매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04~'05년 약 813만 배럴의 비축유를 판매한 이후 운영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재구매하였어야 하나,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10년이 지난 2014년 말 현재 536만배럴만 재구매한 상황인데 오일허브에 349억원을 투자하면서 부채만 확대되고 있음 ○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간은 2년, 연장시 6개월로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규정하고 있는데, GS칼텍스에 6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6년간 계약을 지속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여수지역 비축기지 추가건설 과정에서 주민반대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피해발생시 보상에 대한 약속 등을 포함한 설명노력을 강화할 것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알뜰주유소 운영	○ 알뜰주유소 중 일반주유소 대비 가격차가 50원 미만인 경우가 절반 이상, 동일가격 또는 비싸게 판매한 경우가 8.9%이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 ○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ex-oil'로 간판을 변경하고 작년 7월부터 별도입찰을 실시하고 있어 알뜰주유소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므로, 판매물량의 50% 미만을 공급받는 경우 계약서대로 부과금 등의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알뜰주유소가 평균 가격대비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대도시 소재 비중이 20% 수준으로 낮고 셀프주유소 비율이 높은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등 불법행위도 알뜰주유소가 평균에 비해 23.3% 높은 수준이며, 인센티브 감소로 인해 폐업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알뜰주유소의 정상화방안을 강구할 것 ○ 알뜰주유소 운영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마진 규모가 79억원에 이르므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감축방안을 마련할 것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관리	○ 인건비 인상 등을 이사회 승인없이 집행한 사례, 이사회 개최 당일 안건이 배포되는 사례 등을 볼때 이사회가 감독 및 통제 역할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사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공사가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도 지난 4년간 임직원 기념품 약 42억원 지출되었고, 실적수당이 73.3%,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157.1% 등 44억 3770억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163억원을 출연하는 등 복지혜택 관련 비용지출이 큰 상황이므로 임직원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비위로 파면까지 당한 직원에게 퇴직금까지 주는 현행 규정을 개선할 것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퇴직자 3명이 차린 회사에 150억 일감을 몰아준 사례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입찰기준을 개선·강화할 것
연구개발 및 기타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에 6년간 연평균 308명의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500억 지원하였는데 지난 해 교육 이수자중 취업한 인력이 작년 4.2%불과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9.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지역난방공사의 출자회사 중 휴세스, 위례에너지서비스 등은 재무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공사의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하여 낙하산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지역난방공사가 현직 사장의 친인척, 정권 관련 인사 등을 채용하고, 현직 사장의 연고지에 위치한 특정 문화재단을 수차례 후원하는 등 비리 의혹이 있어 현재 국무조정실의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비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필요 ○지난 10년간 주주배당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향후 대규모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투자 여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당 확대에 따라 투자여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배당수준을 결정할 필요 ○4,800평 크기의 고양사업소를 청소원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난방공사의 내부 규정에 청소가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우 기간·횟수에 관계없이 재청소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청소용역의 업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
사업운영 관련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GHP)사업은 배관망이 공급장으로부터 57km 떨어진 곳까지 설치할 예정이어서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 기준(10km)를 위반하며, 수도권에는 이미 열공급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중복투자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행 분리배관시스템에 비해 통합배관시스템이 에너지절약효과 및 비용절감효과가 있으므로, 통합배관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필요 ○공사가 열 요금을 잘못 산정하여 과다 징수된 246억원의 요금 중 6,600만원은 아직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적극적으로 환급 조치를 마련할 필요

10. 대한석탄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해외사업	○몽골 홋고르 탄광에 40억원을 출자하여 274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최근 운영비로 19억원을 추가 투자하였으며, 도로 등 인프라 부족으로 매각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탄광 매각 및 투자액 회수 대책을 마련 필요

11. 한국광물자원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부채감축 계획 관련	○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자원공기업 3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에서는 2조 1,193억원의 매각계획을 세웠으나 매각실적은 3900억원(18.6%)에 불과하여 공사가 부채감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 ○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인해 공사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고, 투자액에 대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합병·청산 등 구조조정 절차와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해외자원 개발사업 전반	○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대상자 선정 시 개인사업자에게 보조율을 10% 우대해주는 등 우대지원을 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공률도 낮고, 보조금 지급 이후 사후관리도 미흡하므로 개인사업자를 우대하는 보조금 지원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 ○ 이사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내부수익률(IRR)이 투자를 위한 최소 내부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여 보고하였다는 문제를 지적 ○ 자문단 없이 사업 리스크와 경제성을 평가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투자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
해외 자원개발 사업별 문제점	○ 볼레오 동 사업 관련 -투자결정과정, 투자비 증액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 없이 내부경영진 및 임원단의 자의적판단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참여를 강화할 필요 -미국 수출입은행(US EXIM) 보고서에서 바하마이닝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고, 볼레오 동 광산에 대한 컨설팅 회사의 리포트에서 해당 광산 채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등 외부 전문기관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강행하였다는 문제를 지적 ○ 암바토비 니켈 사업 관련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암바토비 사업의 운영사인 쉐릿(Sheritt)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여 2019년까지 3,900억원의 차입금을 대납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 -2016년 투자계획서에 따르면, 광물공사가 쉐릿사의 차입금 총 1270억원을 대납할 계획이나, 운영사의 차입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꼬로꼬로 동 사업 -광물공사가 해당 사업 철수를 결정한 이후 해당 사업에 컨소시엄 투자를 한 민간기업이 도산위기에 놓였으며, 철수 과정에서 공사주재원이 개인적인 용무에 25억원을 집행하는 등 부패가 발생했다는 문제 지적 ○ 산토도밍고 동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캡스톤사(社)의 지분을 광물자원공사가 1,961억원을 지급하고 인수하였으나, 현재 시장가치가 214억원으로 손실액이 1,747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손실액에 대한 회수대책을 마련할 필요
국내 사업 관련	○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혜인자원, 에너켐, 양양철광 등 7개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160억원, 누적 적자가 1,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부실 투자사업에 대한 정리 등 대책을 마련할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필요 ○ 에너캠에 170억원 지분투자를 하여 암바토비 중간산물을 국내에 반입해 제련하는 수직계열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나, 투자 결정 시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중간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현재 사업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문제 지적 ○ 국고보조금 지원의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양양철광산에 국고보조금을 36억원 지원하였다는 문제 지적
경영관리	○ 면접자의 면접평가점수를 조작하고 위조경력서를 묵인하는 등 채용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채용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 절차를 확립하고 비리를 근절할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광물공사는 2012년 1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야 했으나,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기존의 임금피크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지 않아, 임직원에게 추가적으로 6억원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추가 지급분에 대한 환수 조치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조치를 마련할 필요 ○ 시장에서는 50만원 미만의 가격에 판매되는 주파수 탐색기를 2,300만원에 구매하여 도청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구축한 시스템이 자체 규정에 있는 도청방지시스템의 기본 사양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비리 등에 대해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도청방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2013년 신입사원 채용의 실무오류로 인한 불합격 사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KOTRA의 4개 홈페이지에서 각각 분산·제공하는 자료 제공 방식을 수요자가 직접 원자료를 활용·가공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정부 3.0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필요 ○1인 무역관 및 미충원무역관이 많은 중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바, 신흥국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 검토가 필요
중소·중견 기업지원	○지사화사업 관련, - 지사화사업 선정기업들이 기계·자동차·전자제품 등 전통산업 비중이 높은 상황인바, 미래신성장산업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 해양플랜트, 신재생에너지 등의 관련 기업들을 지사화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 2009년부터 20대 재벌 대기업에 속하는 14개 계열사에게 56번 지원이 이뤄지는 등 대기업에 대한 동 사업 지원 문제가 감사원 지적('15. 1)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대기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실적 산정 기준을 기업별 수출액 8,000 달러에서 수출액 1,000 달러로 하향함에 따라 사업 성과를 과대 평가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지사화사업 해외 전담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다하며, 전문성도 떨어지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관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전체 중소기업 중 비수도권 비중이 53%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지원 기업 중 수도권 소재 기업 비중이 60%대인바, 수도권에 비하여 제반여건이 불리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 확대 필요 - 동 사업의 실적(경영실적보고서)을 산출함에 있어, 전년 대비 수출감소 기업 등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실적 집계에 문제가 있음 - 지원 기업 중 지방소재 회사가 42%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은 32%만 배정되는 등 인력에 한계가 있음 ○ 월드 챔프 사업 관련, -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회사가 포함되는 등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음 - 업체선정의 까다로운 요건과 분담금 부담으로 인하여 최근 5년간 지원업체가 137개사에 불과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참가기업의 전년 대비 수출 변화, 전년 대비 매출 변화 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평가를 받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성과 평가가 필요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정보제공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외 신용불량바이어를 주선('11년도부터 '14년 8월까지 611건)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수출이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무역진흥기관으로서 보다 책임성 있는 대응 필요 ○ 지방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 전북 등의 지역에서 한중FTA 산업단지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U턴 기업 복귀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므로, 지역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을 위하여 지방지원단의 설치 확대 필요 ○ 지방 수출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공단의 수출지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데스크 확대 필요 ○ 지방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무역관의 복원을 검토할 필요
정보조사 및 해외투자	○ 외국의 비관세장벽 확대 등 수입규제 확대에 대응한 KOTRA의 대책이 부족하며, 특히 사전적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함. 또한, 수입규제조치 동향 분석 이후 기업에게 전달하는 부분의 강화도 필요함. ○ 해외시장조사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의 약 70%를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음
해외 투자유치	○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 기업 유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국내의 기업환경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외국인투자 중 제조업 부문의 투자유치실적이 매우 부족('14년도 151억달러 중 8억 9,000만달러)하며, 유치 내용에 사모펀드의 지분 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부풀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고액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신뢰성 있는 투자유치 관리체계로 변경할 필요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나친 바겐세일 경쟁 및 중복적인 투자유치활동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KOTRA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등록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의 82% 수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비수도권 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보다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지역 편중이 심한 상황이므로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기타	○ K-Move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 국가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취업현황자료의 확인·점검도 부실한 상황이므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미국, 중국 등 해외 조달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서울식품산업대전의 민간 이양과 관련하여 당위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공정한 업체 선정이 필요 ○ 해외전시회 참가시 상품관 디자인 개선이 요청되며, 이를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협력 확대 필요 ○ 정상외교 경제활용 모바일앱은 청와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상외교 부분만 별도 분리하는 것은 최근의 인터넷 모바일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모바일앱의 설치 필요성이 낮음 ○ IP 데스크 사업 관련 - 중국 진출기업이 산업재산권 피침해 분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이 부족하며, 담당 인력의 전문성도 낮은 문제가 있음 -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시 대응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KOTRA의 업무보고를 보면 새로운 시장 변화에 대응이 미진하며 현재 추진하는 사업 또한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인 것으로 판단됨 ○ '13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일부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경쟁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중복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바이코리아(국내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마케팅 사이트)의 회원기업 및 등록상품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성사비율이 1~2% 수준으로 매우 낮으므로 성과 제고 필요 ○ 중고 기계설비 수출이 국내적으로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중고기계 유통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특단의 지원대책 필요 ○ 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산업협회와 MOU를 맺어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전략 실행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성 있게 추진할 필요 ○ 지자체 공무원들의 KOTRA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대상의 기업지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IT지원센터의 예산 소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임에 따라 현지 센터에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변경하는 등 내실을 강화할 필요 ○ 수출지원기관간 협업강화를 통하여 기능중복을 줄일 필요 ○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필요

13. 한국무역보험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 무역보험공사의 내부고발자 신고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지사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모뉴엘 사건에 대한 감사 진행 중에 무역보험공사의 감사가 변경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감사의 전문성도 부족 ○ 무역보험공사 내 전결권 규정 및 관련 프로세스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신용조사, 보증상담 시 지원여부가 외압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 ○ 보험 관련 현지실사가 부실하고, 중장기 보험인수심사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받고 있으며, 보험 관련 서류 위조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등 보험 인수 심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바,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모뉴엘 사건 관련 조치	○ 모뉴엘 사건 이후에 후론티어 사기 대출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대응이 늦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장실사 강화도 관련 인력현황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모뉴엘 사건 관련 형사 처벌 대상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판 결과에 따라 퇴직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모뉴엘 관련 손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 ○ 모뉴엘 관련 무역보험공사의 면책 결정에 따라 시중 은행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나 보험증권의 취급을 기피하고 있어, 수출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 경영위원회와 보험인수심사위원회의 안건 대부분이 승인되는 등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뉴엘 사건 이후 신규로 설치한 심사실도 전원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한계가 있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기금건전성, 리스크 관리	○국내 미회수채권 규모가 2조 6,581억원 수준이며, 이중 회수불가능 채권 규모가 70%(1조 8,651억원)에 달할 정도로 리스크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 추심방식의 개선이 필요 ○해외 미회수채권 추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회수노력을 제고할 필요 ○금융성 보증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모뉴엘 사건에 따른 예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기금배수의 안정화를 위하여 배수제 전환 검토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 필요
개별 보험상품 관련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가입업체 및 가입액이 매우 저조하므로 제도 활성화 필요 ○환변동 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수출 중소기업 중 0.58%가 가입)하므로, 전문인력 확충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조선해양 산업 관련	○선박금융 중 지원이 부족한 건조금융 분야 지원을 확대(단기의 지원기간 문제 해결 등)하여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R/G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보고할 필요 ○중소 조선사 부실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큰 상황이므로 손실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채권단 공동관리 중인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자산운용 관련	○기금운용의 상대수익률이 금융성기금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에서도 전체 자산운용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자산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면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구조화 상품 투자수익률이 0%로서 자산 운용이 부실하였는바, 자산운용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
기타	○단기수출보험의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해외 보험사들의 시장 독식과 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으로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 간 협의 방향 및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할 필요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기 보다는 여러 기업들에게 혜택을 늘리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 ○정부 방침에 따라 투자위험국(중남미, 러시아 등)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할 경우 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개별 인수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보험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무역보험공사의 해외프로젝트 지원과 관련하여 대출은행이 해외금융기관에 집중되는 문제 해결 필요 ○국내은행이 무역보험을 정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 해결 필요

14.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전기안전 관리	○ '03년 기준으로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96.7%를 구내배전설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구내배전설비가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 - 고압 수전설비 뿐만 아니라 수전설비에서 분리되는 개별 전기수용가 구내배전설비에 대하여도 안전공사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다만, 안전공사가 구내배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 전기안전관리자의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전기안전 확보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전력기금으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파트 형태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를 갖춘 아파트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력기금에 동 사업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공사가 산업부와 협의할 필요 ○ 가로등 안전관리 관련 - 정기점검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설비가 재점검 시 다시 부적합판정을 받는 비율이 큰 문제 - 안전공사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가로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 지자체가 성실하게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전기공사 현장 작업인력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외의 장비·안전기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할 필요 ○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관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설비 1만 3,600호 중에서 10년 이상 경과한 전기설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정기검사는 업종별로 2~4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별도의 검사방법이나 주기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지자체 관리 전기설비 관련 - 부적합 설비 중 미개수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방치되고 있는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감안하여 산업부·국민안전처·안전공사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전기안전 119' 관련 - 응급조치 이용가능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수혜대상자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일반가구의 경우에도 야간·주말에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기안전 119'의 수혜대상을 전체 주거용 전기사용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취약계층 지원	○ 전통시장 전기 안전관리 관련 - 전통시장은 노후 전기설비가 많고 전기배선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형 화재사고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공사가 화재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경영관리 및 기타사항	○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 전기안전공사는 내부 신고제도를 익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A의 경우 내부비리를 국회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조치한 문제 - 신고 대상자는 정직1개월에서 감봉3개월로 징계를 감경하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고 신고자에게 견책처분을 내린 점 - 내부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지 않은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 사항임 ○ 비상발전기 사업 관련 - '14년 예산(125억원)으로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16년에는 전력예비율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동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 - 비상발전기를 공급자원화 하는 것이 원전 등 신규발전소 건설에 비하여 훨씬 경제적이므로, 전력 피크타임에 비상발전기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15.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가스안전 관리	○ 서민층 LPG 금속배관 교체사업의 수요예측 및 집행계획이 면밀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실적의 편차가 큰 상황이므로, 향후 금속배관 교체기한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적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특정가스 사용시설 및 냉동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가스안전공사가 검사한 시설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민간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매우 낮아 봐주기 검사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타이머콕의 사고예방 효과가 높아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타이머콕 보급비용이 안전공사의 보급비용에 비해 과도하므로 폭리 근절대책을 마련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하천횡단 배관의 매설깊이는 4m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96년 이전에 건설한 배관의 경우 4m에 미달하는 사례가 많아 안전이 우려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철원 LPG 누출 사고를 비롯 집단공급시설 중 아파트 지하매몰 탱크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가 우려되므로 검사 결과 및 권고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저장소 시설 등 인구밀집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가스보일러의 경우 규모별 설치기준, 배기통 검사기준, 배기통 재질별 제조기준 등이 없어 가스사고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 ○민간 LPG용기 재검사기관 입회자의 비정규직 고용 등 공사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해 재검사기관과 입회인간 유착의혹이 있고, 검사능력 이상의 부실 검사 의혹이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불량용기 유통방지 이력관리 시스템 정착, 내압검사설비 표준·인증 제도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할 것 ○국토교통부로부터 차량등록정보 이관이 원활하지 않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있는 LPG 운전자 안전교육 실적이 등록대수에 비해 매우 낮고, 유료교육임에도 교육내용이 부실하므로, 선진국의 사례 및 우리 국민의 LPG 인식도 증가 등을 감안하여 교육을 폐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옆의 운전실 등의 보호시설들은 고압가스 안전거리 유지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 사각지대인 상황이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 ○기업체의 가스저장시설이 많은데 안전관리자 배치 및 교육 등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의 관리부실이 우려되므로 안전관리자 안전수칙 교육 제도화 등의 체계수립을 강구할 필요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1인이 검사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 ○LPG 충전시설 중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 전체 25.3%, 511개소이고, 511개소 중에서 86.5%가 도심지에 소재하고 있어 연1회 정기검사만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검사회수를 확대하고 검사수준도 강화할 것 ○불량 LPG용기 대국민 신고 포상의 90%가 내용연수가 지난 불량용기 발견이 아닌 용기적재 차량의 불법주차와 관련된 것이므로, 신고포상제를 내실화할 것 ○부탄캔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개발되어 있는 폭발방지 장치 도입 로드맵을 마련할 것 ○고압도시가스배관의 경우 노후배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석유화학단지 고압배관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정기검사 외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전검원 선임 규정이 없어 안전공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 ○LPG 사고의 90%는 완성·정기검사 의무 적용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나 검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및 교육·홍보를 강화할 필요 ○현재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는 잔류 독성가스를 보다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용처 및 이력추적을 강화할 필요 ○LPG 용기와 같이 고압가스용기에 대해서도 검사원을 파견하는 등의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 ○LPG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관청의 취소처분과 공사가 실시하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는 우수 LPG 판매업소 인증 취소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처분 행정청과의 업무연계를 강화할 필요

16. 한국에너지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바우처사업의 대상인 영유아, 노년층 등에게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질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신청주의로 운영되고 있어 수혜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 지원대상자 목록을 작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신·재생 에너지	○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폐기물에너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국제에너지기구(IEA)기준에 따른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1%로 OECD 32개국 최하위에 해당한다는 문제 ○ 태양력·풍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보급 정책을 개선할 필요 ○ 비태양광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 연도별 이행실적이 60%~70%수준이므로, 비태양광부문의 의무이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의무공급량 중 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비율이 20%로 축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소되어(30%→20%), 의무공급량 불이행으로 인한 과징금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지나친 과징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2016년부터 태양광, 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의 통합에 따라 의무공급량 달성이 이행이 용이한 태양광 부문에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 2007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가표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중 4.7%만 국가표준 인증을 받는 등 그 실적이 저조하므로, 서류제출·연차별 재검증 절차 등을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방안 마련 필요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이 2등급 제품에 비해 가격은 상당히 높은 반면 전기요금 차이는 매우 작아 2등급 제품이 1등급 제품보다 판매량이 더 많으며, 소비효율등급 5등급인 제품의 에너지효율이 10년간 개선되지 않는 등 저효율제품에 대한 규제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운영관리	○ 에너지효율 시험평가를 위해 매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한 전자제품 3,294개 중 1,197개를 시험평가 이후 직원에게 저가에 매각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으므로, 시험제품에 대한 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 ○ 미화원에 대한 철저한 신상조사, 작업시간 중 잡담금지, 지정장소 외 휴식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지시서는 청소용역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업지시서를 수정할 필요

17. 한국전력거래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전력시장 운영	○LNG비중이 높아 최근 당기순이익이 악화되고 있는 남부발전에 다른 발전사보다 높은 수준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줌으로써 462억원의 추가정산금이 발생한 문제 ○수요관리사업자 전력시장 입찰 관련 - 수요관리사업자의 경우 1일 전 시장에서 공급가능용량을 입찰하기만 하면 기본정산금(용량요금)을 받는 문제 - 감축량을 계량하기 위한 설비에 들어가는 투자비와 발전소의 건설에 필요한 투자비를 비교한다면 수요관리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문제 ○사업담당자가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작업으로 전력거래요금 산정을 하다가 착오로 전력가격을 잘못 입력하여 29개 발전사업자에게 1억 1,550만원을 되돌려준 사례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전산화 구축방안을 마련할 필요
전력계통 운영	○현재 GDP, 기상예보 등을 통하여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현재 그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기상청과의 긴말한 협조·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관리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 ○발전기 고장정지 관련 - 발전기 고장률·고장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9년 이후 피해액수가 1조 4,000억원이 넘고 있는 문제 - 설비결함 및 보수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발전사 및 정비회사의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개별 발전사·정비회사의 고장감소 노력이 필요
경영관리	○다른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10~20% 수준의 현지인력 정규직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채용비중을 보이는 것에 반하여, 전력거래소는 '15년 상반기까지 전혀 현지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보다 높일 필요

18. 한국광해관리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광해방지 사업	○폐광산 수질개선사업 대상광산 260개 중 사업을 실시한 광산은 42개로 그 실적이 저조한 반면, 강원랜드로부터 지난 5년간 받은 배당금 3,259억원 중 수질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632억원(19.45%)에 불과하므로, 수질개선사업 예산을 확대할 필요 ○광해관리공단에서 7억 8,700만원에 토양오염복원사업 발주를 받은 업체가 동 사업을 3억 6,300만원에 턴키(turnkey)로 다른 업체에게 불법 도급해주는 문제가 있으므로,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토양오염복원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토양이 유실되었으며, 기본적인 비산방지대책도 취하지 않고 석면으로 오염된 토양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등 광해방지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광해방지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토양오염복원사업의 95%가 기존 토양 위에 양질의 복토를 하는 '복토공법'을 사용하여 추진되었으나, 복토공법의 경우 폭우 등으로 인하여 토양이 유실되어 오염된 토양이 재노출될 수 있으므로, 오염토를 제거하고 그 위에 양질의 복토를 하는 '환토공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출자 회사 관련	○ 광해관리공단의 출자회사 6개 중 강원랜드를 제외한 5개의 출자회사가 실적 부진 상태이며, 동강시스타와 대천리조트는 각각 437억원, 413억원 부채를 가지고 있으므로, 출자회사의 재무상황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출자회사의 이사회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구성되고 있어 손실이 400억원 이상에 이르는 등 부실이 심각하므로, 출자회사의 경영 개선 계획과 함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1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에너지 기술	○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 BAU 대비 37%)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기술 개발 등 구체적인 달성방안을 마련할 필요

20. 한국석유관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석유 품질관리	○가짜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노상검사 또는 석유제품 무상분석 서비스 활동의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 ○주간 거래상황 기록 및 제출의무가 영세한 주유소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규제완화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이동실험실 차량 보유대수가 3대에 불과하므로 이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가짜 경유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통량 분석 등을 통한 감시 강화 필요 ○가짜 휘발유에서 가짜 경유·정량 미달 등 가짜석유 관련 불법행위가 지능화하고 있어, 현장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 ○정량미달 판매에 대해 과태료 및 벌칙 등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대응방안을 강화할 필요 ○적발위주 가짜석유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세제개편을 통해 용제에 우선 과세하고 정상 사용에 한해 환급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제한된 단속인력·장비로는 가짜석유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센서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빅데이터를 통한 고도화된 단속 강화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 ○신규 개발된 주유기 조작방지 기술 및 비노출 차량을 적절히 활용하여 단속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휘발유·경유·등유를 제외한 그밖의 석유제품의 경우 일반대리점의 74%가 판매 물량이 없음에도 매월 보고의무를 두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규제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석유 유통관리 개선	○ 음성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석유제품 혼합판매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 안심주유소는 자가폴 주유소만 가입대상으로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정유사 폴 주유소와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가입 주유소는 안심할 수 없는 주유소라는 잘못된 정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우려 해소방안을 강구할 필요 ○ 알뜰주유소의 가짜 석유 적발건수 2014년 25곳, 2015년 7월 현재 20곳에 이르고 있어 정부신뢰 저하와 석유유통시장 왜곡이 우려되므로,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 자가폴 주유소가 미가입 주유소보다 불법행위 적발률이 낮으므로 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검토할 것
기타	○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 인증 소요기간이 8개월에 이르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3~4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중·저준위 방폐물	○ 한빛원전의 중·저준위 방폐물의 방폐장 이송이 지연되고 있는데, 안전성 검증 및 어업보상협의 절차를 완료하여 조속히 이를 처분장으로 이송할 필요 - 영광지역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증할 것 ○ 방사성폐기물 운송 시 ISO인증을 획득한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등 관련된 안전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 - 보안운송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할 필요
사용후 핵연료	○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관련 - 권고안에 따르면 '51년까지 처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임시저장시설 운영·처분시설 부지선정 등의 절차가 정해진 시점에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경영관리	○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경상북도와 관광코스 개발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15년 이후로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는 문제 ○ 기술연구소·기금관리센터의 경우 본사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본사 소재지인 경주로 이전하지 않고 있는 문제

22. 한국산업단지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산업단지 안전관리	○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산단공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집적화되어 있는 울산·여수 지역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단공과 관련 기관간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필요 ○ 노후 산업단지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 ○ 산업단지 안전사고가 노후 설비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크므로, 안전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 ○ 산단 내 화학사고의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구축한 화학사고 합동방재센터가 지역 편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중부내륙 공단벨트에 방재센터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입주기업 지원	○ 미니클러스터와 같이 소상공인 특화업종 집적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필요 ○ 기업성장지원센터별 지원예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 센터의 성과가 큰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센터를 증설하고 개별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할 필요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노력도 부족하므로 보조금 대상 여부 심사 및 환수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국가산단이 전체 에너지 이용량의 23%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단 내에 FEMS(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를 활성화하는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동대문 패션비즈센터를 단순 임대하는 데에 그치고,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역할이 부실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 ○동반성장지원센터 관련 예산이 없어 부실사업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조직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 마련 필요
산업단지 관리 및 개발	○조성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단의 분양가와 조성가의 차액 규모가 1,800억원 수준이며, 산업단지공단의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500억원 가량 발생하는 등 부동산 분양 및 임대 수익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차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출할 필요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폐열을 이용한 수익 사업 등 위주로 추진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민원 해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산단 내 환경민원 해소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임대전용산단의 철거이행보증금이 영세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일 산단 내 외투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받지 않아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거이행보증금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 ○산단으로 지정·개발되었으나 입주업체가 1개에 불과한 나홀로 산단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협력업체가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노후산단 혁신사업의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하여 민간투자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산단환경개선펀드의 환수금을 별도 기금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노후산단특별법 시행에 따른 추진체계 마련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산단공 개발 산단의 분양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 ○일부 산업단지의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각 단지별 활용도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 ○주차장 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분류하여 유료로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 필수시설인 주차장 활용에 애로가 크므로, 주차장 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 ○산업단지 용지 처분제한 완화시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제한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 ○일부 국가산단의 입주 및 가동현황이 매우 부실하므로 국가산단 등을 개발할 경우 사전적으로 입주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산업단지공단의 역할 제고 필요 ○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시설 확충대책을 마련할 필요 ○산단공이 관리하는 일반 산단 내 어린이집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보육시설 확충 대책 마련 필요
기관운영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미미하고 전문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임원 인사시 지역 편중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 디지털 단지 내 키콕스 벤처센터가 기업지원시설로 역할하고 있으므로, 산단공의 본사 이전에 따라 반드시 매각하기 보다는 존치하려는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 ○청년인턴제 사업의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관심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달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비정규직 비율이 18%에 달하고 평균임금도 정규직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산학연 통합정보망 등 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의 운영이 부실하므로 사이트 통폐합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대책 마련 필요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기획	○원주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및 수출인증 지원을 위한 10M 전자파챔버 설치 관련 예산 확보 필요 ○사천 특화단지 내 항공우주부품 R&D 및 기술인증센터 설치의 산업부 건의 필요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시스템 강제인증 도입 필요 ○K마크 인증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과 정기적인 규정관리 필요
경영관리	○'중소기업 맞춤식 글로벌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제의 용역업체인 그린미디어의 자격미달, 국정원 개입 의혹, 사이버 여론조작 등의 의혹이 있는 바,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중소기업 맞춤식 글로벌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의 관리가 부실하므로 관련 계약상대자인 그린미디어와의 계약해제, 선급금 회수 등 후속조치 필요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출장비 지원을 받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해외출장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외국 검사장비의 도입과 관련 시스템 습득 및 교육 명목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에 관한 개선 대책 마련 ○업무의 보안성 담보를 위해 무선도청 보안 대책 강구 필요
인사관리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개선 대책 필요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징계처분 절차 관리 강화 필요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산업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R&D사업을 통해 개발한 모든 기술을 기술은행(NTB)에 등록하고 등록 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사업화 촉진 방안 마련 ○기술은행에 등록된 기술의 기업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금융 제도 활용 방안 마련 ○기술은행에 등록된 기술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약정보 제공 및 기술 이전이 완료된 기술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 ○사천 특화단지 내 항공우주부품 R&D 및 기술인증센터 설치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의 산업부 건의 필요 ○ 녹색 기술인증의 녹색기술제품확인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인증혜택의 재검토를 통해 기업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패션의류, 신발, 주얼리, 안경, 금형 등 제조업 분야의 현장숙련기술인력 양성 방안 검토 ○ 소재종합솔루션센터 테스트베드 사업의 활성화 적극 홍보
사업관리	○ R&D 사업의 참여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하고, 3회 이상 참여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현장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 적용 방안 검토 ○ 세금계산서 위조 또는 허위 작성을 통한 연구비 횡령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 R&D 사업 관련 연구비 횡령 등에 따른 제재기간 중 R&D 사업의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 기술료의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료 징수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 ○ R&D사업 제재 과제의 환수율 제고방안 마련 ○ 진흥원 설립초기('09년~'12년) 누락된 성과활용 현황 보완 필요
기관운영	○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2012년 신입직원 채용 서류전형 및 보훈 대상자 특별채용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국기술센터 기술인클럽 운영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시정할 것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R&D 평가관리	○R&D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시장환경 검토 및 연구과제 선정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방안 마련 ○기술개발 불성실, 사업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R&D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 선정 과정 개선 필요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R&D 과제 중 성실중단 평가제도에 따라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횡령 또는 유용 등에 따른 연구비의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사업화 성공률이 낮고 포기율이 높은 대기업의 R&D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기업에 대한 편향적인 R&D 지원의 지양 필요 ○연구비 횡령 또는 유용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점검 방안 마련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을 위해 감사인력 확대 및 제도적 지원책 마련 필요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제보를 접수하는 즉시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상 집행 정지 조치 필요 ○R&D 사업의 과도한 지역편차 또는 특정지역의 소외현상에 대한 연구 분석 및 시정 조치 필요 ○R&D 관련 등록 장비의 활용 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필요
R&D 사후관리	○R&D사업 불성실에 따른 중단과제의 사업비 환수율 제고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한 기술료 징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하며, 사업 수행기관의 재무상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등 사업수행 가능성의 평가 필요 ○기술 이전 사업을 중복적으로 신청하는 등 R&D 사업 수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R&D 전담기관간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필요 ○R&D 자금의 유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당초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개별사업 및 기관경영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조치 마련 필요

26.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중소기업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 후 사업화 제고 방안 마련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의 활용 제고 방안 마련 ○디자인 공지증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디자인 공지증명제도의 보호기간 확대 방안 마련
서비스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의 확대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
해외진출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경우 KOTRA 등과 협업하여 상품관 설치에 적극 지원 필요
문화확산	○GD마크의 공신력 및 실효성 제고 위한 개선 방안 마련

27. 한국세라믹기술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MEMS 개발	○ 미세전자제어기술(MEMS)은 사물 인터넷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발 지원이 미흡한 문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부적정	○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 후 사업비 잔액 미반납 등이 발생하는 문제
지방이전	○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수립 필요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 비정규직 비율이 94%로서 타 공공기관에 비하여 매우 높은 문제
무선도청 보안	○ 지방으로 이전한 신청사의 무선도청에 대한 보안대책이 미흡한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의 실적이 미흡한 문제
특허 무단 양도	○ 선임연구원이 15개의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성과를 제3자 명의로 특허 출원한 문제

28. 한국전력기술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중간간부급인 책임급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책임급 승진인사 조치를 하고 있어 하위 직급의 보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 - 건전한 조직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임직원 해외출장 관련 - 개인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지 않고 해외출장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문제 - 일반석을 이용해야 할 직원조차 비즈니스석으로 상향하여 해외출장을 다녀온 문제 ○4대강 사업 관련 기술지원용역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발주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문제 ○기념품, 상품권 등의 구입에 33억 2,800만원을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있는 문제

29. 한국가스기술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관리・운영	○2010년에서 2014년까지 8건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자 모두 경징계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시험성적서 위・변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은 비전문가 임원을 선임하지 않아야 하나, 공사를 포함한 5개 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37%만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연구개발 (R&D)	○8대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확보에 힘쓰겠다는 공사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및 인력 대비 R&D 투자는 0.9%, 연구인력은 1.3%로 다른 연구기관이나 공사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확대노력 필요

30. 한전KDN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입찰시스템 및 경영관리	○전자입찰시스템 비리사건 관련 - 검찰 수사 결과 불법행위자가 타인명의 비밀번호와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한전KDN과 한전 간 공사 입찰관계 시스템이 지나치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문제 -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논의 당시 중요한 국가 산업이므로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를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사업을 파견직원이 담당하는 등 원칙에 맞지 않는 인력운영을 하고 있었던 문제 - 전자입찰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규직원이 순환보직 없이 해당 업무를 14년 동안 담당하였던 문제 - 부당낙찰을 받은 업체가 알선자에게 공사금액의 2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문제 - 전자입찰 시스템의 정기점검 결과를 '12년 이후로 한 차례도 한전에 통보하지 않았던 문제 -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인사조치를 엄격하게 실시할 필요 ○한전·발전사가 IT 관련 상품을 구매하면서 한전KDN을 중간 단계에 개입시켜 10~13%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문제 - 통합정보보호 시스템 발주 시, 한전KDN이 A회사보다 낮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금액을 제시하여 입찰을 따내었는데, 불과 보름만에 한전KDN과 A회사가 낙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문제 ○ 인도 전력 현대화 사업 관련 - 인도정부가 해당사업을 재입찰 하여 소송이 발생하였고 한전KDN이 승소하여 사업을 다시 진행하였는데, 이를 재추진함에 따라 40~60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문제 - 소송 승소 이후 사업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도측 귀책사유를 근거로 입찰보증금(40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충분한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지 않고 사업 재추진을 결정한 문제 ○ 한전·발전자회사와의 계약이 기관 매출액 대부분(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 - 해외 IT관련 수주가 '15년 1건·'16년 1건에 불과한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31. 한전KPS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정비용역 및 경영관리	○ 발전자회사 정비용역을 통해 다른 기업에 비하여 손쉽게 계약을 따내고 있으며, 이에 발전공기업에 비하여 과도한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문제 ○ 발주받은 용역을 다른 업체로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원계약금액의 42%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위탁업체를 통해서 계약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근무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낮은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문제 - 계약 시 최저가입찰을 실시하고 있어서 해당 직원들이 저임금 상태에 머물 수 밖에 없는 문제 -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을 현행보다 인상할 필요 - 한전KPS는 연차적으로 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상여금 정상화(400%) 등의 조치는 KPS의 흑자규모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임 ○안전관리 분야에서 종사하는 인력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보일러 비계 붕괴사고 관련 중과실로 징계를 받은 직원의 변호사 선임비용·벌금액까지 회사에서 부담한 문제 - 중과실이 입증된 직원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직원들이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한전KPS가 한국플랜트서비스, 에이스기전, 삼신 등 3개 자회사에 몰아준 일감이 지난 5년간 402건(874억원)에 달하는 문제 - 총 874억원 중에서 3개 자회사가 일반경쟁으로 받은 금액은 1억 7,000만원에 불과한 문제 ○국감에서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전KPS 퇴직자 재취업 회사에 과도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문제

32. 한전원자력연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방사선 안전관리	○ 생산부서의 직원들이 관리수치를 초과해 피폭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조치를 실시할 필요 - 실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전환조치·임시조치 등을 실시하기 보다는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33. 기초전력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 연구원장 인사 관련 - 연구원 설립 이후 계속해서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가 원장직을 맡고 있어 서울대와 연구원간에 부적절한 계약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 연구원 출연금으로 서울대 연구동을 건축하여 기부채납 하였고, 이 중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도 건물 전체의 공공요금 및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면서, 연구원 본 건물은 대출을 받아서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 - 기관장에게 급여가 아닌 활동비로 연 6,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대 교수의 겸직금지를 피하려는 편법이 아닌지 의심되는 문제 - 산업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

34. 강원랜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및 영업부문	○평균적인 국민주택규모보다 큰 규모의 관사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계약서 없이 용역 계약을 발주하는 등 강원랜드 운영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 ○강원랜드 직원의 횡령 금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이며 회수액도 17억원 수준으로 저조하므로, 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감찰 및 징계 등을 강화하고, 미회수액 회수 대책을 마련할 필요 ○중장기 경영전략 보고서에 폐광지역 외 영종도, 제주도에 위치한 중소형 카지노를 인수하여 복합리조트 사업에 진출하는 계획이 포함되었으나, 폐광지역 진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다른 카지노를 인수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복합리조트 사업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 실적에 따라 손님에게 지급하는 리조트시설 이용포인트(콤프)를 지역 가맹점에서 허위 매출을 만들어 현금화하는 불법 거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불법거래사이트를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는 등 불법거래 적발대책을 강화할 필요 ○고객의 평균 베팅액을 측정하여 리조트시설 이용포인트(콤프)를 적립하는 과정이 객관적 기준이 아닌 직원의 목측(目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직원이 포인트를 부정 적립하고, 고객의 법정 한도금액 초과베팅을 묵인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베팅액과 게임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 강원랜드 3개 자회사의 누적 적자가 640억원에 이르고, 동강시스타, 대천리조트 등 5개 출자회사의 누적적자가 620억원에 이르는 등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부실이 심각하므로,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 강원랜드 직원 유니폼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남성복업체가 유명 디자이너를, 특정 여성복 업체가 유명 탤런트를 제안설명회(PT) 발표자로 내세웠는데, 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의류제조공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발표자를 해당업체 임직원으로 제한하여 중소기업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하도급을 통한 마케팅비 부담 전가를 방지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공정한 입찰임을 지적 ○ 강원랜드의 최근 3년간 장애인 직원 고용은 법정고용인원 수준에 미달하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 위반으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총 6억 500만원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최고액이므로,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할 필요 ○ 강원랜드 비정규직 직원 중 50% 이상이 폐광지역 주민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실적(전환 계획 대비 90%)이 다른 공공기관(전환 계획 대비 112%)에 비해 저조하므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생활 향상이라는 강원랜드의 설립취지를 감안할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제고할 필요 ○ 강원랜드는 컨벤션호텔 건축사업과 카지노 환경 개선 공사 사업에 각각 1300억원, 71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실제 폐광지역 경제와 주민생활에 기여한 금액은 투자액의 7.8% 수준인 157억원에 불과하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주민생활수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제고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므로, 지역 및 주민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 ○ 탄광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하이원 상동테마파크사업은 수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위탁 운영을 철회하는 등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사업을 종료할 필요 ○ 강원랜드가 관광진흥 기금 등에 납부한 국세가 폐광지역에 납부하는 지방세보다 더 많아 강원랜드의 설립취지인 폐광지역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광진흥기금 등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도박중독	○ 강원랜드 도박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도박중독자 등에 대하여 카지노 출입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출입 기록 관리, 출입 제한 조치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영업장 내에 설치한 현금인출기에서 강원랜드 이용객이 3년 동안 1600억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도박을 하는 등 건전한 카지노 문화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사채업자의 활동 차단, 카지노 내 현금인출기의 현금서비스 기능 차단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35.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재단의 역할 및 구성	○對일본 수출비중 감소 등 교역환경이 변화하였고 재단 이사진이 주로 대기업 소속이어서 중소기업 지원이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재단의 사업내용 및 이사진 구성을 재검토하고 재편방안을 제출할 것

36. 전략물자관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 관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이행 상황 점검 및 제도 이해 제고 필요

3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전임이사장의 부적절한 업무집행(출장비, 강의료, 용역발주 등)이 정부출연금의 유용·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를 검토할 것 ○원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2.9%로 나왔는데,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이 36.2%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의 수용도도 떨어지고 있으므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실시할 필요

3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국내 로봇산업 발전 방안 미흡	○ 로봇산업 관련 기업 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중견·대기업의 참여가 미흡하고 국내 시장 성장세도 더딘 문제 ○ 세계로봇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 로봇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한 문제 ○ 지역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 미흡
교구용 로봇 및 중소제조로봇 보급의 문제	○ 방과 후 학교 교재의 로봇 활용과 뿌리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로봇 판매는 로봇 보급 및 효용성 제고보다는 관련 제작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
무선도청 보안	○ 청사의 무선도청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문제
사회공헌사업 저조	○ 로봇산업진흥원의 예산 규모 및 국고지원액 대비 사회공헌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한 문제

39.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 법인카드 사용관련 - 법인카드 집행 시 그 내역 및 사용일자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

40. 중소기업진흥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자금지원	○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자금별 지원 한도 및 지역별 융자 상한 상향 조정, 금리 인하, 기술평가 강화, 정책자금 소통창구 개설, 지역편중 개선, 직접대출 만기시 대출기간 연장 도입 검토 등 정책자금 지원시스템 개선 필요 ○ 투융자복합금융사업(이익공유형 대출)의 높은 이자율 개선 검토 필요
기타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인사비리 건과 관련한 취업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지적 ○ 수출인큐베이터(BI) 입주 업종 다양화 등 내실화 대책 마련 필요

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소상공인 교육 내실화	○ 교육사업 예산 증가에 비해 이수생은 감소 추세이므로 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상인대학 책임교수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강사 선정시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
소공인 지원 확대	○ 도시형 소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 및 사업 확대 필요
전통시장 지원	○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전통시장 애플리케이션 “매력넘치는 전통시장” 기능 고도화 필요
조직역량 강화	○ 소상공인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금 집행기관이 아니라 조직내 조사연구 등 정책기능을 강화할 필요 ○ 공단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 상담지도직 인건비 처우개선 노력 필요
기타	○ 소상공인방송 시청률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제공 정보 확대 및 품질 제고 등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4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사업관리	○ 국가 R&D사업 참여제한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R&D과제의 경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평가 시 등급오류 과다 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국가 R&D 선정시 유사 중복 확인을 강화할 필요

4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재보증 개선	○ 신용보증중앙회의 재보증 손실은 포괄약정방식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고액위험보증에 개발약정방식 도입을 검토할 필요 ○ 재보증료 미환급금 발생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햇살론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애로 완환 방안 마련 필요

44. 창업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기타	○ 창업진흥원 법정기관 변경 방안 검토 필요

45.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모태펀드 운용	○ 펀드 운용사 선정 및 펀드 운용 시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벤처산업 활성화 위해 지방펀드 조성 필요

46. 중소기업유통센터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중소기업 판로 지원	○ 행복한백화점 매출이 저조하므로, 매출 성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공공시설에 입주한 중소기업 전용판매장의 판매실적이 양호하므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매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 ○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마케팅 홍보예산이 부족하여 기업 선정에 있어 특혜 소지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확대 및 우수한 기업을 객관적인 절차로 평가·선정할 필요

47. 중소기업연구원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조직역량 강화	○중소기업연구원 사업 중 우선순위가 낮은 탈북기업인 지원, 통일대비 지원사업 등의 재검토 필요 ○중소기업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 지원 및 정책 평가를 위하여 중소기업연구원의 역량 강화 필요 ○중소기업연구원 이사직 중 결원비중이 과다하므로 시정 필요

48. 한국발명진흥회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경영관리	○언론에 보도된 소위 '비행기깡' 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국민 해명과 여비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재검토 필요 ○공제회에 지원한 기관예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사업 관리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중 IPAT시험 2급 이상 소지자가 9.6%에 불과하고, 무급자도 43%에 이르는 등 컨설턴트의 전문역량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컨설턴트 채용 부적정, 센터장 겸직금지, 국고보조금 과다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49. 한국특허정보원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기관 운영	○ 과다한 비정규직 인력 운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자체 비리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철저한 인사 채용 업무 수행 필요
사업 관리	○ 하도급의 조달청 입찰의뢰 부적정 지적 및 개선 필요 ○ 선행기술조사 품질강화를 위한 노력 및 대책 마련 필요 ○ 특허넷 운영사업의 장기간 LG CNS 위탁 관련 비리 의혹과 특허정보원으로의 이관 준비 미흡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

Ⅵ.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 산업통상자원부

(1) 형사처분 통보를 받은 직원의 42%를 불문경고하는 등 솜방망이 징계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속 직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할 것

(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해외 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여비 규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3)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것

(4)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출자회사 중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거나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의 정리 방안을 강구하고 공기업 퇴직자가 출자회사로 재취업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5)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관련

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수립 이후 신규로 지정된 10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지방 이전을 하도록 유도할 것

② 공기업의 지방 이전 과정에서 과도하게 사택을 구입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것

③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후 기존 청사의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과도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④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역은행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관리할 것

(6)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관련

①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채용 기준(매년 정원의 3%)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독려할 것

②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전문대학 졸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③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것

(7)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처우 관련

①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용역 근로자 등에 대한 비합리적인 과업 지시, 노동자 권리 제약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② 용역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공공기관이 건설사업을 발주할 때 불법 하도급 예방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9) 철저한 사전 기획 등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발한 모바일 앱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편성, 집행되는 문제를 해소할 것

(11)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동개 혁 및 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

(12) 조선산업 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기본설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고 하동 경제자유구

역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3) 항공우주부품 및 기술인증 R&D 센터 구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항공분야에 특화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항공부품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14)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베어링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15) 뿌리산업특화단지 조성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매칭 비율이 30%에 불과하여 사업 실적이 미흡하므로 국비매칭 비율을 제고하고 도장 부문의 뿌리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

(16)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서 R&D 비용의 부정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7) 대량맞춤주문형의류제조기반구축 사업의 장비 활용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8)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개발 촉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9) 국내 수입차 업체들이 자동차 관련 세부 정보를 정비업자들에게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20) 노후헬기 플랫폼으로 개발되는 기체에 대한 시장 수요가 불확실하고 소형무장헬기로서의 전투효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소형무장헬기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

(21) 미세전자제어기술(MEMS)은 사물 인터넷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2)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자료를 공개할 것

(23) 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

(24) 수출실적 제고를 위하여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전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주도의 수출 진작 대책을 수립할 것

(25) 외국인투자기업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할 것

(26) 제조업 위주의 그린필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며, 투자형태도 사모펀드의 지분 투자 등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제조업 위주의 건전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유치제도 및 실적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27) 한국무역협회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8)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9) 전략물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30)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및 혁신사업 추진에 있어, 모범사례를 도출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대책을 마련할 것

(3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대상 기업 선정 절차 개선 및 환수금 징수 강화 등 사업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32) 수도권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조치에 앞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33)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재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4) 균형발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 편중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

(35) 석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한중산업단지 지정 등을 검토할 것

(36)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는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실태 파악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37) 홈플러스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대신 테스코에서 자금을 빌리면서 4.23%의 이자율로 8684억 원을 지불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므로 전면적인 검찰 조사를 의뢰할 것

(38) 대기업 유통백화점의 패션아웃렛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롯데백화점의 15개 패션아웃렛 매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대책을 강구할 것

(39) 주변 상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복합쇼핑몰의 출점에 대한 국토 이용, 도시계획 또는 환경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40)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의 매출 증가 효과가 백화점에 편중되고 정기세일과 차별성이 부족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미흡하며 준비 기간 부족으로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엄밀한 사후평가를 통해 향후 행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

(41) 전자상거래 분야의 해외 진출 및 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42) 산업부·미래부·중소기업청의 R&D 기술개발 성공사업의 약 80%가 휴면상태에 있으며, 자금 신청에 많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R&D 자금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것

(43) 산업부·미래부·중기청의 R&D 연구과제의 사업화율에 관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44) R&D 성공사업의 경상기술료 징수액이 기술료 수입 총액의 0.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45) R&D 사업은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하므로 평가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백서 발간을 검토할 것

(46)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 사업성과에 대한 활용조사의 회답율 제고를 통해 종합적인 사업성과를 분석할 것

(47)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8) 2009년 이후 R&D 사업 관련 도입 장비 중 미활용 장비가 15%에 달하므로, 도입장비의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49) 국가 R&D 사업의 연구비 중복 지급 등 부당지급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0) R&D 관련 등록 장비의 활용 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필요

(51) 기반구축사업 관련 구입 장비 중 가동률이 저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가동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52) 녹색 기술인증의 녹색기술제품확인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인증혜택의 재검토를 통한 기업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53) 장비 활용 수익 및 일자리 창출 실적이 매우 저조한 '대량 맞춤형

의류제조 기반 구축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

(54) ‘PHR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은 건강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및 원격의료·의료영리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55)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본격적인 건립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산업부 내에 별도의 한시조직인 추진단 구성을 검토할 것

(56) 사천 특화단지에 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부품 R&D 및 기술인증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R&D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7)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당초 목적과 다른 해외출장, 관련 협회로부터 출장비용 보조, 출장보고서의 허위 작성 등의 문제점을 개혁차원에서 정비할 것

(58) 공인시험성적서 없이 인증서가 발급되고 있는 신제품인증(NEP)을 철저히 관리하고 NEP 인증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할 것

(59)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임의인증을 강제인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0) 제품 결함이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하므로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리콜제도를 철저히 시행할 것

(6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포함하여 지방 이전이 안 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마련할 것

(62)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현 사옥의 조속 매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3) TPP 협상참여 관련

①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기존 양자 FTA를 통해 얻은 성과가 희석된 측면이 있으므로, TPP의 가입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② 우리 자동차 부품 수출의 경우 TPP 역외 조달 비율이 높으므로, 한미 FTA를 통한 수입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TPP 하에서의 현지 부품 조달률 제고 문제는 별개로 대응할 것

③ 일본의 TPP 가입은 향후 인구감소 등 내수위축을 대비한 것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도 동일한 상황임을 고려할 것

(64) 한중 FTA 관련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의 비준을 촉구하면서 피해보전 측면에서는 농업 피해직불제도는 농림식품부장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로자 지원 대책은 고용부장관 책임 소관으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농어업소득보장기금, 무역이득공유제 등 농민과 근로자를 설득할 피해대책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

②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한 귀금속·공예품 등 소상공인의 피해 및 제조업의 기반·저변 영역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데,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대책과 관련한 소통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대책을 강구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

③ 한중 FTA에서 게임산업,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기는 쉽고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추가협상에서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④ 한중 FTA를 통해 우리 농산물 대중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국의 수입요건 간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⑤ 한중 FTA 관련 산업별 영향 연구용역 자료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국회에 제출할 것

(65) 기타 양자·다자협상 및 통상분쟁 관련

①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② 7월 ITA-II 품목 리스트 합의에서 경쟁력 있는 LCD, OLED는 제외되고, 기존 FTA의 혜택 품목은 ITA-II로 무관세가 되어 혜택이 희석되므로, 합의된 품목 리스트와 우리 IT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할 것

③ FTA로 보호된 상품이 환경상품협정(EGA)으로 개방될 수 있으므로 향후 협상에서 관련업계의 이해관계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

(66)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①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향후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상당 규모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여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

②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금액 대비 회수액이 미미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692%까지 부채비율이 증가하므로, 공사를 해체하거나 다른 공사와 합병하는 등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

③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결정 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투자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투자자문단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등 투자 의사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할 것

④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기업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지 않도록 유

의하고, 매각 이후에는 최초 투자비용과 매각비용을 공개할 것

⑤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내 도입실적이 부진하여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미흡하였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내 도입실적을 제고할 것

⑥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부실 사업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경영실패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이므로, 정부 출자금 한도 증액을 신중히 검토할 것

⑦ 최근 자원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 및 투자금액은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

⑧ 에너지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채비율이 감사원이 발표한 부채비율과 차이가 크므로,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⑨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에 대하여 산업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크므로, 사업별로 부실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금 회수방안과 사업 정리계획을 마련할 것

⑩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매입 인수 이후 경영자문을 했던 액센츄어 사장이 에너지공기업 재무개선 TF에 참여하였으나, 회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출할 것

⑪ 산업통상자원부는 NARL 매입시 지질자원연구원의 손실경고를 무시하고 석유공사의 셀프검토만을 근거로 해외자원개발신고를 접수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 상의 문제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67)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등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68) 폐가전제품, 폐스크랩 등에서 희유금속을 추출하는 도시광산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시광산 사업 관련 연구소 설립을 검토할 것

(69) 석유 비축·유통질서 관련

① 2014년 알뜰주유소의 자립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국제가격 하락을 사유로 조급하게 민영화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와 신중히 협의할 것

② 부생연료유의 경우 등유보다 황함량 등 환경비용이 높음에도 등유의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통시장 정비를 위해 부생연료유의 규격을 등유와 동일하게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

③ 비축 시설의 전략적 활용 및 한중일 공동협력방안 등 석유 수입시 아시아 프리미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할 것

④ 일본산 경유는 영하 20도 이하에서 결빙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품질기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⑤ LPG 가격 인하 추세, 오염배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OECD 국가 중 제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LPG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

⑥ LPG 수입선 다면화를 위해 가스충전 사업자들이 연대해서 다른 수입선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⑦ LNG 도입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가스공사가 건설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6곳의 비축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석유공사가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는 지원액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주변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70) 도시가스 공급·요금 관련

① 사회복지,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 형평화 차원에서 도시가스 요금

평준화 방안을 검토할 것

② 경주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이 가장 비싸고 영업이익률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 공급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점검 및 감시 필요

③ 가정 난방용과 산업용, 지역별 요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요금이 책정된 경우 차액을 에특회계나 별도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④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특정 업체에 가스요금을 과소부과하여 부족분이 국민에게 전가된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할 것

⑤ 취사용 가스기기를 전기기기로 바꾸는 경우 철거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관련 규정이 미비하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⑥ 정보 공개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연결비용의 지역별 편차 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71)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관련

⑦ 섬 지역에서는 LPG 보급차질에 대비해 과도하게 LPG 용기를 적재하는 등 안전우려가 있으므로, 섬지역에 우선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실시할 것

⑧ LPG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가스공급 시범사업에 가스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2) 가스 안전 관련

⑨ LPG용기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내압검사설비 표준·인증 또는 검사제도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감사도 실시할 것

⑩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의무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으므로 기한 내에 교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73) 조선산업과 연계하여 LNG 에코십, 벙커링 등의 클러스터 연구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74) 화력발전소 건설계약과 관련한 공사비·설계금액 산정방식, 하도급 관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75) 설비예비율 상승으로 인한 LNG 등 고원가발전기 이용률 하락이 전기요금 상승과 같은 국민부담 증가로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

(76) 발전용 석탄공급과 관련하여 특정 대행사 또는 납품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석탄구매단가가 지나치게 높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7)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형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발표할 것

(78) 전력 다소비 업체의 자가발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79) 우드펠릿의 수분함유를 감안하여 현재 고위발열량 기준으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우드펠릿 혼소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80) 학교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의 활용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81)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하는 폐기물고형연료(SRF)의 허가·사용에 대하여 환경부와 면밀하게 협의할 것

(82)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요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열요금이 과다 징수된 부분은 환수 조치할 것

(83)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 효과적인 전기차 사업모델을 발굴·육성할 것

(84)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축소 및 구간별 요금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85) 본격적인 원전 폐로에 대비하여 충분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86) 전력분야 공기업의 무분별한 출자회사 설립·부실관리 및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87) (화력발전사) 5개 발전사를 2~3개사로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할 것

(88) 발전소 회처리 시설의 발전사 입찰 담합의혹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담합행위가 근절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89)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부실로 발생한 발전기 고장정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시행할 것

(90)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① 기후변화 관련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② 원자력 발전 부지 확보 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③ 발전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전기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전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

(9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관련

① 저소득층의 수요가 많은 사업이므로 연도별 지원 가구 수를 증가시켜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

② 시공사의 부실 시공 사례가 급증하였으므로, 부실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 중소기업청

(1) 의무고발요청권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2)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것

(3)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소관을 중소기업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5) 적합업종 지정 권고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적합업종 지정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6)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율조정으로 처리된 사항의 구

체적인 내용을 확인·분석하여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공제금 비과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정확한 정책정보 제공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맞춤 교육 확대 등을 위해 소상공인 전문 교육시설 건립 필요성을 검토할 것

(9) 소상공인 창업과밀 해소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소상공인 교육도 정책 수요를 감안하여 대폭 확대할 것

(10) 소공인집적센터 확충, 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생산혁신 등 소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개선

① 공단 임직원 외부 강연료 문제, 불합리한 수당 수령, 친인척에게 일거리 제공 등 방만한 기관 운영을 개선할 것

② 공단의 자구노력과 병행하여 상담지도직 처우개선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

(12)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책

① 대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방안 마련할 것

② 전자상품권(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③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노력 강화방안 마련할 것

④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13) 전통시장 쇼핑카트지원 시범사업 실시 방안 마련할 것

(1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 임대료 상승방지 대책 마련할 것

(15) 우수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우선지원 방안 마련할 것

(16)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전통시장 권리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할 것

(17)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

(18)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전통시장 참여를 재검토할 것

(19) 하드웨어(주차장, 환경개선 등)중심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가 낮으므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 마련할 것

(20) 전통시장 애플리케이션 "매력넘치는 전통시장" 기능을 고도화 할 것

(21)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① 농어업 안전재해보험 등과 같이 농어촌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할 것

②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영향평가,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방안 마련할 것

③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할 것

④ 전통시장 내 불량률이 높은 전기, 가스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22) 쿼터 배정, 지방창업 초기펀드 조성 등 모태펀드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할 것

(23)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등 청년 창업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충할 것

(24) LA, CI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네트워크 강화, 펀드유치 등 글

로벌 창업 성공 촉진 방안 마련할 것

(25)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벤처산업 활성화 위해 지방펀드 조성 방안 마련할 것

(26) 모태펀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방안 마련할 것

(27) 글로벌 청년해외창업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투명한 선정과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할 것

(28) 창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 마련할 것

(29) 벤처창업 지원은 6개 정부부처에서 지원 중이나, 중기청을 중심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30)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홍보 강화 등 전반적인 점검 방안 마련할 것

(31) 창업 초기에 집중된 창업지원 정책을 중간회수시장 등 창업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으로 개선할 방안 마련할 것

(32)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 점검 대책 마련할 것

(33) 정부기관 납품기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원이 단절(피터팬 증후군의 주요원인)되는 현상의 방지 방안 마련할 것

(34) 중견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 허용, 조세 지원 등 중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 마련할 것

(35) 중견기업법 및 타 법령에서 중견기업 범위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할 것

(36) 공공구매제도 내실화 및 이행력 제고

① 나라장터에서 입찰 진행시 공공구매 제도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방안을 조달청과 협의할 것

②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③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위장 중소기업으로 진입하는 경우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퇴출과 더불어 위장 중소기업을 운영한 대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7) 공영홈쇼핑의 낮은 판매수수료는 장기적으로 자본잠식 문제로 이어지므로 현실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

(38) 홈쇼핑 무료방송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판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선정 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

(39) 아임쇼핑 지원 대상으로 창의혁신제품의 비중을 높여 공영홈쇼핑 설립취지를 실현할 것

(40) 아임쇼핑이 당초 설립취지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 이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1) 홈앤쇼핑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2)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의 업체당 지원면적 확대, 매출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3) 운영 성과가 미흡한 중소기업 해외전시판매장에 대하여 복합매장화, 특성화 매장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44)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인정과 관련한 애로 해소를 위해 교육, 컨설팅 및 전담인력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45)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충원률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46)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과 연계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할 것

(47) 기업당 융자 한도 인상, 대출금리 인하, 대출 연장제도 도입, 융자절차 개선 및 정책자금 소통창구 개설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것

(48) 이자보상비율 1이하인 부실,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9) 정부 R&D 과제의 낮은 사업화 성공률, 동일 기업이 수차례 지원받는 사례, R&D 부정사용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철저한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50) 산업부, 미래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R&D 지원과제의 성공 판정 기준을 통일 할 것

(5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의 구매실적 미흡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구매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2) 중소기업협동조합 R&D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재검토할 것

(53) 중소기업 기술보호방안 마련

① 보안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

②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③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단순하게 개편하고, 기술보호 관련 사이트의 운영을 내실화할 것

④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

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조정에 따르지 않는 대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54)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에 따른 무선도청 보안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55) 중소기업 임금향상 대책을 마련하고, 세제지원, 창업정책 등에 대한 정책 홍보를 강화할 것

(56) 내부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및 적극적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57) 경북·전남지역에 지방중기청 지역사무소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울산지방청 신설과 관련하여 수출지원센터 인력을 보완할 것

(58)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자금의 투자결정과정 부적절, 건물관리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중앙회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59)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대출 한도 확대, 대출이자 인하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60) 업종공통R&D 및 단체표준 R&D사업 등에서 연구비 유용이 발생한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중기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3. 특허청

(1) IP-R&D 전략 지원시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지원할 것

(2) 공무원 직무발명 장려를 위한 국유특허 관리 및 활용 촉진사업의 성과지표 부재 개선 및 국유특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3) 지식재산만으로 중소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가치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IP담보대출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4) 지식재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특허거래전문관의 전공을 다양화하고 인력을 확대할 것

(5) 특허괴물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ID社의 운영 정상화 및 기능·수익모델 개선을 추진할 것

(6)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해결을 위해 IP-DESK를 확대 설치하고, 해외지식재산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사업과 IP-DESK 지원사업의 운영주체를 일원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7)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므로 홍보강화 등을 통해 동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것

(8) 위조상품 압수물품을 소각하지 않고, 상표제거 후 사회공헌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9) 특별 사법경찰관의 안전을 위한 안정장비 및 지능화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수사 장비의 보강을 추진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10) 심사품질제고를 위해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할 것

(11) 주요국에 비해 높은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12) 지식재산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대학·공공(연)의 원천특허,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13) 정보화 사업에서 LG CNS 독점문제를 해결하고, 특허정보원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학을 확대할 것

(15) 발명교육센터의 예산확대를 통한 발명교육센터 확충과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

(16) 특허청 직원의 재직 중 산업재산권 등록 금지 이외에, 퇴직 후에도 재직 중 출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마련할 것

4. 한국전력공사

(1) 농업인 소득안정 필요성, 쌀 관세화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 개별 아파트·오피스텔 사례별로 어떤 전기요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한국전력공사가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할 것

(3) 일반 어민이 보유하는 저온저장시설도 어촌계에 가입된 저장시설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

로 검토할 것

(4) 복지대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신청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전력이 보훈처, 행정자치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복지혜택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5) 안전한 송전망 운영을 위하여 과부하 등 국내 전력계통에 광역정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

(6)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① 송전선로 지중화 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재정분담비율을 조정하거나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② 도심지역·학교주변을 경유하는 송전선로는 주민·학생의 생활·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중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7) 당진 9·10호기 건설에 따른 선로보강방안 및 송전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8) 관형지지물(관주송전철탑, 원형송전철탑)의 안전기준·심사기준을 재검토하여 설계·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

(9) 제주-진도 간 선로공사 관련 계약 및 공사비 집행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사를 성실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제주도의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0) 선하지 토지소유주의 소송제기 없이도 토지 소유주가 선하지 과거 사용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 직접활선공법 등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공법을 적용한 발주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이 높은 공법의 사용을 적극 장려할 것

(12)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관련 연료전지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해수온도차 발전 등 발전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전력분야 해외사업 진출 시 한국전력이 중심이 되어 개별 발전공기업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4) 해외 파견 인력의 윤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파견직원에 대한 윤리규정 및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할 것

(15) 한국전력이 보유한 해외자산이 지나치게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16) 입찰계약 관련

① 부당행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민간 기업이 소송제도 및 「국가계약법」상 우회경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② 전자입찰시스템의 비리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전국 사업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③ 한전산업개발, 한전KDN 등 출자회사나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를 지양하고 해당분야에 대한 경쟁입찰을 강화할 것

④ IT관련 상품 구매 시 한전KDN이 중간단계에 개입하여 낮은 가격에 하도급 주는 행태를 근절할 것

5. 한국수력원자력

(1) 사업장별로 발암물질이 포함된 세척제 구매·사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

(2) 「부패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내부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기존 내부신고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3) 공사작업 시 작업지시서와 집행근거를 명확히 하여 하도급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4)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잠수정 등 해양에서의 원전타격에 대한 방어매뉴얼을 수립할 것

(5) 제어밸브 플러그 리콜, 해수냉각계통 역지밸브 이상, 제어봉위치전송기케이블 조립체 오류 등과 관련하여 검증·보고절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철저히 밝힐 것

(6) 원전 해체관련 기술수준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므로, 폐로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장기프로그램을 가동할 것

(7) 방사선 피폭선량 관련

① 한수원 고위직 종사자의 현장점검 업무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②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방사선 건강검진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

(8) 강릉수력발전소에 대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9) 지나친 수의계약으로 계약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쟁입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10)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에 중국과 동시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시 등 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12) 물품·용역 계약 시 과도한 낙찰률을 보이는 계약에 대하여 회사 간 담합여부 뿐만 아니라 한수원 내부거래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6.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1) 사업장별로 발암물질이 포함된 세척제 구매·사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

(2) 「부패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내부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기존 내부신고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3) 공사작업 시 작업지시서와 집행근거를 명확히 하여 하도급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4)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현황과 재무상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부실자회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허위출장계획을 작성하여 조성한 출장비를 공통경비에 집행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

(6) 발주자가 사업자에게 야간작업·돌관작업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여 사업자가 계약에 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7) 통상임금 상승이 발전운전원 겸직 등과 같은 필수유지업무 보직축

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8) 발전소 비계획 정지 발생 시 현장실사 등 검증작업 없이 발전사의 정지원인 통보로 갈음하는 전력거래 절차를 개선할 것

(9)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7. 한국가스공사

(1)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① 투자리스크가 작고 민간기업 동반진출이 가능한 기술연계(EPC) 사업을 확대할 것

② 22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직원을 파견한 것은 10개 사업이며, 파견 복귀 후 약 76%가 관련없는 부서에 배치되어 역량 활용이 어려우므로 인사방식을 개선할 것

③ 이라크 아카스에 1,476억원, 만수리야에 174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웠으나 IS 세력 장악 및 치안문제 등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시 국가위험 평가부문을 무시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국가위험 평가부문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두 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기발주한 투자액 등 투자계획 세부내역을 제출할 것

(2) 천연가스 도입 관련,

④ 중국에 비해 더 많은 LNG를 도입함에도 오히려 LNG도입가격이 더 높은 상황에서 계약 조건에 명시된 가격재협상을 활용하여 도입단가를 낮춘 사례가 2005년 이후 한 번도 없으므로 도입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⑤ 스팟도입으로 인한 가격변동 및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LNG저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가스저장률은 12.1%로, 프랑스 30%, 독일 26%, 미국 19%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LNG 저장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여 반영할 것

⑥ 가스공사의 국내 LNG 도입계약시 약정물량을 구입하지 못한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는데, LNG 복합화력 이용률 저하 등 국내 가스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이므로 제12차 천연가스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장기 공급계약의 가스물량이 남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 통합수급관리체계를 구성할 것

⑦ 구입한 LNG의 이송 중 하역지에서의 재판매 제한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⑧ 최근 5년간 LNG 도입시 감량권을 행사한 것은 2차례에 불과하여 가스가격 하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LNG 도입 물량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⑨ 정부의 가스가격 동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검토 할 것

(3) 도시가스 요금 및 보급 개선

① 산업용 가스요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장애인·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였음에도, 가스요금 총 경감액과 시설별 평균 경감액이 감소하였고, 농어촌 지역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②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공사 자체 공헌사업인 온누리 열효율 개선사업을 통한 지원액은 14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 대비 미미한 수준이므로 지원폭을 확대할 것

③ 가스공사가 가스 주배관을 건설하였으나 도시가스사가 경제성을 이유로 소매 배관망을 건설하지 아니하여 일부지역(거제도)에서

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④ 경북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50% 수준으로 전국 평균 보급률 79.9%보다 매우 낮은 바, 독점 사업자가 영업이익을 투자하지 않고, 정부의 융자도 받지 않고 있으므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검토할 것

⑤ 금호타이어에 대한 해양도시가스사의 용도 오적용으로 가스공사 광주전남본부는 해양도시가스사로부터 가스요금 108억원을 받지 못했으나, 의원실의 가스요금오류내역 자료요청 및 답변 과정에서 이를 고의 누락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⑥ 가스공사가 주배관망의 문제 등의 사유로 발전소에서 요구하는 발전터빈에 필요한 압력보다 낮게 가스를 공급하여 가스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⑦ LH공사의 아산 배방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LNG 공급기지 시설 준공이 가스공사의 귀책사유로 연기됨에 따라 LH공사가 중부도시가스에 공급을 받게 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했음에도 계약서에는 가스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이른바 '갑질'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관리

① 임직원이 협회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항공임 등을 받아 해외출장을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생략하거나,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비즈니스 항공을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② 전직 가스공사 사장의 사례와 같이 LNG 예인선 업체 대표 등으로 낙하산 취업을 하거나, 퇴직자 모임인 'LNG 사우회'가 출자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하고 사우회에 3억 5,000만원을 기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③ 가스공사가 발주한 20여 개 건설사와의 계약이 담합판정을 받아

1,746억원 과징금 결정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특별사면조치로 부정당업체 지정이 해제된 상황이므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차질없이 개발하고 소송을 통해 담합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것

(5) 안전관리, 연구개발 및 기타

① LPG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가스공급 시범사업에 가스공사가 참여하는 방안, 조선산업과 연계하여 LNG 에코십, 벙커링 등의 클러스터 연구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검토하여 보고할 것

② 인천송도지역 LNG 설비 증설을 위한 주민설명회 과정이 미흡하므로 여러차례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것

③ R&D 과제 중 절반이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가스분석기를 5개 부처에서 각각 구매하는 등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④ 지방이전 이후 대구지역에 기여가 미흡하므로, 압축설비 등 주요 시설 발주시 대구시와 협의하는 등 지역협력사업을 강화할 것

⑤ 공정위로부터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부당 감액 6건 9억 3000만 원, 지연보상금 미지급 3건 2억 8000만 원, 계약 보증수수료 20건 2643만 원, 간접비 4건 3923만 원, 총 33건 12억 7885만 원을 국내 중소기업에 미지급한 것을 지적받는 등 이른바 '갑질' 사례를 시정할 것

8. 한국석유공사

(1)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① 하베스트 인수관련, 인수타당성 검토를 석유공사가 직접 수행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지질자원연구원이 지적한 1조 2천억

손실가능성 의견도 무시하였는 바, 석유공사의 회생을 위해 인수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하며 공사 스스로 당시 업무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절차를 검토할 것

② 하베스트는 NARL을 정리하였음에도 공사의 10억 캐나다달러 지급보증, 1억 9000만 캐나다 달러 융자 등 부실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생산 중단 및 은행 채권단의 중도 이탈, 이사회의 디폴트 우려, 투자유치 2건의 무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실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방안 및 손상처리를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할 것

③ 유전개발시 해외기업들은 추정매장량 100% 인정 등 자산 과대평가, 자주개발율이 투자의 결정요인이 되는 것을 경고하는 외부용역결과의 왜곡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투자기준수립과정에서의 외부압력 및 보고서 왜곡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④ 공사의 지원없이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을 중단하고, 다나 등 다른 부실사업에 대한 공사 독자적인 손상처리 및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할 것

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승인이 없었다면 자체 결정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인 출자를 할 이유가 없으며, 당시 석유회사 M&A 추진계획에 부사장 자격으로 결재한 현 사장은 책임을 질 것

⑥ 現 사장이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1월 작성된 '석유회사 M&A 추진계획'에는 인수후보기업에 하베스트가 없었는데, 2009년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인수협상기간이 2개월에 불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3월부터 하베스트 인수 물밑협상을 실시했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것

⑦ 자회사 운영시 2,000만불 이상의 투자는 자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2013년 이후 총 8건의 이사회 중 공사가 참

여한 것은 2건에 불과하여 자회사의 운영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관리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⑧ 해외운영 탐사광구 관련, 관리절차서 등을 운영 중이나, 공사 자체감사결과 절차서가 지켜지지 않으며, 시추추진 기본계획 또는 시추위치 선정 등의 승인절차 없이 시추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⑨ 베트남 11-2광구에서 컨덴세이트 저장시설 임대 계약연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170만불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본사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도 주의에 그쳤으므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⑩ 기능부서에 있는 팀원 1인이 리스크 요인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리스크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설립목적인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충실하도록 사업별 전략을 수립하고, 구조조정, 매각, 청산 등 단계별로 정리할 필요

⑪ 메릴린치, 엑센츄어 등의 자문사 활용 역량이 부족하므로 자문사를 감독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별도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것

⑫ 현재 공사가 보유중인 시추선은 이미 30년을 넘었으므로 시추용 선료 및 시추선 건조에 따른 회수기간을 고려했을 때 추가 시추선 건조를 검토할 것

⑬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 조달시 공기업이 손실을 100% 책임질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⑭ 메릴린치 손자회사인 BGI가 하베스트 매입과정에서 내부정보에 의한 부당거래로 이익을 실현했으므로 이를 미국 증권거래소에 고발해야한다는 국정조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고발을 적극 검토하여 실시할 것

(1) 석유비축사업 관련,

① '04~'05년 약 813만 배럴의 비축유를 판매한 이후 운영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재구매하였어야 하나, 2014년 말 현재 536만배럴만 재구매한 상황이므로 재구매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②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간은 2년, 연장시 6개월로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규정하고 있는데, GS칼텍스에 6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6년 이상 계약을 지속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으므로 개선할 것

③ 여수지역 비축기지 추가건설 과정에서 주민반대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피해발생시 보상에 대한 약속 등을 포함한 설명 노력을 강화할 것

(2) 알뜰주유소 운영 관련,

① 알뜰주유소 중 일반주유소 대비 가격차가 50원 미만인 경우가 절반 이상, 동일가격 또는 비싸게 판매한 경우가 8.9%이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②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ex-oil'로 간판을 변경하고 작년 7월부터 별도입찰을 실시하고 있어 알뜰주유소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므로, 판매물량의 50% 미만을 공급받는 경우 계약서대로 부과금 등의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③ 알뜰주유소가 평균 가격대비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대도시 소재 비중이 20% 수준으로 낮고 셀프주유소 비율이 높은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등 불법행위도 알뜰주유소가 평균에 비해 23.3% 높은 수준이며, 인센티브 감소로 인해 폐업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알뜰주유소의 정상화방안을

강구할 것

④ 알뜰주유소 운영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마진 규모가 79억원에 이르므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감축방안을 마련할 것

(3)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및 경영관련,

① 인건비 인상 등을 이사회 승인없이 집행한 사례, 이사회 개최 당일 안건이 배포되는 사례 등을 볼때 이사회가 감독 및 통제 역할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사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② 공사가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도 임직원 기념품 약 42억원 지출, 실적수당 73.3% 증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157.1% 증가, 사회복지기금 163억원 출연 등 복지혜택 관련 비용지출이 큰 상황이므로 임직원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③ 비위로 파면까지 당한 직원에게 퇴직금까지 주는 현행 규정을 개선할 것

④ 퇴직자 3명이 차린 회사에 150억 일감을 몰아준 사례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입찰기준을 개선·강화할 것

⑤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에 6년간 연평균 308명의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500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지난 해 교육 이수자중 취업한 인력이 작년 4.2%에 불과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한국지역난방공사

(1) 출자회사에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하여 낙하산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 직원채용과정 및 문화재단 기부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으므로, 비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

(3) 향후 대규모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투자 여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당 확대에 따라 투자여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배당수준을 결정할 것

(4) 사업장 규모에 비해 청소 인력이 부족하고 공사의 내부 규정에 청소가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 기간·횟수에 관계없이 재청소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청소용역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5)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GHP)사업은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 기준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며 수도권에는 이미 열공급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급대상지역 기준 위반 여부와 중복투자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할 것

(6) 현행 분리배관시스템에 비해 통합배관시스템이 에너지 절약 효과 및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통합배관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것

(7) 공사가 과다 징수한 열요금 중 미환급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급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10. 대한석탄공사

(1) 몽골 홋고르 탄광사업에 투자한 금액 대비 회수액이 매우 저조하며 사업지역의 도로 등 인프라 부족으로 매각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탄광 매각 및 투자액 회수 대책을 마련할 것

11. 한국광물자원공사

(1) 해외 자산의 매각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므로, 부채감축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

(2)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인해 공사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고 투자액에 대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구조조정 절차와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3) 해외자원개발조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개인사업자를 우대 지원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공률이 낮고 보조금 지급 이후 사후관리도 미흡하므로, 개인사업자를 우대하는 보조금 지원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4) 투자 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리스크와 경제성을 분석·평가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

(5) 개별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① 광물공사가 지급보증을 하여 부담하게 된 쉐릿(Sheritt)사의 차입금을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

② 광물공사가 산토도밍고 동 사업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인 캡스톤사(社)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손실액의 회수대책을 마련할 것

(6) 광물자원공사가 출자한 7개 회사의 재무상황이 심각하므로, 부실투자사업에 대한 정리 등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7) 면접자의 면접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채용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 절차를 확립하고 비리를 근절할 것

(8)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기존의 임금피크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지 않아 임직원에게 추가적으로 6억원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추가 지급분에 대한 환수 조치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조치를 마련할 것

(9)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파수 탐색기를 구매하여 도청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구축한 시스템이 자체 규정에 있는 도청방지시스템의 기본 사양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비리 등에 대해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도청방지시스템을 구축할 것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신입사원 채용 절차 부실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수요자가 직접 자료를 활용·가공할 수 있도록 KOTRA의 정보 제공방식을 개선하고, 신흥국 중심으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무역관 관리 방식을 개선할 것

(3) 지사화사업과 관련하여, 항공우주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소기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4) 지사화사업 실적 산정 기준이 낮아 사업성과가 과대 평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성과 지표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전담직원의 업무부담이 과다하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 역량 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

(5)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관련, 비수도권 지역 기업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실적 산출에 있어 전년 대비 수출감소 여부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정확한 실적이 산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 월드챔프 사업과 관련하여, 부실기업 지원 문제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참가기업의 전년 대비 수출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7) 신용불량의 해외바이어 주선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

(8) 수출실적 감소에 대응하여 무역진흥기관으로서 책임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9) 지역산업육성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지원단, 수출지원데스크의 확대 설치 및 지방지원단 복원 등을 검토할 것

(10) 비관세무역장벽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

(11) 제조업 부문의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가 부진하므로, 투자유치 제도 및 사후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12)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복적인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의 지역편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K-Move 사업 추진에 있어, 개별 국가별 특성 고려 및 사후 관리 등이 부실하므로,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4) 해외 조달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5) 소관 전시회의 민간이양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시 전시디자인개선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

(16) 정상외교 활용포털 및 어플리케이션의 별도 구축 필요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17)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해외 전시회 참가업체의 분쟁 대응 방안 교육을 강화할 것

(18) 수출진흥기관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업 강화 및 업무조정을 검토할 것

(19) 바이코리아 사이트의 계약 성사 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0) 중고기계설비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로봇산업 해외진출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업계의 의견 수렴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수출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22) IT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 소관 기관 변경 등을 검토할 것

13. 한국무역보험공사

(1) 내부고발자 신고시스템을 개선할 것

(2) 무역보험 수요가 있는 지역의 신규 지사 신설을 검토할 것

(3) 공사 내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

(4) 전결권 규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무역보험 지원 시 외압에 의한 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할 것

(6) 보험 현지실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 서류의 위변조 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것

(7) 모뉴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퇴직금 환수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

(8) 모뉴엘 사건과 관련한 면책 결정에 따라 시중 은행의 보증서 취급 기피로 인하여 수출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강화할 것

(9) 경영위원회, 보험인수심사위원회 및 심사실의 안건 심사 기능을 강화할 것

(10) 미회수 채권 규모 축소를 위하여 사전적인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사후적인 추심방식을 개선할 것

(11)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2)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환변동 보험의 가입실적이 저조하므로, 관련 전문인력 확충, 홍보 강화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3) 조선해양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조금융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4) 조선사 등에 대한 R/G 지원 요청의 처리 경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보고할 것

(15) 기금자산운용의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전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6) 단기수출보험의 민간개방에 따라 해외보험사들의 시장독식과 보

험료율 인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보고할 것

(17)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 집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8) 투자위험국 수출확대 지원 시 개별 인수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체계를 구축할 것

(19)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보험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0) 무역보험공사의 해외프로젝트 지원과 관련하여 대출은행이 해외 금융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1) 국내은행이 무역보험을 정담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14. 한국전기안전공사

(1)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관련

① 자가용 전기설비의 구내배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방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할 것

② 아파트(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할 것

(2) 가로등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통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3) 전기공사 현장 작업인력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진국의 장비 수준·안전기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할 것

(4) 정기검사의 업종별 시행주기와 별개로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별도의 검사방법이나 주기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전기안전 119'의 수혜대상을 주거용 전기사용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비상발전기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여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를 지속·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15. 한국가스안전공사

(1) 서민층 LPG 금속배관 교체사업의 금속배관 교체기한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적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특정가스 사용시설 및 냉동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가스안전공사가 검사한 시설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민간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매우 낮아 봐주기 검사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사고예방 효과가 높은 타이머콕의 보급을 확대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타이머콕 보급비용이 안전공사의 보급비용에 비해 과도하므로 폭리 근절을 위해 공사의 보급사업을 확대할 것

(4) 철원 LPG 누출 사고를 비롯하여 집단공급시설 중 아파트 지하매

몰 탱크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가 우려되므로 검사 결과 및 권고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저장소 시설 등 인구밀집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5) 민간 LPG용기 재검사기관 입회자의 비정규직 고용 등 공사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해 재검사기관과 입회인간 유착의혹이 있고, 검사능력 이상의 부실 검사 의혹이 있으므로 불량용기 유통방지 이력관리 시스템 정착, 내압검사설비 표준·인증 제도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할 것

(6) 국토교통부로부터 차량등록정보 이관이 원활하지 않아 의무교육인 LPG 운전자 안전교육 실적이 등록대수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선진국의 사례 및 우리 국민의 LPG 인식도 증가 등을 감안하여 교육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기업체의 가스저장시설이 많은데 안전관리자 배치 및 교육 등의 관리부실이 우려되므로 안전관리자 안전수칙 교육 제도화 등의 체계 수립을 강구할 것

(8) LPG 사고의 90%는 완성·정기검사 의무 적용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나 검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및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

(9) 현재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는 잔류 독성가스를 보다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용처 및 이력추적을 강화할 것

(10) LPG 용기와 같이 고압가스용기에 대해서도 검사원을 파견하는 등의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한국에너지공단

(1) 에너지바우처사업의 대상인 영유아·노년층 등에게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신청주의로 운영되고 있어 수혜대상자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 지원대상자 목록을 작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3) 태양력·풍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등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보급 정책을 추진할 것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관련

① 비태양광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연도별 이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비태양광부문의 의무이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② 의무공급량 중 의무이행 연기할 수 있는 비율이 20%로 축소되어 사업자의 의무공급량 불이행으로 인한 과징금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지나친 과징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③ 2016년부터 태양광, 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시장이 통합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태양광부문에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가 표준 인증 실적이 저조하므로, 서류 제출·연차별 재검증 절차 등을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

(6)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 제품이 1등급 제품보다 판매량이 많고, 5등급 제품의 에너지효율이 개선되지 않는 등 현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분류는 저효율제품에 대한 규제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7) 에너지효율 시험평가를 위해 구입한 전자제품을 시험평가 이후 직원에게 저가에 매각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으므로, 시험제품에 대한 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8) 미화원에 대한 철저한 신상조사, 작업시간 중 잡담금지, 지정장소 외 휴식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지시서는 청소용역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업지시서를 수정할 것

17. 한국전력거래소

(1) 전력거래가격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입력자료 검증절차를 전산화할 것

(2) 기상청과의 긴밀한 협조·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관리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

(3) '15년 상반기까지 현지인력을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것

18. 한국광해관리공단

(1) 전체 폐광산 수질개선사업 대상 광산 중 사업을 실시한 광산 수가 적으며,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수질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20% 수준에 불과하므로, 수질개선사업 투자금액을 확대할 것

(2) 광해관리공단에서 토양오염복원사업 발주를 받은 업체가 동 사업을 턴키(turnkey)로 다른 업체에게 불법 재도급해주는 문제가 있으므로,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토양오염복원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토양이 유실되었으며, 기본적인 비산방지대책도 취하지 않고 석면으로 오염된 토양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등 광해방지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광해방지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복토공법은 폭우 등으로 인하여 토양이 유실되어 오염된 토양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오염토를 제거하고 그 위에 양질의 복토를 하는 환토공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5) 강원랜드를 제외한 광해관리공단의 출자회사가 부채비율이 높고 누적적자가 상당규모 발생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자회사의 재무상황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

(6) 출자회사의 이사회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구성되고 있어 부실이 심각하므로, 출자회사의 경영 개선 계획과 함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할 것

1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 국내여건에 적합한 기술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까지 BAU 대비 37%)의 구체적인 달성 방안을 모색할 것

20. 한국석유관리원

(1) 가짜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노상검사 또는 석유제품 무상분석 서비스 활동의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2) 주간 거래상황 기록 및 제출의무가 영세한 주유소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규제완화 여부를 재검토할 것

(3) 이동실험실 차량 보유대수가 3대에 불과하므로 이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가짜 경유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통량 분석 등을 통한 감시를 강화할 것

(4) 가짜 휘발유에서 가짜 경유·정량 미달 등 가짜석유 관련 불법행위가 지능화하고 있어, 현장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정량미달 판매에 대해 과태료 및 벌칙 등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6) 적발위주 가짜석유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세제개편을 통해 용제에 우선 과세하고 정상 사용에 한해 환급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7) 제한된 단속인력·장비로는 가짜석유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센서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빅데이터를 통한 고도화된

단속 강화체계 도입을 검토할 것

(8) 신규 개발된 주유기 조작방지 기술 및 비노출 차량을 적절히 활용하여 단속 효율성을 제고할 것

(9) 휘발유·경유·등유를 제외한 그밖의 석유제품의 경우 일반대리점의 74%가 판매 물량이 없음에도 매월 보고의무를 두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규제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0) 음성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석유제품 혼합판매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조치를 검토할 것

(11) 안심주유소는 자가폴 주유소만 가입대상으로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정유사 폴 주유소와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가입 주유소는 안심할 수 없는 주유소라는 잘못된 정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우려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12) 알뜰주유소의 가짜 석유 적발건수가 2014년 25곳, 2015년 7월 현재 20곳에 이르고 있어 정부신뢰 저하와 석유유통시장 왜곡이 우려되므로,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 자가폴 주유소가 미가입 주유소보다 불법행위 적발률이 낮으므로 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검토할 것

(14)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 인증 소요기간이 8개월에 이르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3~4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 한빛원전의 중·저준위 방폐물의 방폐장 이송이 지연되고 있는데, 안전성 검증 및 어업보상협의 절차를 완료하여 조속히 이를 처분장으로 이송할 것

22. 한국산업단지공단

(1)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산단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2)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울산·여수 지역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3) 노후산단의 정밀안전진단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4) 화학사고합동방재센터의 지역 편중성 해소를 위하여 미설치 지역에 대한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것

(5) 소상공인 특화업종 집적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6)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성공모델을 도출할 것

(7) 기업성장지원센터 확대 및 관련 예산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8)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사전,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9) 산업단지 내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동대문 패션비즈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할 것

(11) 동반성장지원센터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2) 분양차액 및 임대료 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

(13) 산업단지 내 환경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14) 임대전용산단의 철거이행보증금 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폐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5) 1개 기업 입주산단에 협력업체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6) 노후산단 혁신을 위한 민간투자연계를 강화하고, 산단환경개선펀드의 환수금을 기금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 노후산단특별법의 추진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

(18) 개발 산단의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각 단지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활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19) 주차장 용지가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것

(20) 산업단지 용지 처분제한 완화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완화 조치를 신중히 검토할 것

(21) 산업단지 개발시 실수요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2) 산단 내 환경오염 관련 위반 사고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3) 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4) 비상임이사의 역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원 인사시 지역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5) 키콕스 벤처센터의 매각 여부에 대하여 관련 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대응할 것

(26)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 제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27)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8)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9) 산학연 통합정보망 등 운영이 부실한 웹사이트의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중소기업 맞춤식 글로벌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제의 용역업체인 그린미디어의 자격미달, 국정원 개입 의혹, 사이버 여론조작 등의 의혹이 있는 바,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할 것

(2) '중소기업 맞춤식 글로벌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결과가 부실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선급금 2억 5,900만원을 회수할 것

(3)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의 강제인

증 도입을 검토할 것

(4) K마크 인증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규정을 관리할 것

(5)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출장비 지원을 받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해외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6) 외국 검사장비의 도입과 관련 시스템 습득 및 교육 명목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에 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7) 업무의 보안성 담보를 위해 무선도청 보안 대책을 강구할 것

(8) 장애인 고용의무의 미이행에 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9)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징계처분 절차 관리를 강화할 것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R&D사업을 통해 개발한 모든 기술을 기술은행(NTB)에 등록하고 등록 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기술은행에 등록된 기술의 기업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금융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기술은행에 등록된 기술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약정보 제공 및 기술 이전이 완료된 기술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것

(4) 녹색 기술인증의 녹색기술제품확인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인증혜택의 재검토를 통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R&D 사업 관련 연구비 횡령 등에 따른 제재기간 중 R&D 사업의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6) 기술료의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료 징수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7) R&D사업 제재과제의 환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8) 진흥원 설립초기('09년~'12년) 누락된 성과활용 현황을 보완할 것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 R&D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시장환경 검토 및 연구과제 선정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기술개발 불성실, 사업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R&D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한 지원대상 선정 과정을 개선할 것

(3) 횡령 또는 유용 등에 따른 연구비의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4)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을 위해 감사인력 확대 및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

(5)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제보를 접수하는 즉시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상 집행 정지 조치를 할 것

(6) R&D 사업의 과도한 지역편차 또는 특정지역의 소외현상에 대해 연구 분석 및 시정 조치를 할 것

(7) R&D 관련 등록 장비의 활용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

(8) R&D사업 불성실에 따른 중단과제의 사업비 환수율 제고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한 기술료 징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하며, 사업 수행기관의 재무상태 등 사업수행 가능성을 평가할 것

(9) 기술이전 사업을 중복적으로 신청하는 등 R&D 사업 수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R&D 전담기관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것

(10) R&D 자금의 유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당초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26. 한국디자인진흥원

(1)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 후 사업화 등에 대한 지원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2)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디자인표준계약서의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3)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활성화하고 디자인권 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특허청과 검토할 것

(4) 사회 통합과 디자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유니버셜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5) 국내 중소기업의 상품을 해외에서 전시할 경우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6) GD마크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7. 한국세라믹기술원

(1) 직무발명을 제3자 명의로 특허 출원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체 연구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2)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비정규직 비율이 타 공공기관보다 매우 높으므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4) 미세전자제어기술(MEMS)은 사물 인터넷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5) 지방이전 관련

①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지방이전한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② 지방으로 이전한 신청사의 무선도청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것

(6) 이공계 미취업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8. 한국전력기술

(1) 정원을 초과하는 책임급 인사 등에 대하여 건전한 조직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2) 해외 출장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

(3)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용역 발주나 기념품 구입 등의 예산지출행위를 근절할 것

29. 한국가스기술공사

(1) 2010년에서 2014년까지 8건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자 모두 경징계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시험성적서 위·변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2)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은 비전문가 임원을 선임하지 않아야 하나, 공사를 포함한 5개 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37%만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3) 8대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확보에 힘쓰겠다는 공사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및 인력 대비 R&D 투자는 0.9%, 연구인력은 1.3%로 다른 연구기관이나 공사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30. 한전KDN

(1) 전자입찰시스템 비리사건 관련하여 다른 유사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

(2) 한전·발전사의 IT 관련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사보다 낮은 단가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어 이익을 취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

31. 한전KPS

(1) 위탁업체를 통해서 계약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인상·상여금 정상화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

(2) 안전관리 분야에서 종사하는 인력은 한전KPS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3) 한전KPS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에 과도한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시정할 것

32. 한전원자력연료

(1) 방사선 안전관리

① 생산부서의 직원들이 관리수치를 초과해 피폭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조치를 실시할 필요

② 실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전환조치·임시조치 등을 실시하기 보

다는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33. 기초전력연구원

(1) (산업부) 연구원장 인사와 관련한 급여지급문제, 연구동 기부채납 문제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34. 강원랜드

(1) 계약서 없이 용역 계약을 발주하는 등 강원랜드 운영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으므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헌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2) 강원랜드 직원의 횡령액이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횡령액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하므로, 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감찰 및 징계 등을 강화하고 미회수액에 대한 회수 대책 및 회수 실적을 보고할 것

(3) 폐광지역 이외의 지역에 카지노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복합리조트 사업' 계획이 포함된 강원랜드의 중장기 경영전략 보고서는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인 폐광지역 진흥 및 경제 활성화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복합리조트 사업 등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정하여 보고할 것

(4) 리조트시설 이용포인트(콤프)를 지역 가맹점에서 허위 매출을 만들어 현금화하는 불법 거래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불법거래사이트를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는 등 불법거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 방안을 마련할 것

(5) 고객의 평균 베팅액 측정하여 리조트시설 이용포인트(콤프)를 적립하는 과정이 객관적 기준이 아닌 직원의 목측(目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직원이 포인트를 부정 적립하고 고객의 법정 한도금액 초과베팅을 묵인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베팅액과 게임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 강원랜드 3개 자회사의 누적 적자가 640억원에 달하고, 동강시스타, 대천리조트 등 5개 출자회사의 누적적자가 620억원에 이르는 등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부실이 심각하므로,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7) 직원 유니폼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유명인을 제안설명회(PT) 발표자로 내세웠는데, 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발표자를 해당 업체 임직원으로 제한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하도급을 통한 마케팅비 부담 전가를 방지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유명인 고용비용 등 마케팅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향후 유명인 등을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입찰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입찰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최근 3년간 장애인 직원 고용실적이 법정고용인원 수준에 미달하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 위반으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총 6억 5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의무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

하고, 장애인 고용실적을 보고할 것

(9) 강원랜드 비정규직 직원 중 50% 이상이 폐광지역 주민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저조하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을 제고하고, 전환실적을 보고할 것

(10) 컨벤션호텔 건축사업과 카지노 환경 개선 공사 사업에 각각 1300억원, 71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실제 폐광지역 경제와 주민생활에 기여한 금액은 157억원에 불과하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주민생활 수준 제고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므로, 투자사업을 폐광지역 경제진흥과 지역균형 발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1) 상동테마파크사업은 수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위탁 운영을 철회하는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많아 사업을 종료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 종료 계획 및 경과를 보고할 것

(12) 강원랜드가 관광진흥기금 등에 납부한 국세가 폐광지역에 납부하는 지방세보다 더 많아 강원랜드의 설립취지인 폐광지역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광진흥기금 등을 폐광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 강원랜드 도박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받은 도박중독자 등에 대한 카지노 출입 기록 관리, 출입 제한 조치 강화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14) 영업장 내에 설치한 현금인출기에서 강원랜드 이용객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도박을 하는 등 건전한 카지노 문화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사채업자의 활동 차단, 카지노 내 현금인출기의 현금서비스 기능 차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35.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 對일본 수출비중 감소 등 교역환경이 변화하였고 재단 이사진이 주로 대기업 소속이어서 중소기업 지원이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재단의 사업내용 및 이사진 구성을 재검토하고 재편 방안을 제출할 것

36. 전략물자관리원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

3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 전임이사장의 부적절한 업무집행(출장비, 강의료, 용역발주 등)이 정부출연금의 유용·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를 검토할 것

3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 국내 로봇산업의 발전 및 지역로봇산업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로봇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할 것

(2) 교구용 로봇 및 중소제조로봇 보급이 제작 업체에 대한 특혜로 이

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에 근거한 무선도청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

(4)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할 것

39.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1) 법인카드 사용 시 그 집행내역 및 사용일자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40. 중소기업진흥공단

(1) 정책자금 금리 인하, 기업당 정책자금 한도 확대, 대출연장제도 도입, 현장 소통창구 개설 등 정책자금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투융자복합금융사업(이익공유형 대출)의 이자부담 최대한도를 완화할 것

(3) 신입직원채용 인사비리 건과 관련하여 취업 청탁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할 것

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소상공인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온누리상품권 중에서 유효기간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3) 전통시장 애플리케이션 “매력넘치는 전통시장” 기능을 고도화 할 것

(4) 소상공인방송 시청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5)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

(6) 조사연구 등 조직의 정책기능을 강화할 것

4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국가 R&D 사업 참여제한자에 대한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선정, R&D 성과평가 시 등급 오류 등 업무처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2) 기술개발 신청과제의 중복성 검증체계를 강화할 것

4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 미환급 재보증료에 대한 환급 방안 개선책을 마련할 것

44. 창업진흥원

(1) 창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 마련할 것

45.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1) 운용사 선정과정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2)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벤처 활성화를 위해 지방펀드 조성 방안 마련할 것

46. 중소기업유통센터

(1) 행복한 백화점의 정책매장 매출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2)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3) 중소기업 홍보 지원사업의 지원업체 선정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47. 중소기업연구원

(1) 탈북기업인 지원, 통일대비 사업 등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추진

을 재검토 할 것

(2)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 평가 및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연구원의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48. 한국발명진흥회

(1) 여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소위 “비행기깡”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전문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3) 컨설턴트 채용 부적정, 센터장 겸직금지, 국고보조금 과다집행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49. 한국특허정보원

(1) 과다한 비정규직 인력 운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2) 특허넷 운영사업의 이관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

Ⅶ. 특기사항

□ 위원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현황

위 원	발간 종수	자 료 집(자료집명)
김한표 의원	2	◦「친환경선박(에코쉽), 대한민국의 미래다!」 ◦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
정수성 위원	4	◦산업통상자원부 고용휴직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서민희망! 에너지요금 안정에서 시작된다 (지역공급업체별 도시가스산업현황)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현황 및 과제 (전통시장 지원 패러다임 변화해야)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과 검토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조경태위원	8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청년창업가를 위한 판로개척 지원현황과 개선방안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제언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방안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활성화를 위한제언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특허지원정책 현황과 대책
박완주 위원	2	◦ 300만 농민의 염원,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활동백서 ◦ 2015 KTL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의혹 자료집
백재현 위원	5	◦정부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에너지 고이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실태 ◦메가 FTA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중소기업 표준특허 창출 역량의 근본적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과 파이로프로세싱 ◦산업단지 50년, 시대별 산업 정책의 변천과정과 산업단지 관련 법·제도의 변화

위 원	발간 종수	자 료 집(자료집명)
이원욱 위원	6	◦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현황과 과제 ◦ 수출신흥시장 현황과 무역보험지원 과제 ◦ 세계 수소산업 현황과 정책 과제 ◦ 중견기업특별법 제정 후 중견기업 정책과제 ◦ 변리사제도 현황과 FTA대응 과제 ◦ 작지만 강한 전지, 슈퍼커패시터
전순옥 위원	2	◦ 도시형 소공인 비전 2030 ◦ MB 자원외교 실태 보고서 - 국민혈세 26조는 다 어디로 갔을까
부좌현 위원	8	◦ 발전소 석탄회 재활용 활성화 방안 ◦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연구 ◦ 자원재활용 업사이클링 산업 활성화 방안 ◦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활성화 방안 ◦ 공공조달시장 위장중소기업 참여 방지 방안 ◦ 소상공인 해외쇼핑몰 진출 지원 방안 ◦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 향토자원 권리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전정희 위원	7	◦ 경제급전, 전력시장 그리고 공정성 ◦ 6 , 7차 전력수급계획 설비예비율, OECD 주요국가의 전력 예비율 전망 ◦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 전기, 가스 안전관리 실태보고서 ◦ 산업단지 노후설비 교체 등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고찰 ◦ K-POP 콘서트 연계,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 해외 정책매장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주승용 위원	3	◦ 골목상권 보호위해 사업조정제도 강화해야(15.9.14) ◦ 실체 없는 스마트그리드 사업 계속해야 하나?(15.9.17) ◦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여론조사(15.10.8)
김제남 위원	2	◦ 핵발전소 해체 비용 적립 및 관리 방안 쟁점과 과제 ◦ 혈세탕진,해외 자원개발 사업 규명을 위한 활동 백서